

2015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국토교통부 소관)

2016. 6.

대한민국정부

- 목 차 -

1. 국토교통부 및 지방국토관리청	1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69
3. 새만금개발청	73
4. 공공기관	81
① 한국토지주택공사	83
② 한국수자원공사	111
③ 한국도로공사	129
④ 한국철도공사	149
⑤ 인천국제공항공사	157
⑥ 한국공항공사	171
⑦ 한국감정원	183
⑧ 주택도시보증공사	191
⑨ 교통안전공단	201
⑩ 한국철도시설공단	213
⑪ 한국시설안전공단	225
⑫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37

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43
⑭ 한국국토정보공사	255
⑮ 주택관리공단(주)	259
⑯ (주)한국건설관리공사	263
⑰ (주)위터웨이플러스	267
⑱ 코레일네트웍스(주)	273
⑲ (주)해울	277
5. 지방자치단체	281
① 서울특별시	283
② 부산광역시	321
③ 경기도	349
④ 전라북도	375

국토교통부 및 지방국토관리청

공백

□ 국토교통부 및 지방국토관리청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기획조정실	1. 산하기관의 임금 피크제 추진현황을 점검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부-산하기관 공동협의회 개최 (기조실장 주재, '15.7.31, 8.21, 9.18) ○ 산하 기관 도입 완료(24개, '15.10.30)
기획조정실	2.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의 사이버보안 강화대책을 모색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및 인력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 사이버보안 총괄·관리를 위한 '정보보호담당관' 조직 신설('15.11월, 8명) - 산하기관에서 25명 정보보안 전담인력 확보('16.3월) ○ 국토교통 정보보안 강화 방안 마련('15.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반시설 관리체계 마련 및 최신 사이버 공격 탐지 대응체계 강화 ○ 산하기관 대상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점검회의('16.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시스템 중점점검, 인력·조직·예산 확보 요청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신 사이버 공격탐지 대응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관제시스템 확대구축('16.7월), 망분리 확대 추진('16.6월) ○ 정보시스템 대상 정보보안 활동 지속 실시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기획조정실	3. 무보직 대기발령지에 대한 오지급수당을 전액 환수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년 안행부 인사감사시 지적된 과오지급수당(12명, 1,719,750원)에 대해서는 감사 직후 전액 환수 조치
기획조정실	4.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비상임이사에 전문성 있는 인사가 임명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임원추천족, 공공기관운영족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임명되도록 관리하겠음
기획조정실	5. 부채가 많은 산하기관의 과도한 성과급 지급을 제한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확정('15.12.18, 공공기관운영위원회) -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한도 규정 * 공기업: 월기본급의 250~300% 이내 * 준정부: 기본월봉의 100% 이내
기획조정실	6. 산하기관의 청년채용 의무 이행을 철저히 지도· 감독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 전파('16.3.4, 창조행정담당관-785) - 신규채용 규모 확대 등 청년의무고용 비율 3%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국토도시실	7. 제주 항공우주박물관 적자 문제해결 등 운영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DC는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박물관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 발주, 마케팅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 추진 중 * '15년 관람객수 265,349명 (전년대비 50.4% 증가)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DC가 박물관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국토도시실	8.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완화(예:20%→40%)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계획법 개정('15.8), 시행령 개정('16.1)을 통해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거나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자연녹지지역 건폐율을 20→30%까지 완화
국토도시실	9. 저소득층의 소득 안정을 위해 고물상의 입지완화를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의견 수렴('15.2), 현장방문(15.3), 환경부 논의('15.4) 등을 실시하였으나 부작용 등이 우려되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음, 악취, 미관저해 등으로 주거환경 악화 등이 우려되는 측면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환경 보호 측면,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환경부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 검토
국토도시실	10. 준공 후 30년 이상 된 택지지구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현재에도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통해 개발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사항에 대해 유권해석('15.4.6)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토도시실	11.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 확대 필요성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전관리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편입 비율 확대(최대 20% → 5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6.5.17)
국토도시실	12. 개발제한구역 물건적치 규정을 신축성 있게 운영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에 공문 시달('16.6.16) - 개발제한구역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법령을 운영하도록 협조 요청
국토도시실	13.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만㎡ 해제권한의 지자체 위임을 위한 법률 및 하위법령, 지침 개정 완료 - 개발제한구역법 개정('15.12월) - 시행령 개정('16.3.30) - 지침 개정('16.3.30)
국토도시실	1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조속한 해소를 위하여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계획법 개정('15.8), 을 통해 도시군관리계획 정비의무화, 해제신청제도입 - 설치가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는 등 도시군관리계획을 16년말까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함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제신청제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 ('16.12. 개정완료) ○ 해제추진상황 주기적 지자체모니터링
국토도시실	15. 건축허가시 수도법상 변경수량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절차를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개정('16.5.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허가시 「수도법」 제15조의 절수설비 설치 규정 적합여부 확인
국토도시실	16. 내진설계 의무화 전에 건축된 건축물에 대한 다각적인 내진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개축, 대수선시 내진설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진설계 의무화 이전 건축물 96만동 중 내진대상확대('15.9) 이후 매년 3.1만동이 내진보강 등으로 해소 ○ 500㎡미만의 1·2층 건축물의 내진보강시 지방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축10%, 대수선50% - (취득세1회, 재산세 5년간)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과적인 보강 기술 개발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진대응 구조안전성 향상기술 R&D('13~'17) 통해 경제적인 보강기술 개발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진설계 의무화 이전 건축물 내진보강시 건폐율, 용적률 등 인센티브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개정 ○ 건축물대장에 내진성능 확보여부를 표시하여 구조안전성 사전파악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대장규칙」 개정
국토도시실	17. 부실 내화충전재 관련 현장모니터링, 제도개선 등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건축안전 모니터링 추진('15.6~'1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공사장 30개소 불시점검 * 부적합한 자재·시공 현장(9개소)은 재시공 조치 ○ 건축법 개정 등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유통업자에 대한 의무 부여 및 처벌규정, 제조·유통현장 점검근거 마련 * 건축법제24조의2, 제106조, 제111조, 제113조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차 건축안전 모니터링 추진('16.7~'1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공사장·제조업체·유통장소 등 30개소 이상 불시점검 ○ 건축자재 제조현장, 유통현장 점검의 기준과 세부절차 규정을 위한 하위 법령 개정(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토도시실	18. 방치 건축물 현황조사 및 성공사례를 분석하고, 유형별 정비체계를 구체화 하는 매뉴얼 등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기본계획 마련”을 추진 중으로 금년 8월 중 완료할 계획 - 국내 방치건축물 정비사례는 부재하여 국토부 주도로 지자체 및 LH와 협력하여 선도사업 4곳* 추진 중 <p>* 과천 의료시설, 영천시 예술대학, 원주 공동주택, 순천시 의료시설</p>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태조사 및 정비기본계획을 완료(8월) 하고 지자체 시달 ○ 선도사업을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추진 하고 연내 정비사업계획 수립
국토도시실	19. 아파트 화재대비 시설 현황, 아파트 대피시설 관련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내용 및 결과, 아파트 화재 현황, 아파트 문주 관련 통계 현황 등을 확인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피시설(화재대피함) 심의 내용 및 통계는 국정감사 당시 기답변하였음 - 화재대피함 심의 결과 그 면적이 협소 하고 대피함의 내화·차연성능 검토 불가 - 화재 관련 현황통계는 국민안전처 소관 으로 사료되며, - 높이 4m 미만의 문주가 설치된 아파트 단지는 전국 132개로 전체 2,108개 단지의 6.26% 수준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토도시실	20.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하여 화재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벽에 난연성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대상 확대(30층→6층) ○ 스프링클로 미설치시 인접대지와 이격해야 하는 대상 확대(상업지역 건축물 추가) ○ 필로티에서의 용이한 피난을 위하여 관련 기준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로티 천정·벽체 부분에 난연성 마감재료 의무화 - 대피통로에 보호말뚝 등을 설치
주택토지실	21. 동탄2지구 백화점 사업자 선정과정이 적절하였는지 조사하고, LH의 사업자 공모절차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여 사후 보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된 사업자는 토지가격평가에서는 점수가 낮으나 사업계획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된 것으로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는 사전에 공고된 공모지침서 평가기준에 따른 것임 ○ LH에서 「공모형 심사제도 개선방안(‘15.10)」 마련하고 의원실 등에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운영메뉴얼 수립, 사전심의제도 신설, 주요심사 본사수행 등 심사 프로세스 개선 - 용지매각형 심사는 내부위원 배제, 공모형 심사는 공사업무 연관도를 감안하여 내부위원 비율 축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위원의 전문성, 청렴도를 평가하는 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구체적인 심사 기준 제시를 위한 심사 가이드라인 수립
주택 토지실	22. 정부의 전세가통계는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한 서울시 전세가통계와 체감상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하여 보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전세가통계와 서울시 전세가 통계의 차이 등에 대해 의원실에 보고·설명 * '15.10월 의원실 방문 설명(한국감정원)
주택 토지실	23. 고액 월세자료 국세청 통보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자료 제공 중 - 국세청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4.2.21)에 따라 국세청에 매년 3.31일까지 전·월세확정일자 신고자료 제공 중
주택 토지실	24. 전세깡패, 무피투자 등 주택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의 분양(공급)계약까지 신고대상으로 확대 - 현재 기존 부동산 및 주택분양권 전매만 신고대상이나, 분양(공급)계약과 주택외 분양권 전매까지 신고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신고된 내역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및 조사를 실시하여 부동산시장질서 확립 토대 마련 ※ (현행) 기존부동산, 주택분양권 → (제정) 기존 부동산, 부동산분양권 + 분양계약 *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제정('17.1.20,시행)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검증 및 조사 주기를 단축(분기별→매월) - 매월 1,000여 건 이상 실시중(5회 : 2.1, 2.26, 3.29, 5.2, 5.30) - 신도시·혁신도시 등 이슈지역 및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상시모니터링 및 지자체에 즉시 조사 통보
주택 토지실	25. 불법 과다청약자 적발을 위한 실태조사 및 청약 질서 확립 노력을 강화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 현황 자료 분석을 통해 위장전입 등 주택공급질서 교란 행위 의심자 18명에 대해 경찰청 수사의뢰('15.9.30) ○ 위장전입 등 주택공급질서 교란 행위 시형사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될 수 있음을 청약 시스템에 노출하여 불법 사전 예방 추진(청약시스템 개선, '15.10.19) ○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에 “청약통장 불법거래, 위장전입 등 주택공급질서 교란” 시 형사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됨을 적시(지자체 공문 시행, '15.12.7)
주택 토지실	26. 공공임대리츠의 사업 추진시 중소기업제품 사용 확대방안 마련과 이행실태를 관리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임대리츠 사업관련 중소기업제품 구매지원 업무협약」을 체결('15.12.24)하여 중소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수립함 * 협약당사자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토지주택공사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의무화 * 공공임대리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가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품질 미흡 또는 납기지연시에는 예외) - 구매단가 보장 * 시공사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시 발주자와 계약한 도급단가 이상으로 구매토록 규정 - 납품대금 현금지급 * 해당 기성수령 후 30일 이내 현금으로 대금 지급 의무화 ○ 공공임대리츠 공사도급계약조건 개정('16.2) - 협약내용을 공사도급계약조건에 반영하여 실행력 담보 * 적용기준: 신규 영업인가를 받는 공공임대리츠 공사부터 적용
주택 토지실	27. LH임대주택 관리업무의 민간개방과 관련하여 LH공사와 주택관리공단의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H-공단(주) 상생 워크숍 개최 - 1차 워크숍('16.2.18~19, 대전LH연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위탁 대비 공단(주)의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안 논의, 외부위탁 관련 대책 논의 - 2차 워크숍('16.5.24~25, 대전LH연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확립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주택 토지실	28. 농어촌지역 최저주거 기준 미달 노인 및 독거노인 가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집중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4.28대책) 발표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를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기준에 포함하여 주거지원이 시급한 가구에 집중 지원('16.하) * '17년 매입·전세임대 본격 공급(입주) → 영구·국민임대('18년)로 단계적 확대 ○ 또한, 주거급여를 통해 노후 주택에 대한 개량사업을 추진 중이며, - 특히 자가가구 거주 고령자(만65세이상)에게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지급 범위 내에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경보수(350만원), 중보수(650만원), 대보수(950만원) < 향후 추진계획 > ○ 종합대책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기준 변경('16.12) ○ 고령자 주거환경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15.7.~)
주택 토지실	29.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서민주거안정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서민주거비 절감 대책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치실적 > ○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 발표('16.4.28) - 행복주택·뉴스테이 공급물량을 2017년까지 30만호로 확대 * 행복주택 1만호 확대(14만→15만), 뉴스테이 2만호 확대(13만→15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주기별 특화된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저소득층) 전세임대 공급 1만호 확대(3.1만→4.1만) * (청년층) 청년전세임대 및 창업지원주택 도입 * (신혼부부)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도입 * (노년층) 공공실버주택 공급 확대(700호↑, 총 20천호) - 전월세 등 주거비 지원 강화 *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0.2%p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금리 최저 1.6%로 인하
주택토지실	30. 오피스텔, 고시원 등 준주택에 거주하는 1~2인 가구 등 임차인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강화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H, 지자체 등이 노후주택을 직접 매입한 후 리모델링하여 1~2인 가구에 임대주택으로 공급('16년 업무계획) - 오피스텔, 기숙사 등을 소형 임대주택으로 활용가능토록 공공준주택 세부기준 마련('16.12) ○ 급여를 수급받는 최저소득계층 중 소득 대비 임차료가 과도한 가구에 대해 매입·전세임대 우선 입주 지원('16.5)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을 우선 지원('16.4.28 경제관계장관회의)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H 등 리모델링 매입임대 공급 및 공공준주택 세부기준 마련('16.12) ○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개선('16.10)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 토지실	31.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업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정족수(구성원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추진중 <p>* '16.4.1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p>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16.8.12
주택 토지실	32.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법제화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감사 종료기한 특정(1.1~10.31)에 따른 회계감사 쏠림현상, 감사결과 활용방법 미비 등 문제점 개선 사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에 반영하여 추진중 - 외부회계감사 대상을 명확화(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주식) - 회계감사 수감기간을 회계연도 종료일 부터 7개월 이내로 명시 -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기준 제정 추진 등 <p>* '16.4.1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p>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16.8.12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 토지실	33. 소형아파트의 에어컨 실외기 외부설치에 대한 입주민 안전과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완화방안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과 직결된 사항으로 실외기 설치에 관한 현행 건설기준을 유지 - 실외기를 외부에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설치하더라도, 설치·유지관리 과정에서 추락사고 등의 위험은 여전 * 태풍으로 실외기 추락('15.8), 에어컨 수리 중 기사 추락('15.7), 이사 중 실외기 추락('15.5) - 주택규모(소형·대형), 공급방식(임대·분양)에 따라 위험수준의 차이가 없으므로 별도 기준을 두는 것은 신중한 검토 필요 - 다만, 외부에 노출되더라도 발코니 등 세대 면적에 포함되는 공간에 적정 안전시설을 갖추어 설치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 중
주택 토지실	34. 국무조정실과 협의결과에 따라 불박이가구 유해물질 시험방법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시개정을 통해 대형챔버법 적용방법 개선('15.12.30) - 주택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형챔버법 표준룸 세분화* * 전용면적 85㎡ 이하 : 40㎡ / 85㎡ 초과 : 50㎡ ※ 환경부에서 체적환산을 통해 불박이가구 완제품의 오염물질 측정이 가능한 새로운 소형챔버법 마련중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의 새로운 소형챔버법(KS)을반영,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개정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토지실	35.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주택 발주공사에 대한 중소기업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15.12) -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PQ) 시 '지원서비스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을 신설 - 기업신뢰도(경영상태)를 신용평가 등급 간 평가 배점 격차*를 축소 <p>* (현행) 신용등급별로 0~15점 부여 (개정) 신용등급별로 11~15점 부여</p>
주택토지실	36. 건설사들이 매몰비용 보전을 위하여 뉴타운·재개발 지역 주민들의 재산 압류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손비처리 등을 적극 독려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금처리 관련 홍보실적 - 정비사업 발전포럼('14.1), 손금처리 협조요청 공문발송(한국주택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14.7), 주택업계 간담회 개최('15.5), 주택협회 법령제도 설명회('16.4) 등
주택토지실	37. 성남 은행2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가옥 조사('14.11~'15.12) - 시공하자 총 284건, 간접피해 총84건 ○ 피해가옥 보수시행('15.09~) - 시공하자보수 275건 완료(96.8%) - 간접피해보상 37건 완료(44.0%)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H에 시공중 간접적으로 발생된 피해에 대하여 피해가옥과 조속히 협의하도록 독려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 토지실	38. 판교의 중동1 재개발구역 아주단지 3500세대 중 일부에 대한 LH 공가관리비 주민부담 문제를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연에 따라 발생한 임대주택 관리비 부담문제는 1차적으로 성남시, LH, 주민간의 문제로 협의 추진경과 등을 모니터링 실시 - LH는 총회의결로 결정된 공가관리비용은 사업시행에 따라 발생한 비용으로 주민이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 * 순환용주택 공급을 사업시행과정으로 보아 순환용주택에서 발생하는 공가관리비 등을 정비사업비에 포함(총회의결 '14.12.14) - 주민합의가 곤란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 법원 판결 등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최종 결정 예정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경과 등을 모니터링 실시
주택 토지실	39.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주택사업의 사업성이 낮으므로 세제 혜택 등의 추가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신청 모집 결과('15.11.6) 선정물량인 80호 기준 4.47: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2차 시범 사업 320호 접수 중('16.5.30~) - 집주인 신청방식과 지자체 제안방식 등 사업방식 다양화 ○ 사업성 제고를 위해 사업비 추가 대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준비 중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최대 2억 용자 지원 외 추가 2억 용자 지원 -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추가 용자 지원 예정(6월 중) ○ 사업효과 및 토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관련 사업에 대한 주차장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 중 * 소규모정비법(가칭)을 마련하여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형태의 주택에 대한 주차장 규제 완화 추진
주택 토지실	40.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특별관리지역 지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주민 불이익(건강보험료 지원 중단, 재산세 경감 중단 등)에 대한 보완 조치를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해제로 건보료 지원*(50%) 중단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복지법」 특례로 準농어촌 지역(GB, 해제 취락 주변이 GB인 농경지, 미보상 공공주택 지구 등)은 건보료 50% 지원 중(복지부22% 경감, 농식품부 28% 지원) - 이언주 의원 발의 「농어촌복지법」 개정안 농식품부, 복지부와 협의하여 국회 통과('15.12.31) ○ 지구해제로 재산세 분리과세→종합과세 전환에 따른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시행령에 의거 공공사업 지구내 편입된 토지(임야, 전, 답)은 수용재결시까지 분리와세 적용 - 행자부와 협의하여 특별관리지역 해제시까지 계속 분리과세토록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완료('15.12.31 공포, '15.4.30 소급적용)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 토지실	41. 공공임대주택 미착공 해소 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착공 물량 41.3만호(‘14년말 기준) 중 ‘15년말 현재 15.5만호* 해소하여 잔여 미착공 물량은 25.8만호임 * (‘14년) 6.5만호, (‘15년) 9만호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여 미착공물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착공을 추진하고 행복주택 및 리츠 등 새로운 공공주택 유형 활용 등 미착공 물량 적극 해소 추진 - ‘16년에도 6.9만호 해소 계획
주택 토지실	42. 지역주택조합 설립과정 에서 조합원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조합제도 개선(「주택법」 개정, 법률 제13805호, ‘16.1.19. 공포, ‘16.8.12. 시행) - 무자격 업무대행사의 조합업무대행 방지 * 업무대행자 자격을 주택건설 등록사업자, 중개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으로 한정하고, 무자격자 처벌규정 신설(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 조합사업추진 관련 정보공개 범위 확대 * 공개의무대상을 조합임원 외에 설립발기인으로 확대, 의무위반자 처벌규정 신설(2년 이하 징역 / 2천만원 이하 벌금) - 조합임원 결격사유 명문화 등 * (임원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 시공사 또는 업무대행사 임직원 등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 토지실	43. 5년 만에 분양전환되는 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 토지 공급가격 및 세제 혜택 등 각종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확정분양가 등을 도입하여 실질적으로 일반 분양아파트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사업자 부도시 임차인이 기납부한 계약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등 임차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자체가 확정분양가 계약 금지를 부관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하도록 요청('15.10.29, '16.3.17 공문 시행) ○ 지자체 협조 요청 및 관련 협회를 통한 계도 지속('16.3~)
주택 토지실	44.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16.2.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개정내용) 주거환경개선사업 용도 지역을 준주거까지 상향, 정비사업을 통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 지원 등 - 인천 십정2('15년), 인천 송림초교 주변('16년) 2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도입하여 추진중 ○ 사업성 개선을 위해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16.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시·도지시가 정함
주택 토지실	45. 부동산 실거래 가격 허위신고에 대하여 수사 단속 및 처벌기준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검증 및 조사 주기를 단축(분기별→매월)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1,000여 건 이상 실시중(5회 : 2.1, 2.26, 3.29, 5.2, 5.30) - 신도시·혁신도시 등 이슈지역 및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상시모니터링 및 지자체에 즉시 조사 통보 ○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시 과태료 처분 기준 강화 - 취득세 3배 이하 → 취득가액 5% 이하로 강화 *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제정(‘17.1.20,시행) ○ 허위신고 자진신고자에 대한 리니언시제도 - 부동산 실거래 성실신고 유도 및 허위 신고 적발 강화 *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제정(‘17.1.20,시행)
주택 토지실	46. 토지수용권 남용에 따른 국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수용 절차 등 관련 제도의 보완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공익사업도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허가, 승인 등이 있기 이전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법률 개정(‘15.12.29)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 토지실	47. 한국감정원의 공익적 역할 및 심판기능을 강화하고, 감정평가 타당성조사에 대한 권한 및 민간 감정평가에 대한 감독과 조치요구 권한을 확대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원의 공적 역할 강화 등을 위해 「한국감정원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정 법에서 감정원의 공공적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 (목적) 부동산의 가격 공시 및 통계·정보 관리 업무와 부동산 시장정책 지원 등을 위한 조사·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에 이바지 - 공익적 역할, 정부의 심판지원기능 등을 업무범위에 포함 * (주요업무) ①부동산 가격 공시, ②부동산 시장동향 통계 조사·관리, ③부동산 시장 적정성에 대한 조사·관리, ④정부정책 지원 및 부동산 정보의 제공·자문 ○ 감정평가 표본조사를 확대(감정원 수행) 하는 등 평가 적정성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38건('13) → 853건('14) → 1,080건('15)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정 법 시행일(9.1)에 맞춰 시행령 제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츠검사 지원, 도시정비사업 관리처분 계획 타당성 검증 등 부동산 시장 적정성을 제고하는 업무 추가 규정 예정
주택 토지실	48. 서울의료원 부지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의료원부지 감정평가서에 대한 타당성조사 착수('16.1)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감정평가협회에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감정평가 내용분석’ 지시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상반기중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
주택토지실	49.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츠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16.2.23) - 공모·상장리츠 활성화, 리츠 규제 개선, 리츠 인식제고 및 건전성 강화 등
건설정책국	50. 감리 대상 및 감리비 지출구조 개선 등 감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사업관리용역 비용 지출구조 개선에 대하여 기재부와 협의 중 * 예산편성지침 상 건설사업관리용역 대가산정 방식인 공사비요율 방식을 실비정액 가산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 협의(’15.3~)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원화 되어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 대가산정방식에 대해 기재부와 지속 협의 *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과 예산 편성 지침간 건설사업관리비 산정기준 단일화 협의(’16.12)
건설정책국	51. 입찰 담합, 부실 시공 등 건설 관련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및 양벌규정을 정비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담합 부정행위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건산법 제95조 규정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 * ‘16.2.3.공포, ’16.8.4.시행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거래법의 경우 입찰담합 개인 벌칙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 - 입찰담합 등 법 위반행위자의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 기시행중 (법 제98조, '09.12.29) ○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건설사고 발생 시 관계자에 대한 처벌 방안 마련 *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15.10)에서 관련 대책 보고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 추진('17년) ○ 아울러, 벌점제도는 중대한 과실 이외의 경미한 부실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므로 개선 필요성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수렴 ('16.5~)을 통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 *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소속기술자에 대한 지도 및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소속 기술자에게만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
건설정책국	52. 건설기능인력 노령화 및 외국인 근로자 의존현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능인의 직업전망 제시 및 내국인력 고용확대를 위해 기능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 추진중 -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주요 정책 내용을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에 담아 개정을 추진하기로 고용부 등과 합의('15.9.22)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능인등급제 시범 연구용역을 2차례 추진 * (1차) '14.7~12,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자체 수행, 건설기능인 2,529명 대상 (2차) '15.5~12,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위탁 수행, 건설기능인 6,449명 대상 - 국토부, 고용부, 업계, 노조, 전문기관 등으로 구성된 기능인등급제 준비 TF를 운영중(1.26, 3.15, 5.13 개최)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능인등급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근로자고용개선법 개정 추진 ○ 건설기능인등급제 준비를 위한 TF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실시 등 단계적 도입 추진
건설정책국	53. 건설사업관리 경력 인정에 있어 해외사업이 제외되고, 해외 업체의 실적 확인서 미발급시 건설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 * 제도개선 T/F회의 개최('15년, 7차례)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실적은 공신력 확보를 위해 해외 건설협회 등 공공기관에서 확인을 받은 경우 인정하는 것으로 관련규정 개정 추진('16.12) *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개정('16.12)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건설정책국	54. 건설근로자 임금 및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체불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자가 건설업자의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건산법 개정, '16.2 시행) ○ 공사대금 지불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회의 실시 * 발주자가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자, 근로자 몫의 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 발주처(LH 등 4대공사) 회의(2.29, 3.9), 현장실무자 회의(3.18), 업계·관련부처 회의(3.22)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대금 지불관리시스템 구축·운영 ('16.7.~)
건설정책국	55. 설계 단계의 안전성 검토 등 건설공사 안전 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 진흥법령」 개정 완료* * 법 개정('15.5), 시행령 개정('16.1) - 공공발주공사에 대해 설계의 안전성 검토(Design for Safety)를 의무화 * 설계단계에서 발주자와 설계자가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저감대책을 수립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련 지침(국토부 고시) 및 매뉴얼도 마련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건설정책국	56. 민간 매각, 타 기관과의 통합, 신규 공단 설립 등 건설관리공사 관련 정책 방향을 조속히 확정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 보고시 보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른 건설관리공사 민간매각* 기조를 유지 중 * 공사 민간매각 추진('11년~)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민간매각 지속 추진 * 타 기관과의 통합, 신규 공단 설립 등은 명분, 정체성 등의 문제점이 있어 수용 불가
건설정책국	57. 지반침하 위험지역 탐사역량 확충 및 관련 기술 개발 노력을 강화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 방지 및 기술력 강화를 위해 지반침하 위험성 예측 및 탐사기술 등에 대한 R&D 추진 중 * (연구기간) '15.12~'18.12 / (예산) 200억원(정부 150억원, 민간 50억원) / (주관연구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과제내용) 지반함몰 위험성 예측 및 평가 기술 개발, 지하공동 및 매설물 탐사(심도 10m 이상)를 위한 복합탐사시스템 개발, 지반 굴착시 차수성능향상을 위한 보강기술 개발, 비개착식 지하공동 긴급복구 기술 개발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상용화도 지원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건설정책국	58. 판교 환풍구 사고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체 회장이 건설기술인의 날 포상을 수여받은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러한 경우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건설기술인의 날 행사(3.25)시 상훈법에 따른 관계기관(경찰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추천제한 여부 확인('16.1~2월) - 이외에도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해 안전사고 등에 따른 건설기술자 업무정지 이력을 추가 조회('16.2월) ○ 정부포상지침 규정 준수 및 공개검증 강화 등을 통해 부적절한 수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완료
건설정책국	59. 건설안전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바, 건설안전통계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 진흥법령」 개정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개정('15.5), 시행령 개정('16.1) - 국토부가 사고현황을 수집·관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 및 절차를 마련 * 건설안전정보시스템 內에 사고신고시스템을 추가하고 사고사례 분석틀도 보완('16.5)
건설정책국	60. 건설공제조합 임원 인사의 자율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 인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장, 임원 등의 임면 절차를 기존 장관 승인사항에서 운영위원회 등 조합 자체 인준절차로 변경하였음(정관 제40조 개정, '02.4.10) * 조합 정관 제40조에서 이사장·상임감사(운영위 추천→총회 선임), 이사(이사장 임면 → 운영위 인준) ○ 앞으로도 국토부 등 외부기관의 간섭 없이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지속적 노력하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건설정책국	61. 건설신기술 적용 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청의 신기술 사용 확대를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15.12.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 적용 확대를 위해 발주청의 신기술 사용 의무화 및 담당자 면책 규정 신설 * 법 제14조 제5항 및 제6항 ○ 신기술 협약자도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16.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신기술개발자만 입찰, 시공 등에서 혜택을 주었으나, 신기술 협약자도 입찰, 시공 등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 부여 * 시행령 제34조 제3항 개정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 협약 관련 세부규정 마련('16.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규칙*제정 추진 * 건설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
건설정책국	62. 시공능력평가 위탁 수행 기관에 대한 국토교통부 차원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시 보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부는 매 회계연도 마다 사업계획과 수지계산서를 제출 받는 등 협회를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회계 뿐만 아니라 기관운영 전반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감사도 실시하고 있음 * 건산법 시행령 제48조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금번 국감에서 문제제기한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대하여 최근 종합감사('16.3.14~3.25)를 실시한 바 있으며, 동 감사결과는 별도로 제출할 계획임
건설정책국	63.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부처인 고용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에 의해 교육을 진행 * 정기교육(매분기 6시간이상), 작업변경시 교육(1시간 이상), 특별교육(2시간 이상), 건설업 안전교육(4시간)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부처인 고용부와 적극 협의하여 건설인력 안전교육 강화방안 검토
건설정책국	64. 국토관리청 발주 공사의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사업의 경우 대부분 장기간(5년 이상)에 걸쳐 추진되어 물가 및 지가상승, 기준변경 및 법정경비 등 불가피한 설계변경이 88%에 달하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머지 12% 수준인 현지여건 변동의 경우도 교량 및 터널 등의 토질 변화 등을 반영한 사항임 ○ 앞으로, 실시설계 과정에서 면밀한 현장조사 및 사후평가 등을 반영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건설정책국	65. 준공 후 30년 이상 된 택지지구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현재에도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통해 개발가능 - 위 사항에 대해 유권해석('15.4.6) 									
건설정책국	66. 국가기술표준원과 국토교통부 간 KS인증 회수 제품 통제시스템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시험관리시스템과 한국표준협회의 'KS인증지원시스템'을 연계하기 위한 연구용역 추진 중('16.4~12)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시험관리시스템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 <p>* 품질시험관리시스템 개편시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의하여 KS인증 회수 제품 통제시스템을 마련토록 조치</p>									
수자원정책국	67. 4대강 사업 수자원공사 부채 재정지원방안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9.24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4대강 사업 수공부채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을 결정 <table border="1" data-bbox="786 1693 1471 1821"> <thead> <tr> <th>구분</th> <th>상 환 액</th> <th>상 환 기 간</th> </tr> </thead> <tbody> <tr> <td>수공 자구노력</td> <td>5.55조원 (70%)</td> <td>'15~'36 (22년간)</td> </tr> <tr> <td>정부 이차지원</td> <td>2.43조원 (30%)</td> <td>'16~'31 (16년간)</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예산 3,400억원(원금 390억원, 금융비용 3,010억원)을 확보하여 수공 부채 상환계획에 활용중 	구분	상 환 액	상 환 기 간	수공 자구노력	5.55조원 (70%)	'15~'36 (22년간)	정부 이차지원	2.43조원 (30%)	'16~'31 (16년간)
구분	상 환 액	상 환 기 간									
수공 자구노력	5.55조원 (70%)	'15~'36 (22년간)									
정부 이차지원	2.43조원 (30%)	'16~'31 (16년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공의 자구노력 계획은 순익 전망 등에 근거하여 산정되었으며, 장래 정부의 재정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 									
수자원정책국	68. 4대강 사업의 부채지원 방안 및 4대강 수변공원 재자연화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부담과 관련하여 책임자의 사과 및 처벌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9.24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4대강 사업 수공부채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을 결정 <table border="1" data-bbox="783 920 1469 1025"> <thead> <tr> <th>구분</th> <th>상환액</th> <th>상환기간</th> </tr> </thead> <tbody> <tr> <td>수공 자구노력</td> <td>5.55조원 (70%)</td> <td>'15~'36 (22년간)</td> </tr> <tr> <td>정부 이자지원</td> <td>2.43조원 (30%)</td> <td>'16~'31 (16년간)</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도 전수조사를 토대로 이용도가 낮은 지역은 친수구역 축소 및 재자연화('15.9), 유지관리 예산 차등 분배('15.10) * 재자연화 지역은 인위적인 조성, 유지관리를 시행하지 않고 자연천이 방식을 적용하므로 이에 따른 예산소요는 없음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래 정부의 재정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 ○ 매년 이용도 조사를 시행하여, 필요시 친수공간 등 관리개선 추진 	구분	상환액	상환기간	수공 자구노력	5.55조원 (70%)	'15~'36 (22년간)	정부 이자지원	2.43조원 (30%)	'16~'31 (16년간)
구분	상환액	상환기간									
수공 자구노력	5.55조원 (70%)	'15~'36 (22년간)									
정부 이자지원	2.43조원 (30%)	'16~'31 (16년간)									
수자원정책국	69. 4대강 사업 관련자들이 받은 훈·포장 반납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포장 취소는 상훈법에 따라 '서훈 공적이 거짓이거나',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경우' 가능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까지 서훈 취소 요건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견되지 않음
수자원정책국	70. 낙동강 하류 폐준설선과 침몰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대상 준설선 68대 중 66대 반출 완료('16.5.) - 나머지 2대는 근저당 설정 등 소유권 분쟁 소송 중으로 소송결과에 따라 반출 예정 ○ 침몰선(4대) 수중조사('14.7) 결과 잠재적 오염원인 유류탱크 제거 등 안전조치 완료 * 지자체(부산·김해)는 선박 인양을 위한 행정 절차 추진 중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지자체와 공조를 통해 조기 인양 및 반출 독려
수자원정책국	71. 가뭄지역과 4대강을 연계하여 가뭄에 대응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 및 본류에 확보된 물을 부족지역으로 공급하기 위한 4대강 수자원 활용 개선 방안 연구 중('15.4~'16.10) * 가뭄에 따른 용수공급 사업 병행 추진 : 보령댐 도수로 완공('16.2), 공주보-예당지 도수로('16.2) 및 상주 1지구 도수로 착공('16.3)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강 수자원 활용계획 마련('16.12)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수자원정책국	72. 대구취수원 이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미시장 제안으로 민관협의회를 구성('15.2), 대구시와 구미시간 8차에 걸쳐 민관협의회 개최·협의중 * '15년(1차 3.13, 2차 4.9, 3차 5.21, 4차 7.22, 5차 9.3), '16년(6차 1.14, 7차 3.29, 8차 6.1)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구미시 민관협의회에서 원만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 - 대구·구미시 합의안을 토대로 사업 추진
수자원정책국	73. 지하수 수위 등의 조사를 위한 지하수 기초조사를 조속히 완료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 7개 시·군 조사 완료 * (누적) 전국 167개 중 110개 완료(70%) ○ 올해 19개 시·군 조사 추진중이며, 기재부에 '17년 24개시·군 예산 요구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상 완료예정인 '21년 까지 전국 167개 시·군에 대해 조사 완료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
수자원정책국	74. 한강과 서해를 연결하는 유람선 연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와 협력하여 한강시민위원회 설득 추진 중 * 한강시민위 도시경관분과위에서 유람선 운행 관련 사항을 검토키로 함('16.6.1)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와 협력하여 한강시민위 설득 등 적극 조치
수자원정책국	75. 하천재해예방을 위해 하천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수취약지구 등의 기본계획을 우선 수립토록 「하천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15.12) ○ 기본계획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수립 예산(치수연구개발비) 증액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예산: 미집행 예상액(국가하천정비 사업)의 전용 요구, 기재부와 협의 중 - '17년예산: 부처 예산(안)으로 450억 요구, 기재부 심의 중 * '17년 예산(안) : '16년 예산 323억 대비 127억원(40%) 증액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기본계획의 조속한 수립을 위해 예산전용을 기재부와 적극 협의 ○ '17년 요구액(450억원)이 전부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적극 협의
교통물류실	76. 인천청라 바이모달트램 지원대책 마련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 바이모달트램 도입관련 회의(3회) 참석 및 요구사항 조치 - 바이모달트램 설계지침 개정('15.12)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운전 개발.기준마련을 위한 R&D 계획 반영('16.3) ○ 도입 보조금 신규예산 편성 추진 - 차량가격의 40%수준 보조금 지원을 위해 '17년 70억원 부처예산안 확정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 보조금 편성을 위해 기재부, 국회 등에 당위성 설득 노력
교통물류실	77. 대리운전 불법셔틀에 대한 조사 및 대책마련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조사) 대리기사셔틀은 대중교통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12시 이후에 수도권과 서울을 연결하는 지역 등에서 승합차량 등을 활용 운영 중으로 추정 (대리기사 설문, '15.9) * 대리기사셔틀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강남 교보사거리, 강북 노원·합정역 - (수도권) 인천 구월동, 성남 모란역, 구리 구리역, 의정부 홈플러스 - (요금 및 배차시간) 2~3천원, 30분~1시간 ○ (대책마련) 콜버스 등 심야시간 운송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합법화)('16.4)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야 시간 운송수단 확보를 위해 카카오 등 대리업체, 버스·택시업계 등과 협의 추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교통물류실	78. 전국통합콜센터 민간이양 관련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폰 앱 사용에 서투른 중장년층, 농어촌 낙후지역 주민, 2G폰 사용자 등의 교통복지 차원에서 전국통합콜 활성화에 노력하여 왔으나 - 카카오택시 등 민간 시장기능이 계속 활성화됨에 따라 전국택시 통합콜의 역할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 <p>* 전국통합콜 추진계획</p> <table border="1" data-bbox="767 965 1455 1218"> <thead> <tr> <th>구분</th> <th>예산액</th> <th>사업기간</th> <th>서비스지역</th> </tr> </thead> <tbody> <tr> <td>1 단계</td> <td>20억원</td> <td>'13.6 ~ '14.7</td> <td>인천, 대전, 대구</td> </tr> <tr> <td>2 단계</td> <td>20억원</td> <td>'14.8 ~ '15.7</td> <td>특·광역시(세종제외) 경기,전북,충북</td> </tr> <tr> <td>3 단계</td> <td>20억원</td> <td>'15.8 ~ '16.8</td> <td>전국 시도</td> </tr> </tbody> </table>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대상 택시 통합콜 기능에 대한 민간 이양 및 민간활용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 	구분	예산액	사업기간	서비스지역	1 단계	20억원	'13.6 ~ '14.7	인천, 대전, 대구	2 단계	20억원	'14.8 ~ '15.7	특·광역시(세종제외) 경기,전북,충북	3 단계	20억원	'15.8 ~ '16.8	전국 시도
구분	예산액	사업기간	서비스지역															
1 단계	20억원	'13.6 ~ '14.7	인천, 대전, 대구															
2 단계	20억원	'14.8 ~ '15.7	특·광역시(세종제외) 경기,전북,충북															
3 단계	20억원	'15.8 ~ '16.8	전국 시도															
교통물류실	79. 수도권 교통본부를 행정 권한과 위상을 갖춘 광역교통청으로 개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교통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14.4월 정병국 의원 대표 발의)되어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이었으나, 제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됨 <p>* 국토부장관 소속의 '수도권광역교통청'을 설치</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교통본부에 광역교통계획 수립, 광역교통시설 사업 집행, 버스 노선 조정 등의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추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
교통물류실	80.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 사고 대책 및 정기검사 미준수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제재방안 강구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법·시행규칙 개정('1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식 주차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인 배치(법), 조도기준 마련 및 안전 센서 설치 의무화(시행규칙) ○ 주차장법 개정('1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식주차장 사용·정기검사 미준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령 개정
교통물류실	81. 전세버스 이용객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영세 지입차주의 처우 개선 및 지입제 양성화에 대해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버스 이용객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봄 행락철 특별현장 점검 ○ 과잉공급에 따른 경영악화 개선과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수급조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제한실시 : '14.12.1~'16.11.30(2년) ○ 직영 및 협동조합설립 전환유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분참여를 통한 회사경영 참여 - 지입차주 권리보호를 위해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 - 지입차주 권리보호를 위한 지입해소센터 운영 <p>* 운영실적 : 82건 처리</p>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버스 이용객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 봄·가을 행락철 특별현장 점검
교통물류실	82. 화물복지카드 운용 카드사가 3개사에 불과하여 서비스 개선 등에 문제가 있으므로 확대 필요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방지 관리체계 변경(카드사→교통안전공단, 5월)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카드사 확대 ('16.하) <p>* 공모 →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 협약체결</p>
교통물류실	83. 견인차량 장비사용료에 대한 구체적인 요금기준이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장·사고차량 견인요금은 신고제로 운송사업자의 요금 신고를 전제로 함 ○ 향후 요금 신고시 구난장비 사용료 등 세부 항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제도 개선 완료('15.5.26) <p>*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교통물류실	84. 고령자, 영세사업자가 대다수인 1대 사업자에 대한 화물운송실적신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대사업자 화물운송실적신고 제외하는 것으로 법 개정 완료(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7조2제1항, 16.1.19)
교통물류실	85. 호남권에 화물차 휴게소 증설과 공영차고지 복합 휴게공간화 및 화물차 휴게시설 (휴게소, 공영차고지) 국고지원 비율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남권 화물차 휴게소 4개소(광양, 여수, 이서2) 운영중 ○ 호남권 운영 및 건설중인 화물차 공영차고지 12개소 중 5개소에 편의시설 운영 및 건설계획에 있음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차 휴게소 국고지원 축소 등으로 신규 사업 추진이 어려워 지자체에서 추진을 기피하고 있으나,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년) 총사업비의 30%, ('13년~) 민간투자분을 제외한 총사업비의 30% ○ 화물차 공영차고지에 대하여는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여 화물차 공영차고지 편의시설 확충 등 복합휴게공간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유도 ○ 화물차 휴게시설(휴게소·공영차고지)이 차질없이 건립되어 화물차 운전자의 근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고지원 확대를 기재부와 적극 협의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게소) 국비 : 민간투자분을 제외한 총사업비의 30% (공영차고지) 국비 : 총사업비의 70%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교통물류실	86. 1자 물류의 자가용 유상운송 적법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유통업체의 자가용 유상운송 위법성 관련 유권해석 회신('15.4.2/15.7.4/16.4.4) * '화물의 소유(자기물건) 여부와는 관계없이 유상으로 배송하는지 여부에 따라 자가용 유상운송 해당 여부 판단 가능'
교통물류실	87. 화물차 지입제 문제 해소를 위한 TF를 구성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자(사업자단체, 화물연대) 및 연구원, 학계,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TF 구성 및 운영('15.12~'16.2) * 회의 개최 3회 실시('15.12.18, '16.1.14, '16.2.3)
교통물류실	88. 경기도 물류단지 난개발 방지 방안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 설명회 및 지자체 간담회('15.11), 법령자문단 검토('16.1)를 거쳐 실수요 검증 개선방안 마련 -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16.3월~4월), 법제처 심사('16.5월) 등 물류시설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 검증위원 Pool제 도입, 회의록 작성·보관, 세부평가기준 마련 등 ○ 물류시설법 시행규칙 개정·공포('16.6)
교통물류실	89.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 설명회 및 지자체 간담회('15.11), 법령자문단 검토('16.1)를 거쳐 실수요 검증 개선방안 마련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16.3월~4월), 법제처 심사('16.5월) 등 물류시설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 검증위원 Pool제 도입, 회의록 작성·보관, 세부평가기준 마련 등 ○ 물류시설법 시행규칙 개정·공포('16.6)
교통물류실	90. 온라인 자동차 폐차 중개대행업체의 합법적 전환 방안을 강구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57조의2 신설의 입법취지, 해체재활용업자 및 자동차경매장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온라인 폐차 중개업체 인정은 곤란하며, 온라인 폐차 대행업체 및 보험사에 대하여 제도개선의 취지 설명 등을 통해 전손차량 중 폐차 대상 차량 처리 업체는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을 등록하도록 조치('16.1)
교통물류실	91.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한 것이 연비와 관련되는지 여부와 폭스바겐 디젤차량의 리콜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조사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스바겐 시험차 확보('16.1.29) - 길들이기(6,500km) 시험완료 ○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차량의 연비와의 상관성 시험실시 중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 리콜 승인 이후(일정 미정), 리콜 전·후의 연비를 제원통보한 연비와 비교하여 기준 부적합시 후속조치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교통물류실	92. 사업용 대형자동차 검사의 공단일원화는 업계 피해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관 단체 및 부처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 관계자 간담회('15.12~'16.3, 7회)를 통해 제도 개선안 협의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 완료 후 제도 개선('16.하) <p>*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p>
교통물류실	93. 현대자동차 부품공급업체 현대모비스의 에어백 납품업체 품질미달 여부를 조사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모비스 및 에어백 납품업체 조사 실시('15.10.14, '15.10.21) - 운전석에어백 커버 재생원료 사용실적이 없으며,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2조(충돌시의 승객보호)를 만족함 - 사이드 에어백 커버 유사원료 사용실적이 있으나, 제작사 품질검사 기준을 만족하며,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2조(충돌시의 승객보호)를 만족함 - 커튼 에어백 컬러램프 유사원료 사용실적이 있으나, 제작사 품질검사 기준을 만족하며,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2조(충돌시의 승객보호)를 만족함 <p>* 제작사 품질검사에 불합격한 3건은 전량 회수 후 폐기('12.8.21)</p>
교통물류실	94. 경미사고에 대한 무분별한 부품교체는 사회적 비용 낭비 및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경미사고 수리기준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미사고 수리기준 마련」 ('15.12.16) - 속도·사고형태·파손범위 등 분석 후 작업소요시간 및 재료비를 측정하여 과다 수리·청구 방지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교통물류실	95. 중고차매매시장 선진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시세 정보 공개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16. 3) ○ 중고차매매업 선진화 TF 구성('16. 4)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시세 정보 공개 및 중고차매매업 선진화 TF 협의('16.6~9)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방침결정('16.9)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회제출('16.11)
교통물류실	96. 수입차 수리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차의 높은 수리비를 낮출 수 있도록 대체부품 인증제 시행('15.1.) - 인증제 시행을 위해 인증기관을 지정('14.12) 하고, 인증절차 진행 중 ○ 자동차제작자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부품의 소비자가격 자료를 공개('14.8~) - 부품 공급기간 이상 동안 해당자료 공개 및 분기별 정보갱신 의무 부과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대체부품 품목 대폭 확대 예정('16.하)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교통물류실	97.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 요금 분쟁에 대한 합리적 이고 원만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적인 정비요금 결정을 위해 보험 정비업계간 협의체 구성·운영 중이며 - 적정 정비요금 산출을 위한 공동연구 용역 발주를 위한 과업지시서(공임, 표준작업시간) 협의 중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용역을 통해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 요금의 참고기준을 산출하여 보험· 정비업계간 분쟁 해결
교통물류실	98. 사업용 자동차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주운전 위험성 홍보 및 운수회사 교통안전 점검, 교육 실시 ○ 경찰청과 협조하여 음주운전 단속 강화
교통물류실	99. 안전띠 경고음 차단을 위하여 클립을 사용하는 운전자 등 안전띠 미착용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띠 착용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실시 ○ 경찰청과 협조하여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에 대한 단속 강화
교통물류실	100.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선이행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교통안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유도 및 개선이행 독려를 통한 개선 이행률 향상 제고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안별 우선순위 산정을 통해 비용 대비 사고감소 효과가 큰 개선안을 우선 시행토록 유도 -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 결과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지속 확인을 통해 개선이행이 미흡한 지자체 이행 독려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이행률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확인·점검을 시행하고, 지자체의 낮은 재정 자립도를 감안하여 우선 예산대비 효과성이 높은 신호기 등 도로·교통안전시설물 개선 등 유도 ○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지자체 합동으로 지역 차원의 현장 맞춤형 종합교통 컨설팅을 지속 전개하여 시급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개선, 개선이행률을 높일 계획
교통물류실	101. 장애인의 장거리 이동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시외 이동권 향상을 위하여 연구·개발*이 진행 중 *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가능한 고속/시외버스 개조차량 표준모델 및 운영기술 개발 (기획연구, '15.12~'16.8), 본연구('17~'19) 예정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17~'21)'에 시외 이동권 향상방안 등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16.12)할 예정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교통물류실	102. 교통안전관리자 지정 및 교육의무화 제도도입은 운수업체 등과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운수업계가 참여한 국회 간담회('15.6.24.), 관계자 회의('15.9.4.) 수행 - 의원입법 발의안에 대해 업계의견을 수렴한 국토부 의견 제출
교통물류실	103. 자동차 정비책임자 직무 교육 제도를 재도입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작자의 정비업자에 대한 교육은 온라인 교육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정비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등에는 집합교육을 실시하도록 고시 ('16.3.30)
교통물류실	104. 안전운전체험교육 이수 여부 확인의무화 등은 업계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진행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법예고시 제기된 운수업계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교통안전법 개정안 수정 상정
교통물류실	105-1. 국립교통재활병원이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 조기 안정화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교통재활병원에 대한 안정화 대책 마련 - 지속적인 적자원인 규명 및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톨릭학원과 자구책 협의 중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자구책이 마련되면 병원운영 위원회에 안건 상정 후 국고보조금 교부시행('16.6월중) ○ 조기 안정을 위해 추가적으로 병원 홍보강화, 네트워크 활용, 인력 및 시설 단계적 확충 등 노력 지속적 시행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교통물류실	105-2. 국립교통재활병원내 한의과 개설 등 환자들의 선호를 반영하여 진료 과목 개설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료과목 추가 개설은 병원운영이 안정(수익 발생 등)된 후, 국립교통재활병원과 협의하여 단계적 확대여부 검토
교통물류실	106.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 운영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회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15.9.8) - 위원장 자격, 근무형태 등 개선안 마련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회 운영상 추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기관(의료, 보험)과 협의하여 추가 개선안 마련
교통물류실	107. 현실을 반영한 탄력적인 택시 감차계획을 수립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차기간 제한 완화(감차위원회 자율결정)로 업계출연금 완화(제도개선 완료) - 감차기간 제한규정*(10년 이내)을 완화하여 납부 가능한 업계 출연금 수준에 맞게 연도별 감차규모(총 감차규모/감차기간)를 조정(택시발전법시행령 개정, '15.9.1) ○ 감차대상 사업구역 144개 중 31개 사업구역 감차계획 수립·고시 완료('15.5월)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차계획 수립대상 144개 사업구역 중 107개 사업구역 감차위원회 구성하여 감차계획 수립 추진 중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감차 취지에 맞게 감차위원회에 참여한 택시사업자, 택시노조, 전문가, 공무원 등이 지자체 실정을 감안하여 감차계획 수립 추진
항공정책실	108. 김포공항의 명칭 변경에 대해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토내용) 국·내외 현황, 사례, 변경절차, 변경시 미치는 영향, 문제점 등 검토 ○ (검토결과) 개항부터 사용된 명칭 변경에 따른 이용객 혼선이 예상되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 명칭변경의 필요성, 문제점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항공정책실	109. 국민편익을 위해 김포공항 국제선 활용 방안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공항 개항('01.3월) 이후 김포공항은 국내선 전용공항으로 사용되었으나, '03년 동북아 수도공항 셔틀운항 구축 결정 후 정기성 전세편*으로 6개 노선 운항 중 <p>* 정기노선을 개설할 경우, 여타 국가들도 김포공항 국제선 개항을 요구할 수 있어, 양국 정상합의 등을 통해 일본, 중국, 대만 6개 노선만 전세편 형태로 운항</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15~'19)에서 소음 피해*, 김포공항 용량, 인천공항 허브화 측면 등을 종합 고려해 국제선 확대기준 마련('14.12월) * 김포공항 주변지역에서는 항공기 소음피해 등으로 김포공항 국제선 확대 반대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15~'19)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신규수요 창출이 가능한 동북아 중·소도시와 제한적으로 확대할 계획('19년까지 3~4개)
항공정책실	110. 인천공항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식음료 가격 관리 필요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음료 가격 관리방안 마련 시행 완료('15.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만원이하 메뉴비중 확대(48%→82%) - 시내매장과 동일가격으로 판매하는 체인형 브랜드매장 비중 확대(63%→91%) - 고가 음식을 팔던 고급식당가를 캐주얼 브랜드 식당으로 변경 등
항공정책실	111. 인천공사의 면세점 운영시간 조기 조정으로 근무 직원의 교통 불편 대책 마련 필요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세점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셔틀버스 운영 개시('16.2)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항공정책실	112.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대한 재검토 필요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경쟁력 강화·이용객 편의제고 등 긍정적 효과를 감안하여 향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음
항공정책실	113. 항공보안법과 항공법상 위험물 운송관련 용어 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토결과 업무수행과정에서 용어 불일치로 인한 법령해석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 - 항공법의 위험물 운송허가에 대한 규정과 항공보안법의 테러 방지를 위한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에 대한 규정은 그 입법 취지와 목적이 다름 - 따라서, 같은 ‘무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항공법 제146조의 ‘무기’는 ‘병기와 탄약’(국방부, 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을 의미하고, 항공보안법의 무기는 제21조 규정에 따라 “항공기내로 반입되는 무기(탄저균 등의 생화학무기 포함), 도검류, 폭발물 등을 의미함. - 현재 법령상 용어 해석과 관련하여 더 이상의 혼란은 없으며, 유권해석으로 대응 가능
항공정책실	114. 인천 제3연륙교 건설 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 국제공항공사가 인천대교 및 공항고속도로 매입 방안에 대한 검토용역을 시행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공항공사 민자도로 매입 방안 검토(15.9월) * 매입비용 고려 시 인천공항공사 부채 증가 등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연륙교의 손실보전 책임은 인천시에 있으며, 제3연륙교 건설을 전제로 지분 매입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
항공정책실	115. 김해공항 혼잡완화를 위해 커류 타임(curfew time) 축소 및 슬롯(slot)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산업발전협의체 회의('16.4) 및 관계기관 회의('1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수요 증가, 이용객 불편해소 등을 위해 운항시간 제한 축소 요구(부산시) * 부산시, 국토부(부산항공청), 한국공항공사, 공군 ○ 김해공항 슬롯(slot) 확대를 위한 신규 선회접근절차 신설·도입('1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 동계스케줄부터 민항기 시간당 이·착륙 회수 증가(주중 16회→17회)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협의체 구성 등 해당 지자체(부산시)를 중심으로 운항시간 연장 추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주변 지역 주민과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간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 협의 추진 ○ 현재의 시간당 이·착륙 회수 17회를 유지하고, 민항기 슬롯(slot) 확대를 위해 공군과 지속 협의 추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항공정책실	116. 항공기사고의 철저한 예방 및 대책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비용항공사 특별안전점검 실시('16.1~2) ○ 설 명절('16.2) 및 연휴기간('16.2.25~3.1) 등 휴일 항공분야 특별안전감독 활동 실시 *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 등 ○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 대책」 마련('16.4.25, 국가정책조정회의)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사의 이행실태 점검(6·12월) ○ 국적항공사에 대한 상시점검(연중) 및 자체 안전관리시스템(SMS) 운영실태 점검(7·12월)
항공정책실	117. 외국인 조종사의 국내 자격증명 전환 시 항공 안전을 위한 자격시험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조종사의 국내 자격증명 전환 시 실기시험을 기 강화*하여 시행 중으로, * (실기시험 방법 변경) 구술시험 → 실제 비행 시험으로 강화('13.7월,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 ○ 국적항공사가 외국인 조종사를 채용할 경우, 정부 운항자격심사를 통해 지식 및 기량을 철저히 검증*하고있음 * 외국인 조종사 운항자격심사 불합격자 현황 : 8명('14년), 9명('15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항공정책실	118. 항공관제시스템 부실 개발 관련 향후 보완 대책을 마련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관제시스템 성능적합증명 기관 및 발급증명서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시스템을 성능검사한 “인하공전” 검사기관지정 취소(‘15.11.19) - 발급된 성능적합증명 취소(‘15.11.19, 한진정보통신(주)) ○ 성능적합증명검사제도 개선 시행(‘1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능적합증명 검사기술 기준 개정 -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절차 등의 규정(고시)개정
항공정책실	119. 항공기 지연운항비용 감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모든 항공로를 첨단비행로(PBN) 전환하여 제한된 공역의 수용량 증대률 도모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BN(Performance-based Navigation) : 위성 등을 이용, 비행정확도를 높여 공역사용의 효율성과 비행안전을 제고하는 新항행기법 ○ 군 공역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이를 통한 항공기의 단축비행으로 비행시간 및 연료 감축 등 효율성 제고 ○ 항공기의 운항시간 조정 등 항공교통 흐름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접국(일본·중국)과 관제 협력 회의 등 협의 지속 추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안전종합통제센터를 개소하여 한·중·일 3국간 정보교환 등 체계적인 흐름관리를 통해 지연을 최소화('17.7~)
항공정책실	120. 항공조종인력 양성사업 취업률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조종인력 양성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1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조종인력 양성방안」 국무회의 보고('16.5.3) - 항공사 취업준비과정(추가 비행경험축적 100시간 + 제트기 과정 22시간)을 신설('17.1)하고, - 항공사의 조종사 채용방식을 先선발-後교육 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하여 교육 수료 후 취업과 연계 추진
항공정책실	121. 중국노선 항로혼잡으로 인한 지연 증가에 따라 국내선 지연까지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간 항공로 혼잡 해소를 위한 항공로 복선화방안 등에 대해 중국측과 지속 협의 추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 항공교통관제 협력회의 개최('15.12), 한·중 항공협력회의에서 서울-북경 항공로 복선화 협의('16.2), 한·중 실무자 기술협력회의 개최('16.4) 등 ○ 교통량 사전 예측 및 시스템을 통한 분산배치로 지연을 방지하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기상 등 지연상황 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한 항공안전종합통제센터 구축 중(~'17.6)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간 항공로 복선화를 위한 협의회 개최('16.8 예정) - 그간 논의된 복선화 방안에 대한 세부 이행방안을 협의하고, 협의사항 이행을 위한 워킹그룹 구성·운영 ○ 항공안전종합통제센터를 개소하여 한·중·일 3국간 정보교환 등 체계적인 흐름관리를 통해 지연을 최소화('17.7~)
도로국	122. C-ITS 시범운영 시 적용되는 장비 성능 등에 대하여 철저히 검증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비 성능평가 기준, 법제도 개선안 등을 마련하였고, 시범사업을 통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임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ITS 시범사업 수행 (~'17)
도로국	123. 경부 및 중부고속도로의 정체문제 해소를 위하여 제2경부고속도로 조기 착공, 중부고속도로 확장 등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경부) '15.11 경제장관회의에서 서울~세종 고속도로 추진 결정 - 서울~안성 구간은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재정사업(도공 착수) 추진 후 민자전환 - 안성~세종 구간은 사업 초기부터 일반 민자사업으로 추진 ○ (중부선) 타당성재조사 중(기재부, '16.4~)으로 혼잡구간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적극 협의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부선) 타당성재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절차 조속 추진
도로국	124.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가 과다하므로 이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통행료 인하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15.12) * 교통연구원, 삼일 회계법인 공동 수행, '15.12~'16.8(8개월)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자와 협상 추진
도로국	125. 국도지선이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등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기관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비와 지방비 부담방안 등을 마련하여 기재부와 지속적으로 협의('15.11~'16.5월) ⇒ 기재부 의견 :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 계획으로 검토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사업 순위, 지방비 추가 부담방안 등을 마련하여 재협의 추진 : '16.6월~
도로국	126.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도로관련 법령의 해석 등에 있어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기관 자문결과를 거쳐 도로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별시도 노선변경(서울역 고가도로 폐지) 승인('15.11.25) - 다만, 경찰청과 교통처리대책을, 철도 시설공단과 철도안전대책을 협의·마련토록 통보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도로국	127.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산이 특정지역에 편중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을 기준으로 예산을 배분하지 않으며, 사업시급성, 집행가능성 등 현장 여건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고 있음 - 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별 필요 예산이 적정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적극 협의토록 하겠음
도로국	128. 국도건설사업의 집행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사 부도, 민원, 보상지연 등으로 일부 사업의 집행 부진이 발생하였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조 6,727억원 중 3조 4,854억원을 집행(94.9%) * 최근 3년 집행실적 : '13년(90.4%) → '14년(93.3%) → '15년(94.9%) ○ 신규사업은 선정요건을 강화*하여 '16년부터 3월 이전 설계완료 사업을 신규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당해 3월말 설계완료사업으로 한정 ② 총사업비 협의기간 당해 6월말까지 완료 ③ 신규사업 착공비 축소(5→1억원) - 부도대응매뉴얼('15.6)·공사대금 지급업무 매뉴얼('16.2) 배포·활용하여 철저히 사업관리 중 - 민원, 보상지연은 현지 여건에 밝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의견수렴 등 갈등을 최소화할 계획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도로국	129. 소방차가 통행 못하는 굴다리 및 지하차도 높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로서 시설한계 미달된(굴다리 등) 시설물은 진입차단틀 등을 설치하여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첨단도로 안전과-3203, '15.8.6) <p>* 도로법 제31조 :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p>
철도국	130.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수도권 서부지역의 광역 철도망, 충청권 광역철도의 옥천 연장, 호남선 대전~논산 직선화, 충청산업 문화철도, 부산철도시설 재배치, 위례~성남~광주~용인 철도망 구축 등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관계기관 협의('16.3~6,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국토계획 평가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안)에 서부지역 광역철도(부천 원종~홍대입구), 호남선 가수원~논산 등을 '신규사업'으로 반영, - 충청권광역철도 옥천연장은 추가검토 사업으로 반영 <p>* 부산철도시설 재배치는 철도망 구축과 관련없고, 위례~성남~광주~용인 철도는 타당성 부족으로 미반영</p>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16.6)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철도국	131. 철도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시 철도시설 내구연한 조정(30→60년), 할인율 인하, 환경성·에너지효율성·안전성 등을 고려한 편익 반영 등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 투자평가제도 개선연구('15.7~'16.7, 철도시설공단) 추진중 - 환경편익 개선, 시간가치 현실화 및 적정 할인율 검토 등 - 전철화 편익산정을 위한 기재부·KDI 협의중('16.6~)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기재부와 협의 추진
철도국	132. 충청권 광역철도사업 옥천연장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여 적정한지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수행 중 * 용역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장 : 대전조차장~옥천(20.9km) · 용역기간 : '16.2 ~ '16.8 · 발 주 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절차 추진
철도국	133. 공항철도 용산-인천공항 운행방안 확실히 진행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연구용역 진행 중 * 인천공항~용산역간 직결운행 검토 용역 ('14.12~'16.상, 교통연구원)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기관과 운영방안 및 재원조달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 * 재원조달 등 관계기관 협의('16.상)→시스템 개량 착수('16.하)→운영계획 수립→개통('17.말)
철도국	134. 충청권광역철도 (계룡~신탄진) 예타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성이 확보되어 예타 완료
철도국	135.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 공사 통폐합에 대해 중앙 정부 차원에서 협의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가 마련한 통합안에 대한 3개 노조 (메트로2, 도시철도1) 투표결과 메트로 2개 노조 반대로 부결
철도국	136. 노후 철도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개량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철도시설 개량 종합계획('13~'17)을 보완하여 재수립(국토부, '15.12월) - 철도 시설개량, 유지보수 등 시설안전 예산 증액 요청 * ('16년) 7,600억원 → ('17년) 8,796억원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된 철도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개량은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투자계획 및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철도국	137. 철도터널 보강에 사용된 자재와 관련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규정에 맞지 않게 시공된 터널에 대하여는 개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연성 자재(패널)를 사용하지 않고 시공한 터널의 자재에 대한 난연성 여부에 대해 총 21개소 중 3개소를 제외한 18개소에 대한 조사를 실시 * 3개소(의영/아현터널은 기시행, 증약터널(상선)은 미시공) - 시료채취 및 공인기관 시험의뢰('15.9.17~18), 서류검사 등 현장조사('15.10.6~12) - 부적합개소(16개소) 중 9개소는 조치 중이며, 나머지 7개소는 전문가 자문 등의 결과에 따라 보강 등 조치 예정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12.까지 조치완료할 계획
철도국	138. 철도터널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한 용어의 모호성 해소를 위해 관계규정을 개정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을 마련(4월) - 행정예고(4~5월)를 통해 의견수렴 완료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 완료(11월)
철도국	139. 철도승강장 발빠짐 사고 저감을 위하여 안전발판 설치 등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강장 발빠짐 사고 저감대책 수립('15.12)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선구간 승강장에 고정식 안전발판 설치 완료('15.12) - 곡선구간 승강장에는 접이식 안전발판을 단계적 설치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빠짐 위험이 높은 48개역은 '18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그 외의 역은 운영기관별 재정여건 등에 따라 설치 <p>* '16년 16개역, '17년 13개역, '18년 19개역</p>
철도국	140. 열차내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차내 영상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철도안전법 개정('16.1.19) 완료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기록장치의 설치방안, 운영방안 등 마련을 위한 철도안전법 하위법령개정 추진 <p>* 개정안 마련('16.10) → 개정·공포('16.12)</p>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단	141.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우대 및 확대를 위한 혁특법 개정('15.12) ○ 혁신도시별 이전기관 대졸자 합동채용 설명회 개최 <p>* '15년 8회 개최, '16년 5회 개최</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16년부터 지역인재 우대정책*을 인사 규정에 명시한 경우 경영평가시 가점을 부여하여 지역인재 채용확대 독려</p> <p>* 채용목표제, 할당제, 가점제 등</p> <p>< 향후 추진계획 ></p> <p>○ 대졸자 합동채용설명회 지속 개최</p> <p>* 매년 8회 개최 : 3회 추가(‘16), 8회(‘17년)</p> <p>○ 고졸자 합동채용설명회(콘서트) 개최</p> <p>- ‘16년부터 지역인재에 고졸자가 추가됨에 따라 고졸자에 대한 설명회 추가 실시</p> <p>* 2회 개최 예정(6월, 9월)</p>
<p>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단</p>	<p>142. 공공기관이 스마트워크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p>	<p>< 조치실적 ></p> <p>○ 이전기관에 대한 스마트워크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국회 주변에 공공기관 전용 스마트워크 설치를 행자부에 요청(‘16.2.18)</p> <p>* 현재 행자부에서 운영중인 수도권 스마트워크 센터(13개)를 공기업 직원들도 이용 가능</p> <p>< 향후 추진계획 ></p> <p>○ 행자부에서는 의원회관 옆에 신축예정인 건물에 추가 설치 예정(‘20년)</p> <p>- 그전까지는 노동부 출연기관의 스마트 워크센터(여의도순복음교회 옆) 활용을 추진(행자부)</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단	143. '05년 이후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에 대한 추가 이전계획을 검토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이전 결정('05.6월) 이후 추가 지정된 공공기관 현황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지정된 공공기관은 80개로 이중 본사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기관은 39개 ○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에 대한 추가이전 문제는 국민 공감대 형성, 정부부처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에 추가 이전문제는 기관이전을 우선 마무리하고, 이전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거쳐 신중히 검토 * 전체 154개 기관 중 138개 이전되었으며, '17년 말까지 이전 예정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단	144. 이전공공기관의 이행 점검 및 사후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이전 기관의 이전 후 사후관리방안을 마련('15.10.28)하여 체계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기관별 주요변동사항은 정기보고 (매년말)토록 하고, 승인없이 수도권에 인원잔류·수도권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 시정조치 후에 조치가 안될 경우 현장점검 실시 후 기재부 등 관계기관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 정원·예산 협의시 불이익 조치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1. 성남-장호원 1공구 성남도촌택지지구 소음저감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음문제와 관련 합동회의('15.9.24)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참석자) 국토부 간선도로과장, 서울청, LH, 성남시 관계자, 도촌지구 소음대책위원장, 시의원 등 약 30명(신상진의원 참관)</p> <p>* (회의결과) 국토부와 주민대표 합동으로 신뢰성 있는 소음도 측정을 시행한 후, 그 수치를 보고 후속협의 추진</p>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음측정 결과('15.6.26.~7.2.) 기준치 이내로 방음터널 추가 설치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 * (주간) 측정 54.8db ≤ 기준 65db 이상 (야간) 측정 46.3db ≤ 기준 55db 이상 ○ 향후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소음저감 방안을 추가 검토하겠음.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2. 국도대체우회도로 상패-청산 구간의 국비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동구간 보상비는 총사업비 30%를 초과분 보상비의 50%(26억원) 국비지원 ○ 나머지 보상비는 경기도에서 전액 동두천시에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됨.
원주지방 국토관리청	1. 미평-진부간 국도공사 외에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의 회사(황룡건설)가 수행한 것으로 확인해 준 다른 건이 있으므로 당시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전수 조사하여 보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부터 2015. 9월까지 우리 청 건설현장의 모든 하도급계약 사항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룡건설(주) 하도급 1건(2011년) * 건설현장 276건, 하도급계약 1,904건, 황룡건설 하도급 1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백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1. 대아건설의 법정관리로 인한 청원IC 연결도로 공사 중지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사 변경(대아건설→남해건설)을 통해 ‘15.9월부터 공사를 정상화하였으며, 공중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시행중 - 동 사업의 현안(민원 등)이 대부분 해결되었으며, 준공년도에는 포장, 부대공 등 예산이 집중되는 공종이 대부분으로 연내 예산집행 가능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말까지 준공하여 개통 완료할 예정임 - 개통 T/F를 구성하여 주기적인 공중 관리를 시행하여 예산집행 및 부진공중 만회 등 예산집행에 문제없도록 철저히 관리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2. 세종시 인구 유입에 따라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증가와 함께 생활 편의시설 등이 생활권별로 다양하고 고르게 확충 - ‘15.12월말 기준 대형마트 2개소를 포함하여 227개 상가에 2,950개(블록수 기준)의 점포가 영업 중이거나 입점이 확정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편의시설이 도시에 들어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생활 편의시설 확충 예정 <p>* 코스트코(‘17년), 세종충남대병원(‘18년)</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3. 행복도시 내 특별분양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받은 주택의 전매 제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旣 강화('14.3월) - '14년 이후 공급 주택은 전매가 불가하여 특별공급 전매문제는 없음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4. 공동주택 설계공모 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설계공모 추진과 관련하여 각계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전문가(3.29,4.7,5.10), 건설사 사장단(4.7) 등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공모 심사위원 풀 구성 시 교수 이외에도 업체, 공무원 등 공동주택 관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할 예정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5. 학교정화구역 내 호텔 건설이 정상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정상화 방안을 논의 중 사업자 측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16.1월) 함에 따라 협의 진행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처리 결과에 따라 사업자 측에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재심의를 청구토록 협의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재심의 통과 여부에 따라 용도변경을 검토하겠다는 청·LH 의견을 사업자에게 통보(국권위,'16.5.17)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당초 계획대로 호텔 건설이 정상 진행 될 수 있도록 추진

새 만 금 개 발 청

공백

□ 새만금개발청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새만금 개발청	1. 새만금 투자전시관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전시관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투자전시관 운영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15.11월), 투자전시관이 수도권 고객에 대한 새만금 소개의 장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고객 상담장소 마련('15.12월) ○ 투자유치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투자전시관 소속을 대변인실에서 투자전략국으로 전환, 적극적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자 접견실 마련('15.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투자국 각 과와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투자자, 투자유망국 인사, 개도국 공무원 등과의 협의·홍보의 장으로 활용 중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기업의 투자 창구가 되는 금융권·주한 외국상의 등의 담당자 등을 초청하여 새만금 개발사업을 소개하는 등 투자전시관이 새만금투자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용을 확대할 계획
새만금 개발청	2. 새만금 투자유치 자문단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저명인사 및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투자·개발 분야 등에 수시자문 및 의견수렴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담회, e-mail, 유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문실시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분과별 운영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문단) 국내·외 저명인사로 구성하여 새만금 사업추진에 대한 정책적·여론적 지지와 우호적 기반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새만금위원회 위원장(또는 청장) 주재 년1회 정례회 개최 및 필요시 전문성 고려 수시자문 실시 ○ (자문위원) 경제·산업·행정·연구 분야의 인사 및 오피니언 리더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청장 주재 년 2회 개최, 필요시 유선 등을 활용 수시자문 ○ (분과별 자문위원) ①투자 ②개발 ③對중국 ④문화예술관광 새만금 사업에 필요한 분야별로 해당 전문가 Pool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소관분야 국장 주재로 반기별 1회 개최, 필요시 수시자문
새만금 개발청	3. 새만금지역으로 청사 이전방안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도 새만금개발청 청사수급관리 계획 제출(행자부, 2.26) ○ 새만금청사 건립을 위한 예산요구(2017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공용재산 취득사업계획 제출, 3.25) ○ 새만금개발청 청사에 관한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구상 연구용역 추진(5.24~10.20)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청사이전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예정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새만금 개발청	4.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 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시적인 기업 유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프로세스 개선방안을 마련('15.12)하여 '16년 투자유치 전략 및 추진 계획 수립('16.2) - 투자유치 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투자유치 활용기관 다변화*, 투자유치 활동방식 다각화**, 위원회 네트워크 적극 활용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TRA 뿐만 아니라 외국상의·로펌 등으로 투자유치 활용기관 확대 ** 타기관 행사 및 박람회 참석, 주한외국기업 모임 참석 등 - 투자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MOU 체결 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간담회 실시[연2회 이상('15.10, '16.3, '16.4)], 기업방문을 통한 투자계획조사(연중) ○ 새만금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고용 및 개발 등 8개 부분 규제 완화*, 국내기업 및 개발사업자 인센티브 부여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차무투) 고용·출입국·통관·시험인증·금융·입지·개발·환경 규제완화 ** (9차무투) 국내기업·개발사업자 인센티브, 규제청정 시범지역, 인허가절차 원스톱 처리 등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산업별 투자환경에 따른 차별화된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실시하고,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새만금 인지도를 제고 ○ 한·중 FTA 등 변화된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고 새로운 전기 마련을 위해 획기적 규제완화·인센티브를 통한 경제특구 조성방안 마련 ○ 국내외 잠재 투자기업 대상으로 심층적인 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추가 발굴
새만금 개발청	5.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 (동서2축, 남북2축) 등 기반시설 조기 구축을 위해 예산확보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만금지역 접근성 확보를 위하여 내부간선도로 조기 개통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서2축) '16년도 예산 537억원 확보, 현재 공정율 21% 달성 - (남북2축)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턴키 방식으로 추진 예정으로, 사업발주를 위한 '16년도 예산 21억원 확보 * 기재부와 총사업비 조정협의중 ○ 신항만의 경우 '방파제'는 '1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중(해수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입도로 및 방파호안 건설공사' 예산 102억원을 확보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호안 및 매립호안 축조공사’ 예산 100억원을 확보 ○ 공항은 국토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16~‘20)」에 반영·고시 ○ 철도는 「제3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16~‘25)」에 반영되도록 국토부와 협의 <p>< 향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서2축도로는 금년 공정율 30% 달성 ○ 남북2축도로는 기재부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마무리하고 사업 발주 추진 ○ 신항만 방파제는 ‘16년 6월 준공, 진입 도로, 호안 등은 사업 발주 ○ 공항은 국토부에서 수요·입지·규모·사업시기 등 사전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으로 조사 등에 적극 대응 ○ 철도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고시되도록 적극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 6월 계획 고시 예정
새만금 개발청	6. 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조직 안정화를 위한 인력운영방안을 수립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장급 타부처 파견자(4명)를 새만금청 인력으로 전환하는 새만금개발청 직제 개정(‘15.12.10)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조실 및 농림부 과장은 새만금청 인력으로 전환 완료('16.2.18) <p>< 향후 운영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만금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계속성 확보를 위해 타 부처에서 파견중인 5급 이하 인원에 대해서도 전환 추진 - 행자부, 파견부처 등과 협의 ○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수보직 기간 준수 - 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필수보직기간(4급 이상: 2년, 이하: 3년) 준수

공 공 기 관

공백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백

□ 한국토지주택공사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토지 주택공사	1. 동탄2지구 백화점 사업자 선정과정이 적절하였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공모절차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형 심사제도 개선방안」 수립·시행 (‘15.10.26) - 심사 프로세스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운영메뉴얼 작성, 사전심의제도 신설, 주요심사 본사수행 등 - 심사위원 구성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지매각형 심사) 공사업무와 연관도가 미약 하여 내부위원 배제 (공모형 심사) 공사업무 연관도를 감안하여 내부위원 비율을 축소하여 외부위원이 내부 위원보다 많도록 조정하였음 - 심사위원 평가위원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들의 전문성, 청렴도를 분기별로 평가하여 심사위원 POOL 관리 - 심사 가이드라인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제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 작성 (‘16.03.28) ○ 이후 공모사업에 대하여 개선방안에 따라 사업추진
한국토지 주택공사	2. 장기미착공 사업의 조속한 착공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이상 장기 미착공 지구 사업 추진 방안 수립(‘15.11.17)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토지 주택공사	3. 장기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하여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임대주택은 최근 5년간 연평균 6.4만호 총 31.8만호 공급하였음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5년간은 연평균 5.2만호 총 26만호를 공급 할 계획으로 지역별 수요 및 택지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음
한국토지 주택공사	4. 행복주택에 대한 정부 출자비율이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예산안 국회심사 일정에 따라 행복주택 출자비율 상향(30%→40%) 필요성 등 자료 제출 및 협의 (~'15.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주택 정상추진을 위한 업무협조 요청」 행복주택계획처-112('16.1.6) - 행복주택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무개선 협조 요청('16.5.25)
한국토지 주택공사	5.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를 위하여 전면철거 위주의 도시정비사업을 개량형 개발 방식 등으로 다양화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단위 전면철거 방식에서 탈피하여 빈집정비사업 등 주민참여형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법령 제정 착수('16.2) 및 법안 마련('1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부 법령 제정 지원 요청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 제정을 연내 완료하여 사업추진 근간 마련 - 빈집정비, 자율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한국토지주택공사	6.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 용자의 이자율이 1~2%로 하향조정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임대주택을 연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2%이자율로 기금을 수용 받고 있음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30㎡이하 행복주택: 1% 이자율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분양 및 공임주택의 기금 용자 이자율 하향조정을 국토부에 건의('15.12) - 기재부 협의 결과 기금 추가 손실발생으로 반영 곤란
한국토지주택공사	7.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당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지속 추진을 위한 정부부처 협의 - (국토부)시설개선사업 내용 설명(1.13,28) - (국토부)공공주택 사업추진 점검회의(3.10)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자 회의(국토부,LH,시·도)(3.16) - (기재부)시설개선사업 현안사항 설명(4.20)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백서 발간 - 노후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사업지속의 필요성 근거 마련, 성과 분석 및 향후 사업시행 방향 설정 - 정부 및 국회에 지속적인 사업시행 필요성 설명 및 협의 자료로 활용
한국토지주택공사	8. 임대주택 관리직원에 대한 입주자의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직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에 대하여 관리소장·임차인대표회장·노인회 등 자치단체를 통한 지속적인 경고 및 계도 촉구('16.5)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성행위자에 대하여 고소·고발 등 법적조치 추진 ○ 주민화합 우수단지 사례 전파 - 관리소 직원의 사기진작 및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포상실시 및 사례전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토지 주택공사	9. 일괄적으로 산정·적용 중인 LH 임대주택의 관리비 인상률을 단지 특성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도록 관리비 기준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아파트 입주민 관리비 부담 경감을 위해 관리비상한선 편성기준 시행 (15.12.29)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관리비 상한선 편성기준 및 관리인력 운용기 준 수립 검토
한국토지 주택공사	10. 임대주택 특별수선 총당금을 본사로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재검토하여, 회계를 구분 관리 운용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사 관리) 자금운용의 수익성 제고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본사에서 일원화하여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성) 증권사 등 전문위탁기관을 통한 자금운용으로 수익성 제고 - (투명성) 시스템을 활용한 전자 공개 입찰로 자금운용의 투명성 강화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분관리) 특별수선총당금은 보유시재와 별도로 구분 관리하고 있으며, '97.2월 이전 사업승인분의 총당금은 별개의 계좌로 관리예정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토지 주택공사	11. 임대주택 입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단지 내 CCTV 선명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아파트 방범성능 강화방안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화질 41만화소 CCTV를 고화질 200만 화소 CCTV로 교체 기준 수립 시행 - '15년 : 2,053대 교체완료 ○ '17년까지 교체 완료 예정(33,447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 25,220대 - '17년 : 6,174대
한국토지 주택공사	12. 다가구매입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등 임대주택의 장기 공실 문제 해소를 위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p>(다가구 매입임대주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공가 해소 종합대책 수립·시행('1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안내 방법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계약률이 30% 내외인 점을 감안, 계약 안내를 공급호수의 3.5배수로 확대 - 장기미임대 입주자 직접 모집 및 입주 자격 완화 - 노후주택 철거후 재건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송파삼전 40호 행복주택으로 재건축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건설임대주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임대주택 공급개선방안 수립·시행('15.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임대물량을 운영계획에 반영하는 등 공급물량의 체계적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관리('1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운영계획 재임대 공급호수 : 35,224호 - 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정례화를 통한 모집시기에 대한 예측성 강화 - 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정례화 개선방안 시행을 통한 상담서비스 강화('16.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4회(3월, 6월, 9월, 12월 다섯째날 → 각 시행월 다섯째날·열다섯째날로 분산)에 걸쳐 전사적 모집 ○ 재임대주택 공급개선 보완방안 시행('15.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세대 공급 추가 방안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세대 공급 추가 방안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2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관련 복지재단의 대상자 추천을 통한 공급 ·설치시설 현 상태대로 예비입주지중 희망세대에 공급 ·일부 편의시설 복원후 일반세대에 공급 </div> - 장기공가에 대한 입주대상자 자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공가 입주대상자 자격 확대방안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2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일이상 5호이상 있는 단지 : 소득자격150%로 확대하여 모집시행 등 ·300일이상 초과된 주택 : 해당 및 인근단지 대기중인 예비입주자에게 선착순 계약안내 시행 등 </div>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가일수 및 재임대 공급 소요일수를 평가에 반영하여 실적 관리 * 임대촉진 노력으로 내부평가에 반영하여 임대촉진개선도, 임대관리효율성으로 평가 및 실적관리 ○ 재임대 공급 예상물량 연간계획 공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재임대 공급예상 물량 및 예비 입주자 모집시기 등을 마이홈 포털 또는 LH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매년 1월초) ○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보체계 강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간 자료 업데이트를 통해 전국 공가현황 및 세부자료 조회·분석, 공가해소대책 마련 등 체계적 실적관리
한국토지주택공사	13. 중대형 주택의 매입 임대를 지양하고, 기 매입한 중대형 주택은 리모델링 등을 통해 공급면적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매입계획 반영('16.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매입계획 수립 시 공동주택 및 도시형생활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로 매입하는 것으로 방안 수립 ○ 기 매입 중대형주택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매입 중대형주택은 공동생활가정용 또는 5인이상 가정 등에 공급추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주택의 기계설비 및 입주인 소음 민원 등 공급면적 축소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향후 노후정도를 감안하여 소형화하여 재건축 추진</p>
한국토지주택공사	14.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과 병행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적정 수준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임대주택은 최근 5년간 연평균 6.4만호 총 31.8만호 공급하였음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5년간은 연평균 5.2만호 총 26만호를 공급 할 계획으로 지역별 수요 및 택지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음
한국토지주택공사	15.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월세 보조로 개편하는 방안을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월세시장 변화 등에 대응, 전세임대제도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공사는 ‘중장기 전세임대 사업추진전략 연구용역*’을 발주 * 수행기관: 국토연구원 * * 용역기간: ‘16.04.01~11.30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용역에 포함된 ‘주택임대차 시장 변화에 따른 전세임대 발전방향’에 따라 국토부 등과 세부지원 방안 논의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토지 주택공사	16. 현재 사용중인 투수블럭의 투수능력을 점검한 후, 적절한 기준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수블럭에 대한 품질시험성적서 일체 조사 및 미흡현장 특별점검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시험성적서 조사결과 투수능력에 대한 부적정 자재는 없음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현장에 대한 품질시험 지도점검시 투수블럭에 대한 품질시험관리 적정 여부 지속 점검 추진 ○ 투수능력개선이 필요할 경우 국가적으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표준 또는 관계법령에 규정되도록 건의 예정
한국토지 주택공사	17. 층간소음 저감기술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하여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층간소음 저감신기술 선정(일체형완충재) 적용(LH전문시방서 등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년 4월 신기술공모 접수 후 층간소음 저감 신기술 2건 시범적용(서울 삼전행복주택) - '15년 10월 신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반(확대)적용 결정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토지 주택공사	18. 하도급사의 위반행위 적발 시 자체시정으로 종결하지 말고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법령 위반사항 행정처분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하도급점검시 발생한 관련법령 위반사항 273건중 256건(94%) 관련기관(지자체, 공정위) 행정처분 요청완료 * 주요위반사항 :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위반 및 기술자 배치위반, 보증서 교부위반 등 <table border="1" data-bbox="774 840 1468 1332"> <thead> <tr> <th>위반사항</th> <th>관련법령</th> <th>행정기관</th> <th>처리건수</th> </tr> </thead> <tbody> <tr> <td>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위반</td> <td>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td> <td>지자체</td> <td>116</td> </tr> <tr> <td>하도급건설기술자 배치위반</td> <td>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td> <td>지자체</td> <td>87</td> </tr> <tr> <td>지급보증서 미교부</td> <td>하도급법 제13조의2 등</td> <td>공정위, 지자체</td> <td>15</td> </tr> <tr> <td>하도급 통보위반</td> <td>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td> <td>지자체</td> <td>13</td> </tr> <tr> <td>설계변경 미반영</td> <td>하도급법 제16조</td> <td>공정위</td> <td>7</td> </tr> <tr> <td>장비대금 등 지급위반</td> <td>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td> <td>지자체</td> <td>7</td> </tr> <tr> <td>사회보험료 미반영</td> <td>건산법 제22조</td> <td>지자체</td> <td>5</td> </tr> <tr> <td>서면 미교부</td> <td>하도급법 제3조</td> <td>공정위</td> <td>3</td> </tr> <tr> <td>기타</td> <td></td> <td>지자체</td> <td>3</td> </tr> <tr> <td>합 계</td> <td></td> <td></td> <td>256</td> </tr> </tbody> </table>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기관	처리건수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지자체	116	하도급건설기술자 배치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지자체	87	지급보증서 미교부	하도급법 제13조의2 등	공정위, 지자체	15	하도급 통보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지자체	13	설계변경 미반영	하도급법 제16조	공정위	7	장비대금 등 지급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지자체	7	사회보험료 미반영	건산법 제22조	지자체	5	서면 미교부	하도급법 제3조	공정위	3	기타		지자체	3	합 계			256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기관	처리건수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지자체	116																																											
하도급건설기술자 배치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지자체	87																																											
지급보증서 미교부	하도급법 제13조의2 등	공정위, 지자체	15																																											
하도급 통보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지자체	13																																											
설계변경 미반영	하도급법 제16조	공정위	7																																											
장비대금 등 지급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지자체	7																																											
사회보험료 미반영	건산법 제22조	지자체	5																																											
서면 미교부	하도급법 제3조	공정위	3																																											
기타		지자체	3																																											
합 계			256																																											
한국토지 주택공사	19. LH 건설 아파트의 하자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제적 품질관리시스템 구축으로 2년 연속 호당하자발생 건수는 감소추세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년 : ▲6%(0.31→0.29) '15년 : ▲21%(0.29→0.23) ○ 품질향상·하자저감 종합대책 수립 및 지속적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자관리센터 운영강화 등 총 76건 완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사업 단계별(설계~입주) QC활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단계 : 주택품질전문가 운영 등 - 시공단계 : 하자다발 6대공종 성능향상 등 - 준공단계 : 준공품평회 신설 등 - 입주단계 : 입주자 역평가 운영 등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 입장에서 하자가 저감되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품질시스템을 강화하겠음
한국토지 주택공사	20. 건설현장 임금체불 근절방안을 모색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 - 체불업체 이력관리제도 - 공사대금 지급현황 안내판 설치 운영 - 기성대금 지급사실 SMS 문자전송 - 설·추석 등 취약시기 집중관리 ○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업체 직접체불 : 체불금액에 따라 PQ 신인도 평가에 반영 - 하수급업체 체불 : 수급업체 경고장 발급 및 하수급업체 관리하수급인 지정으로 공사참여 제한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연계방식 대금지급확인시스템」 확대 추진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등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노력 지속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	21. 입찰참가 제한업체가 우수 건설업체로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선정 기준을 보완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건설업체 선정시 입찰참가제한업체가 우수건설업체로 선정되지 않도록 LH 시공평가업무지침에 기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도 우수업체 선정시(2015년도 건설업체 대상) 입찰참가제한 결격사유 확인 후 최종 선정 완료 															
한국토지주택공사	22. LH 건설현장에서 불량 내화충전재 및 불량 철근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화충전재)자재 성능시험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H 아파트 공사 현장에 적용된 내화충전재에 대해 '15년 하반기 성능시험 실시 - 시험결과 관련법령에 따른 성능기준 만족 <p>* 제조사별 성능시험 결과</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33%;">제조사명</th> <th style="width: 33%;">시험결과</th> <th style="width: 33%;">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세이프코리아</td> <td>기준 만족</td> <td>건설기술연구원</td> </tr> <tr> <td>유네트코리아</td> <td>기준 만족</td> <td>건설기술연구원</td> </tr> <tr> <td>영진SP산업</td> <td>기준 만족</td> <td>건설기술연구원</td> </tr> <tr> <td>경일플라스틱산업</td> <td>기준 만족</td> <td>건설기술연구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근)현장 품질시험 지도,점검 실시(5.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춘천우두지구 조성공사 등 41개 공구 	제조사명	시험결과	비고	세이프코리아	기준 만족	건설기술연구원	유네트코리아	기준 만족	건설기술연구원	영진SP산업	기준 만족	건설기술연구원	경일플라스틱산업	기준 만족	건설기술연구원
제조사명	시험결과	비고															
세이프코리아	기준 만족	건설기술연구원															
유네트코리아	기준 만족	건설기술연구원															
영진SP산업	기준 만족	건설기술연구원															
경일플라스틱산업	기준 만족	건설기술연구원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시험 실무 교육 실시 - 행정중심복합도시 1-3M5BL 아파트건설 공사 3공구 등 43개 공구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화충전재)자재 품질관리 철저 - 내화충전재에 대한 철저한 자재검수를 통한 불량 자재 현장 반입 원천 차단 ○ (철근)현장 품질시험 지도, 점검시 자재 선정 및 품질시험 등 철강재 품질관리 적정성 중점 확인 ○ 현장감독 및 수급업체 품질관리자 등에게 품질관리 교육의 지속적인 실시(현장 방문교육 및 품질관리자 워크숍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23. 토지은행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토지은행적립금을 적극 활용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은행적립금 활용을 위한 정부 입법 발의를 추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15.12)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은행적립금 활용을 위한 후속조치 추진 - 기획재정부와 자본금 전입 협의('16.9) 등을 거쳐 사업 재원으로 활용('16.12) * 정책사업 추진 등으로 사업 확대가 필요할 경우 정부 재정지원 건의를 추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토지 주택공사	24. 토지은행에 국가재정을 지원하는 등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은행적립금 활용을 위한 정부 입법 발의를 추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15.12)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은행적립금 활용을 위한 후속조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와 자본금 전입 협의('16.9) 등을 거쳐 사업 재원으로 활용('16.12) * 정책사업 추진 등으로 사업 확대가 필요할 경우 정부 재정지원 건의를 추진
한국토지 주택공사	25. 주택관리공단과의 임대 주택 관리 위탁계약 주기, 위탁업무 범위, 위탁수수료 등을 적정 수준으로 재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 약정체결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부 중재로 289억원에 약정체결 ('15.10.30.)
한국토지 주택공사	26. LH와 주택관리공단 간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 약정체결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부 중재로 289억원에 약정체결 ('15.10.30.)
한국토지 주택공사	27. 간부직원 등의 성희롱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고위직에 대한 징계 수위 강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규정 시행세칙 개정('15.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性 관련 비위행위자가 간부직원일 경우 가중조치(1단계 위 징계 의결) 신설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性 관련 비위행위 2회이상 적발 시 해임·파면 등 면직처분 - 性 관련 비위행위기록 말소 적용 제외 - 性 관련 비위행위 심의기구 격상(보통 → 중앙인사위원회) ○ 성희롱 예방 교육 시행(쫄직원 연간 4시간 의무 이수제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쫄직원 대상 집합교육('15.12월 2회) - 쫄직원 대상 사이버교육('15.8~12월) ○ 성희롱 고충 처리 매뉴얼 작성·게시('16.4) ○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 제작·배포 추진 ○ 성희롱 예방 교육 시행(쫄직원 연간 4시간 의무 이수제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쫄직원 대상 집합교육 - 쫄직원 대상 사이버교육
한국토지주택공사	28. 감사원 감사결과를 반영하여 정년퇴직 시기를 현행 연1회에서 연2회로 확대 운영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 및 H노조 단체교섭 사측 안건에 포함('16.3) * 노조 동의 및 직원 과반수 동의 필요 ○ 임금 및 근로조건 단체교섭(H노조 '16.4.11, L노조 및 H노조 5.20)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노-사 간담회('16.4.12) - 실무교섭 2회 개최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조 임금 및 근로조건 단체교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반수 노조 동의 필요 ○ 인사규정 개정안 양노조 의견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조건 협약 개정에 반영, 타경영현안과 일괄타결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	29. 지역 근무자의 선정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LH인 상(賞) 수상자 선정 기준을 보완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H인 상 개편방안 수립·시행('1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한 심사방법 개선(2단계 → 3단계로 심사강화, 심사위원에 지역본부 직원 참여, 공적 검증 강화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30. 본사 지방이전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입직원 공채시 지역인재 우대제도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목표제(10%) 도입 및 서류전형 가점(5%) 부여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인재 우대제도 지속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신입직원 채용 공고시 적용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토지 주택공사	31. 도시재생사업과 및 주거복지사업을 확대하는 LH의 기능조정이 공사의 서민주거 안정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공사의 부채감축 방안을 변경하는 것을 관계 기관과 협의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H 기능조정안을 반영한 중장기 재무 관리계획('15~'19) 수립('15.9) - 임대주택 지속 공급 및 주거급여, 취약 계층 지원 등 주거 종합서비스 기능 강화 - 도시재생사업 투자 비중 확대로 도시 환경 개선 및 국민주거 생활 질 향상 추진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16~'20) 수립 - LH 기능조정안 반영하고, 공사 부채 감축 기조 유지 - 수익사업 비중 축소에 따라 기존사업 수익성 강화 및 임대손실 저감방안 반영 - 신규사업 투자 반영 등으로 공사 지속 가능체계 구축 - '15년 결산 결과 및 정책변화 등 반영
한국토지 주택공사	32. LH 건설 아파트단지 내 상가의 입찰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교육시행 - 예정가격 결정시 시중시세가 반영될 수 있도록 상가 담당자 집합교육 ('16. 4)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단계에서 단지의 입지·규모별 적정 상가계획 호수 기준 재검토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토지 주택공사	33.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관련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 의결('11.9.23)로 판결과 동일한 유형의 자체 택지개발지구 임대단지에 대하여 소송 없이 반환하기로 결정 - 현재 35개 단지 중 29개 단지에 대하여 반환절차 진행중 <p style="text-align: right;">[‘16.5월 기준]</p> <table border="1" data-bbox="794 779 1444 976"> <thead> <tr> <th rowspan="2">단지명</th> <th rowspan="2">호수</th> <th colspan="2">반환내역(억원)</th> <th rowspan="2">지급율</th> </tr> <tr> <th>반환 대상금액</th> <th>반환 금액</th> </tr> </thead> <tbody> <tr> <td>동두천송내4 등 35개단지</td> <td>31,554</td> <td>1,582</td> <td>1,337</td> <td>85%</td> </tr> </tbody> </table> <p>* 미소송 4, 소송계류 15, 소송종결 16개 단지</p>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이전, 연락두절 등 사유로 반환이 지연되는 세대에 대해 적극적인 소재지 파악 등을 통해 최대한 조기반환 ○ 반환금액 산정에 대한 다툼으로 소송 중인 단지는 소송 종결후 지급 	단지명	호수	반환내역(억원)		지급율	반환 대상금액	반환 금액	동두천송내4 등 35개단지	31,554	1,582	1,337	85%
단지명	호수	반환내역(억원)			지급율									
		반환 대상금액	반환 금액											
동두천송내4 등 35개단지	31,554	1,582	1,337	85%										
한국토지 주택공사	34. 상업용지의 최고가 낙찰제로 인하여 분양가 및 임대료가 과도하게 상승할 우려가 있는바,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개정(2015.11.11) - 자족시설용지 허용용도(판매시설 등 허용) 확대로 가격하락 효과 기대(제2조) - 공모방식 적용가능 대상 사업지구 면적제한(330㎡) 폐지(13조의2 제5항)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주택 건설 등 사업손실 보전을 위해 상업용지에 대해서는 입찰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측면이 있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가 낙찰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지구여건에 맞게 공모방식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	35. 이주자택지 제공 기준의 개정 및 공급단가 인상을 신중하게 재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자택지 제공 기준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시 협의 보상자와 수용재결보상자 간 공급순위 차등부여제도 폐지('15.5) <table border="1" data-bbox="774 1189 1465 1570"> <thead> <tr> <th data-bbox="774 1189 1118 1234">개정전</th> <th data-bbox="1118 1189 1465 1234">개정후</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774 1234 1118 1397">(1순위) 토지 및 지장물 전부를 협의양도하고 공사가 제시한 기한까지 자진철거 및 이전한 분</td> <td data-bbox="1118 1234 1465 1375">(1순위) 보상금 수령후 공사가 제시한 기한까지 이전한 분</td> </tr> <tr> <td data-bbox="774 1397 1118 1570">(2순위) 토지 및 지장물 중 일부라도 협의보상이 안되거나, 공사가 제시한 기한까지 이전하지 아니한 분</td> <td data-bbox="1118 1375 1465 1570">(2순위) 보상금 수령후 공사가 제시한 기한까지 지구 밖으로 이전하지 아니한 분</td> </tr> </tbody> </table>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자택지 공급단가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이 필요할 경우, 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운영하는 국토부와 협의하여 신중하게 검토 추진 	개정전	개정후	(1순위) 토지 및 지장물 전부를 협의양도하고 공사가 제시한 기한까지 자진철거 및 이전한 분	(1순위) 보상금 수령후 공사가 제시한 기한까지 이전한 분	(2순위) 토지 및 지장물 중 일부라도 협의보상이 안되거나, 공사가 제시한 기한까지 이전하지 아니한 분	(2순위) 보상금 수령후 공사가 제시한 기한까지 지구 밖으로 이전하지 아니한 분
개정전	개정후							
(1순위) 토지 및 지장물 전부를 협의양도하고 공사가 제시한 기한까지 자진철거 및 이전한 분	(1순위) 보상금 수령후 공사가 제시한 기한까지 이전한 분							
(2순위) 토지 및 지장물 중 일부라도 협의보상이 안되거나, 공사가 제시한 기한까지 이전하지 아니한 분	(2순위) 보상금 수령후 공사가 제시한 기한까지 지구 밖으로 이전하지 아니한 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토지 주택공사	36. 공공임대리츠의 사업 추진시 중소기업제품 사용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임대리츠 사업관련 중소기업제품 구매지원 업무협약」 체결('15.12.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당사자: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토지주택공사 -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의무화 * 공공임대리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가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 (품질미흡 또는 납기지연시에는 예외) - 구매단가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사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시 발주자와 계약한 도급단가 이상으로 구매토록 규정 - 납품대금 현금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기성수령 후 30일 이내 현금으로 대금 지급 의무화 ○ 공공임대리츠 공사도급계약조건 개정('1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내용을 공사도급계약조건에 반영 하여 실행력 담보 * 적용기준: 신규 영업인가를 받는 공공임대 리츠 공사부터 적용
한국토지 주택공사	37. 부천 오정물류단지 내 대형마트(코스트코) 입점을 재검토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분양절차상 문제 없음으로 종결처리('15.2.25) - 대형마트 용도제외하고 공급추진(2회) 후 지구단위계획 허용용도로 재공고 추진한 사항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코스트코는 부천시에 건축허가 신청 중으로 일방적인 계약 해제는 어려운 상황</p> <p>- 부천시의 건축허가 심의 반력에 대한 행정심판 결과 건축허가 심의를 진행하도록 결정('15.12월)되어 건축허가 심의 중</p> <p>< 향후 추진계획 ></p> <p>○ 코스트코에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방안 지속 촉구</p>
한국토지주택공사	38. 성남 은행2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피해가옥 보수 문제를 성남시와 적극 협의할 것	<p>< 조치실적 ></p> <p>○ 피해가옥 조사 완료('15.12)</p> <p>- 조사대상: 709가구</p> <p>- 피해가구: 368가구</p> <p>○ 가옥 보수및보상('16.05)</p> <p>- 총 312가구(시공사275, LH37)</p> <p>< 향후 추진계획 ></p> <p>○ 잔여 56가구 보수및보상 완료</p> <p>- 가옥보수 대상에서 누락주장하는 26가구는 주거복지차원에서 선별적 보수 검토</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토지 주택공사	39. 대전 지역 등의 중단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조속히 재개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동2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물건조사 착수('15.09) - 정비계획변경 입안제안('15.11) ○ 천동3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비계획변경 입안제안('16.02) - 민간공동시행 사전설명회('16.04) ○ 구성2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테이 연계형 추진방안 검토('15.12) -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개최('16.03) ○ 소제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방안 지역구 의원보고('16.05) ○ 효자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을 위한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담회 시행 3회('15.10~'16.01) - 정비구역축소, 민간공동사업 등 사업 추진방안 주민설명회 개최('16.01)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동2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비계획 변경('16.08) - 행복주택연계형 주환사업 사업시행 인가('16.12) ○ 구성2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테이 연계형 주환사업 주민동의('16.11)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동3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비계획 변경('16.08) - 민간공동 주환사업시행자 공모('16.08) ○ 소제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및 주민 협의를 통한 사업추진 방향 결정('16.12) ○ 효자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 및 지자체 수용여부에 따라 사업추진 방향 결정('16.12)
한국토지주택공사	40. 특허경쟁력 강화 및 기 보유 특허의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권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14.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시스템 구축 - 사용자 위주 시스템 개선 ○ 지식재산권 위원회 운영('15.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질의 특허에 대한 포상 시행 * 총11건, 13,337천원 - 양질의 특허 제안자에게 인사가점 부여 * 자체 심사결과 기준등급(4등급) 이상 특허 발명자(2인)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매뉴얼 작성 및 배포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토지 주택공사	41. 남양주별내지구 담터 지하차도 설치에 대 한 대안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양주별내지구 담터사거리 교통영향 분석용역」 시행 - 2015년 담터사거리 서비스수준 (지하차도 설치전) → E - 2021년 담터사거리 서비스수준 (지하차도 미설치시) → FF (지하차도 설치시) → C <p>* (신호교차로 서비스수준) C : 약간 많은 통행량으로 속도 및 통행제한 E : 운전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한의 지체한계 FF : 심각한 과포화 상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시행결과 별내지구 입주완료시점 (2021년)에 지하차도 설치는 필요한 것으로 제시됨에 따라 ‘15년 하반기 공사착수 및 현재 정상적으로 공사시행중 (공정 5%)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U-turn 차로 설치* 및 통학차량 전용 “안전승 하차시설” 설치** 예정 <p>* 삼육대 정문 앞 삼거리 ** 삼육초등학교 인근 버스정차대</p>

공백

한국수자원공사

공백

□ 한국수자원공사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 수자원공사	1. 4대강사업 부채 원금 상환을 위해 적극적인 자구노력을 실시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구노력 기반(先 자구노력 + 後 재정 지원)의 4대강 부채 대책 마련 (국가정책조정회의, '15.9.24) ○ '15년 부채감축 목표(5,599억원) 145% 달성 (8,132억원) 등을 통해 4대강 부채 원금 2,136억원 상환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을 성실히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도 높은 자구노력('15~'36년, 5.55조원)과 재정지원('16~'31년, 2.43조원)을 통해 4대강 부채 상환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
한국 수자원공사	2. 4대강 보에 과도한 하자보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자기간 내에 주기적(2회/년)으로 하자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자기간 만료 전 완벽 보수 시행 중 - 현재 시공사에서 보수 시행 중 * (하자기간) 보 구조물 10년, 수문 10년, 바닥보호공 5년, 수소력발전소 7년 등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 수자원공사	3. 4대강 보 안전에 대해 철저히 관리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안전점검, 수중모니터링, 모의훈련 등을 통한 보 안전 관리 실시 - 보 구조물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해빙기·홍수기 등 특별점검 실시 * (안전점검) 정기점검(1회/반기), 정밀점검(1회/1~3년) 등 * 16개보는 정밀점검('15) 결과 A~B등급으로, 보 안정성 확인 - 수중 구조물 및 하상변동은 정기적으로 수심 측량을 실시 - 만일의 상황에 대비 매뉴얼 작성, 모의 훈련 실시, 개인 임무카드 보유 등 위기 대응체계를 강화
한국 수자원공사	4.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후속 조치인 “4대강 보의 누수 원인 조사” 용역 수행자 재선정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점검에 대한 능력과 용역결과의 신뢰성 및 객관성 확보 등을 검토하여 용역 수행자 선정('15.3.15) - 다기능보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한 1종 시설물로, 이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국내 최고 전문기관으로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용역은 정상적으로 과업 완료('16.4.27)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 수자원공사	5.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수자원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령댐 도수로 조기 통수('16.2.22)로 충남서북부 지역 가뭄 극복에 활용 * (한국농어촌공사, '16. 2) 공주보~예당지 및 상주1지구 도수로 사업 착수 ○ 보 및 독높임저수지 확보 용수 활용방안 및 활용 제약사항 개선대책 수립 중('15.4~) * 4대강 수자원 활용 개선방안 용역(16억원, '15.4~'16.12, 국토부·K-water) ○ 용역 결과를 토대로 4대강 수자원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예정 - 물 공급시설 및 제약시설(취·양수장 등) 개선 세부계획(안) 수립 - 4대강 용수 활용에 따른 법·제도 및 운영규정 개정·보완사항 제시
한국 수자원공사	6. 충남지역 가뭄 해소를 위한 백제보~보령댐 도수로 건설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령댐 도수로 건설공사 착공('15.10.30) - 임시 시설공사 완료('16.1.22) - 임시 용수공급 개시('16.2.16) - 통수식 행사 개최('16.2.22)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 수자원공사	7. 노후화된 상수도의 개량을 위한 수도시설의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시설 안정화사업 계획 수립 및 국가계획(수도정비 기본계획) 반영 ('15.8) <li style="padding-left: 20px;">* '15년까지 노후관개량 188km, 관로복선화 12km 시행 ○ 하천횡단관로 등 취약시설 우선 개선으로 수도사고 저감 <li style="padding-left: 20px;">* 사고건수 : '11년 77건 → '13년 51건 → '15년 41건 ○ 수도사고 예방 및 중단없는 용수공급을 위해 안정화사업 적기 시행 <li style="padding-left: 20px;">- '30년까지 3조9천억원을 투자하여 노후관개량 992km, 관로복선화 937km 등 시행
한국 수자원공사	8. 유수율 제고와 저소득층의 물공급 지원 등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수돗물값 현실화 방안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가뭄에 따른 물절약 효과, 원가 부담 등으로 인하여 수돗물값 현실화가 필요한 실정 <li style="padding-left: 20px;">- 요금 인상을 통해 시설 안정화(3.9조원) 등 투자재원 확보 및 물 수요관리 강화 필요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부 및 기재부 지속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요금 인상 추진 ○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 방안 마련 및 수돗물공급규정 개정 시행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 수자원공사	9. 댐 건설을 통한 용수 공급시 전에 비해 생산 원가가 높아져 물값이 비싸지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현행 물 공급 정책의 전환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수자원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용수공급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댐-보 연계운영, 댐 긴축운영 등을 실시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댐 재개발, 유수율 제고 등 기존 수자원시설의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
한국 수자원공사	10. 일부 지자체가 댐용수를 사용한 후 물값을 미납하고 연체하는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천시) 댐 물값 납부의 당위성 지속 설명 결과 '16년 7월 중 미납액 납부 예정 ○ (춘천시) 미납 물값 납부에 대한 상호 간 합의 도출('15.12) <p>* 납부시기 등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중이며 연내 갈등 완결 예정</p>
한국 수자원공사	11. 노후화된 댐의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댐 시설 노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용수댐 및 다목적댐 안전성강화 사업 추진 중('14년~) - (1단계) 용수댐 안전성 강화 기본계획 수립 완료('14.12) 및 사업 시행 ※ 공사성격 등에 따라 자체사업과 국고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 중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사업) '14년부터 제체보강, 계측시설 설치 등 지속 추진('16년 5건) * (국고사업) 비상방류시설 신설 등 대규모 시설개선 사업 '17년 국고예산(6.3억원) 신청 - (2단계) 15개 다목적댐 안전성 강화 기본계획 수립 중('15년~)으로 계획 수립 완료 후 사업 시행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2단계 사업 지속추진 및 '17년 국고 예산 반영
한국 수자원공사	12. 고질적인 댐 기름유출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예방 및 대처능력 강화 - 오염행위 감시·계도를 위한 댐주변 청결지킴이 위촉 운영 중(21개 댐 240명) * 댐별 감시권역 지정 상시 감시활동 실시 - 관계기관 협업으로 차량통행제한 안내판, 도로안전펜스 등 시설안전점검 주기적 실시 - 유해물질 취급사업장 사고예방을 위해 갈수기 국토부·환경부 합동 오염원 점검 및 개선조치 강화(2회→4회) - 수질오염사고 대응매뉴얼 보완 및 유관 기관 합동 모의훈련(분기) 실시 * 유해물질 확산예측 시스템 구축·활용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 수자원공사	13.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목적에 맞는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 수립 지침 시행('15.10) *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등 규모 있는 사업 추진, 지역민 의견수렴을 통한 계획 수립 및 정산 절차 강화 등 ○ '16년도 지원사업 계획 사전 모니터링('15.11) - 단순 지원·반복사업 예산 축소 * 농로포장, 배수로 정비, 비료지원 등 관련 항목 예산 전년대비 27억원 감소 ○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및 사업 적정성 평가체계 도입 ('16.7)
한국 수자원공사	14. 주암댐 등 댐주변 냉해 피해 구제에 만전을 기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 댐주변 냉해 피해 보상 실적 - 주암댐 12백만원, 영천댐 22백만원 * 보상규모는 구조물 개선과의 경제성 비교를 통해 선정 ○ 불가피하게 냉해피해 발생 시,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공정한 평가를 통해 보상 시행
한국 수자원공사	15. 경남·부산권 맑은물 공급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부산지역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낙동강 강변여과수 개발사업(68만톤/일) 추진 중 * 남강댐 여유량(65만톤/일) 공급은 경남도와 부산시의 합의를 거친 후 추진 예정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학·관 공동연구단 구성('12.6)으로 배후지 영향을 공동조사기로 합의('13.6), 시행완료('15.4.30) - 조사에 필요한 데이터 제공을 위해 시험집수정(1공)을 시공완료('15.2)하여 1년간 시범운영('15.5월~'16.5월) - 갈등 해소를 위해 창녕지역 주민과 스킨십 등 소통확대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수영향조사 결과에 대해 창녕지역, 학계전문가와 협의 추진 및 합의 도출 후 사업 추진
한국 수자원공사	16. 경인아라뱃길의 순기능을 적극 홍보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변화토록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레저) 볼거리·즐길거리 등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역대표 문화행사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딩보트(4월), 카약&봄꽃축제 및 경기국제보트쇼(5월) * '15년도 총 895만명 아라뱃길 내방 ○ (홍보) 긍정여론 형성을 위해 다양한 문화행사 유치, 언론네트워크 및 언론 홍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부 사진전, 해수부 국제 드래곤보트대회('16.10) * 각종 행사에 따른 보도자료 기사화율 100% 달성 * 전문가기고, 기획특집 등 언론 노출 강화 및 기자간담회, 프레스투어와 기획기사 지속 추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 수자원공사	17. 부산 에코델타시티사업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단계(강동동) 1공구 조성공사부터 입찰 시 ('15.12) 지역업체 참여비율 확대 - (공동도급) 기술평가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및 입찰공고 시 30% 이상 참여 권고 <p style="text-align: center;">[기술평가 시 가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지역업체 참여비율</td> <td style="text-align: center;">10%~20%</td> <td style="text-align: center;">20%~30%</td> <td style="text-align: center;">30%이상</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가점</td> <td style="text-align: center;">1점</td> <td style="text-align: center;">2점</td> <td style="text-align: center;">3점</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 입찰공고 시 지역업체와 50% 이상 하도급 권고 <p>* 하도급사 선정은 발주기관의 관여가 어려우나, 권장비율(50%)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독려</p>	지역업체 참여비율	10%~20%	20%~30%	30%이상	가점	1점	2점	3점
지역업체 참여비율	10%~20%	20%~30%	30%이상							
가점	1점	2점	3점							
한국 수자원공사	18. 시화MTV 입주기업 토지소유권을 조기 이전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소유권 조기 이전을 위해 시화MTV 조성사업(2차지역) 부분준공 완료('15.10) ○ 시화MTV 2차지역 내 입주기업 토지소유권 이전 완료('15.12) 								
한국 수자원공사	19. 홍수 방지를 위한 지하수 저류시설 등 지하수 시설 운영을 확대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해안 지하수댐 2개소 예산 반영 추진 - '15년 추경 및 '16년 예산 협의(기재부) <p>* (예산 미반영 사유) 특정지역 용수공급은 지자체 또는 환경부(지방상수도) 소관사업</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수댐 2개소(안마도, 대이작도) 시범사업 선정(국가정책조정회의, '1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수댐 2개소(안마도, 대이작도) 시범사업 '17년도 예산 협의 중(국토부, 기재부) * 안마도 10억원, 대이작도 5억원 ○ 산간 등 상습가뭄지역 및 미급수지역 지하수댐 등 수원다변화를 통한 수원안정성 확보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년도 기본조사 용역비 협의 중(국토부, 기재부) * 기본조사 용역비 5억원(총용역비 10억원)
한국 수자원공사	20. 지류하천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홍수재해 통합관리 등 대책을 강구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water의 물관리 기술과 경험을 활용하여, 첨단 ICT 기반의 지자체 홍수통합관리체계 구축 지원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 지자체 완료, 19개 지자체 구축 중('16.5월 기준) * 구축내용 : 유관기관 재난정보 통합, 실시간 모니터링·원격제어 시스템, 홍수대응기준 수립 등 ○ 지자체 홍수통합관리방안 국가정책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법·제도 정비, 국고지원 등 ○ 홍수통합관리체계 구축 전국단위 확대 추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 수자원공사	21. 내성천 모래유실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댐 건설에 따른 모래저감 영향 최소화를 위해 구조적·비구조적 대책 시행 - 구조적 대책('15년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댐상류(13km 지점) 유사조절지 설치 * 댐내 배사구(5m×5m) 1개소 설치 * 댐하류 자연형 하상보호공(3EA) 설치 - 비구조적 대책(시행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댐하류 정기 하상측량(홍수기 전후 연 2회) 실시 * 착공~준공후 5년까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시행 * 미래 지속가능한 내성천 보전방안 마련 및 추진을 위한 영주댐 「지역협의체」 구성·운영('16.3) · 정부, 지자체, K-water, 민간전문가 참여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래영향 원인분석 및 필요시 대책마련 등 후속 조치 추진
한국 수자원공사	22. 남해 EEZ 인근 골재채취선이 해상사격 훈련 시 피격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해EEZ 골재채취선 안전관리 방안」 수립('15.12.10) - (일정통보) 사격훈련일정 및 군훈련 중 운항 금지 통보(공문시행, SMS 통보) - (통제수단) 허가조건으로 군사훈련 2시간전 미이탈시 경고조치 및 재발시 채취중지(3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보고) 선박고장으로 훈련구역 미이탈시 제3함대 유선보고 * (해군 제3함대) 레이더 확인후 군사훈련시간 조정 ○ 해군 제3함대와의 유기적인 업무망 구성 - 제3함대 관계자와 간담회('16.3.4) 및 지속적 실무협의('16.3.23, '16.4.28)
한국 수자원공사	23. 남해 EEZ에서의 골재채취에 따른 어업 피해 및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골재채취 광구의 재선정과 관련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해EEZ 골재채취단지 지정변경(연장) 추진계획」 수립('15.9.3) ○ 어업피해조사 최종보고서 국토부·해수부 제출('15.11.20) 및 어민설명회 개최('15.11.27) ○ 골재단지 변경 공청회 개최를 통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완료('16.5.4) ○ 해수부 의견('16.5.9)을 반영한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관리계획 수립
한국 수자원공사	24. 정수장의 수산화나트륨 사용 저감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화나트륨은 정수장으로 유입되는 원수 특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만 정량 주입장치를 활용하여 극소량을 적정 주입 * 환경부 고시 제품만 엄격히 사용 중이며, 물에 주입되는 즉시 무해한 성분으로 바뀌어 수돗물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없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간 수질모니터링 및 최적주입량 결정을 통해 사용량 최적화 ○ 다중 안전장치 점검 철저 등 취급 안전 관리 강화
한국 수자원공사	<p>25. 대형공사의 불공정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p> <p>- 공사 설계변경 시 단가를 낮게 책정하여 건설사에 부담을 주는 행위</p>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등)에 따라 설계변경 시 적정단가를 반영 중 * 2015년 정부(국토부) 주관으로 시행된 불공정관행 개선 T/F에서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부당 조정” 과제에 대해 “적정운영 중”으로 평가받음 ○ 설계변경 시 단가적용 방안에 대한 업무담당자 교육 수시 실시 - 건설현장 간담회를 통한 불공정관행 및 개선사례 전파('16.3.15~3.31) ○ 불공정 행위 발생방지를 위해 실무자 역량 강화 및 지속적인 교육 실시
한국 수자원공사	<p>26. 대형공사의 불공정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p> <p>- 점검·정비 사업을 일부 기업(수자원기술 등)이 독·과점하는 행위</p>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기업 독과점 해소를 위해 입찰참여 조건 완화 시행('11년 이후) * 발주규모 세분화, 참여기술자 평가기준 완화, 유사용역 인정범위 확대 등 ○ 수자원기술(주)의 점유율 지속 하락 및 입찰 참여업체 수 지속 상승 등 점검정비 사업 완전 공개경쟁체계 구축 * 수자원기술 점유율 : ('06)90.9% → ('15)62.8% * 입찰 참여업체 수 : ('06)3개사 → ('15)9개사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 수자원공사	27.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계획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설계피드백을 통해 설계변경 최소화 과제 매년 발굴 시행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년 11개 과제, '15년 14개 과제 추진 ○ 자체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내부통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VE → 기술심의 → 일상감사 ○ 설계변경이 잦은 최저가 낙찰제 문제점 보완을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도입('14.11)
한국 수자원공사	28.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용역계약 시 지역제한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계약의 지역제한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고시금액(2.1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용역에 기 시행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의 성격, 현장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부분적 미시행 * '15년 발주 902건 중 633건(고시금액 미만)은 지역제한 시행(70%)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제한입찰 비율 향상을 위해 용역 성격 및 현장여건상 어려운 사항은 제도적 보완을 통해 점진적 시행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엔지니어링 등 기술용역은 지역제한 시 참여 업체가 극히 작거나, 없는 경우 발생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 수자원공사	29. 퇴직직원 모임인 수우회의 특혜 제공 의혹을 해소하고 현직 임직원을 탈퇴시킬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직 재직자가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었던 수우회 정관 개정 으로 조치 완료('16. 3) - 정관개정 요청 공문 발송('15.10) - 수우회 이사회 개최('15.11) - 수우회 총회 의결('16. 3)

공백

한국도로공사

공백

□ 한국도로공사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 도로공사	1. 고속도로 건설 시 교통 수요예측을 보다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지침(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및 제재방안(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마련으로 철저한 수요예측을 시행 중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벌칙조항 과태료(500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 벌칙(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벌칙 및 과태료 대상 - (법 제116조제5항)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와 국가교통조사서를 교통 수요의 분석 및 예측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지 아니한 평가대행자 - (법 제122조제3항) 교통조사지침 또는 투자평가지침의 내용과 다르게 교통 수요를 조사 분석하거나 예측한 평가대행자
한국 도로공사	2. 고속도로 휴게소 청년 창업매장 조기정착 대책 및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전 워크숍 및 창업 후 맞춤형 컨설팅 등으로 조기정착 및 성공적 창업 지원 ○ 창업매장의 정기평가를 통한 개선사항 피드백 ○ 휴게소 운영 서비스평가를 개선하고 창업자의 건의사항(피복, 판매메뉴, 영업시간 조정 등)을 수용하는 등 운영방안의 실효성 제고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평가지표(가점부여 기준) 개선</p> <table border="1" data-bbox="821 369 1433 533"> <thead> <tr> <th>구분</th> <th>당초</th> <th>개선</th> </tr> </thead> <tbody> <tr> <td>운영기간</td> <td>3개월 이상</td> <td>6개월 이상</td> </tr> <tr> <td>매출액</td> <td>-</td> <td>일반 200천원 지식 150천원</td> </tr> </tbody> </table>	구분	당초	개선	운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매출액	-	일반 200천원 지식 150천원
구분	당초	개선									
운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매출액	-	일반 200천원 지식 150천원									
한국 도로공사	3. 고속도로 휴게소에 지역 특산물 판매 활성화 방안 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게소 농산물판매점 활성화 대책 수립 완료 - 건축표준 설계로 노후화 된 건축물의 시설현대화 추진 - 도소매 운영방식을 직거래방식으로 전환 - 농산물판매점 설치·운영기준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원칙 : 휴게소 소재 관할지자체 · 설치면적 : 50㎡(직거래 도입시 100㎡) · 판매품목 : 휴게소 소재 광역지자체 한정 - 광역지자체와의 MOU 체결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 유도 <p>* MOU 체결 현황(2015) : 경상북도 외 3개 지자체</p>									
한국 도로공사	4. 부적정한 휴게시설 운영 권 임대 입찰업무 및 임 시운영 계약에 대한 대 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운영) 계약해지(만료)시설 일반공개 경쟁입찰 시행 및 불시반납(반납지연) 시설 제한경쟁입찰(운영서비스평가 우수업체 포함) 도입 등 임시운영 제도개선을 완료('15.9)하였으며, 감사결과 지적된 임시운영 휴게시설 5개소는 조기 입찰(영천, '15.12) 및 직영전환(문막, '15.12) 완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업무) 회계법인의 동종업종 매출액 확인서를 제출토록 입찰제도를 개선('13.11)하여 이후 시행된 입찰('15.3 및 '15.9)부터 동 제도를 적용 중 - (개선안) 하나의 법인이 다수의 계열사를 통해 입찰서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조치 				
한국 도로공사	5. 미납 통행료 징수대책 및 과실미납에 대한 부가통행료 부과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액상습체납차량 형사고소 및 언론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소현황 : 19건(편의시설 부정이용죄) - 언론보도 : 2건, 기획보도 : 3건 ○ 고객과실 미납차량 부가통행료 부과 기준 개선 <table border="1" data-bbox="762 1294 1465 1617"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50%;">현 행</th> <th style="width: 50%;">개 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left; padding: 5px;">· 미납발생건 연간 20회 이상부터 부과 (발생기준)</td> <td style="text-align: left; padding: 5px;">· 미수납건 연간 20회 이상부터 부과 (미수납기준)</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납통행료 자동납부 서비스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카드사 확대 유치 - 가입고객 유치를 위한 다각적 홍보 ○ 미납통행료 지불수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의점, 은행365코너 CD기 신용카드 납부수단 확대 	현 행	개 선	· 미납발생건 연간 20회 이상부터 부과 (발생기준)	· 미수납건 연간 20회 이상부터 부과 (미수납기준)
현 행	개 선					
· 미납발생건 연간 20회 이상부터 부과 (발생기준)	· 미수납건 연간 20회 이상부터 부과 (미수납기준)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 도로공사	6. 하이패스 장치 오류방지 및 생활밀착형 하이패스서비스 도입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이패스 에러감소를 위한 품질관리 방안 수립 및 시행('1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성공률 향상을 위한 시스템 성능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전압단말기 통신 데이터 분할 송신 및 재통신 횟수 증대(20회→255회) - 찾아가는 품질관리 서비스 시행*으로 상습에러발생 단말기 관리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러 다발 법인 고객 대상의 올바른 단말기 사용법 안내(부착위치, 배터리, 카드) 및 교체 조치 요구 - 통차, 안테나 중심의 노후설비 교체 ○ 하이패스 유지관리 업무프로세스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품질 자동측정장비 운영('15.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주기 : 월 2회(연간 24회) - 품질관리 홈페이지 개선으로 종합적인 대응, 관리 체계 구축('15.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별, 모델별 에러현황 통계데이터 생성으로 특별관리 대상 집중관리 ○ 생활밀착형 하이패스서비스 도입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 하이패스 도입 업무협약(MOU) 체결(인천공항 및 김포시, '1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이패스 단말기를 통한 주차요금 자동결제 * 인천공항김포시 서비스 예정('16.9) - 서울 만남의 광장 주차장 하이패스 서비스 개시('16.1)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 도로공사	7. 기존 차로폭 미달 하이패스 차로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할 것	<p>< 조치실적 : 조치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로폭 확폭은 소요예산 과다*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속도제한 표시, 차로유도선, 노면그루빙 등 안전시설 보안을 통해 감속을 유도함으로써 안전한 하이패스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3.5m 확폭 시 : 609차로, 약 1,200억 원 소요 ○ 과속단속 강화를 위한 경찰청 협의 및 안전운전 계도 지속 추진하겠음
한국 도로공사	8. 2014년 퇴직자 영업소 수의계약 문제점 및 계약기간 연장 등 특혜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소 수의계약은 경영여건상 불가피하게 추진하였으나 2015년부터 수의계약 폐지 * 100% 공개입찰 실시 ○ 과업인원 축소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은 국가계약법에 의거 양 당사자 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의한 계약사항이며, 평가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단축)은 2015년 폐지하고 포상금제도로 전환하였음 ○ 계약체결 시 사업자등록증 미제출은 단순절차상 하자이며, 현재는 조치 완료된 상태로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 없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 도로공사	9. 외주영업소 인건비 지급 실태 점검을 철저히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공은 감독기관으로서 과업이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감독하기 때문에 인건비 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과업이행여부를 초과하여 외주업체 고유 경영권 간섭에 해당되므로 점검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음
한국 도로공사	10. 영업소 운영권의 불법 매매실태를 조사하여 보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조사결과 운영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운영자의 채무로 인한 운영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업체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조치함
한국 도로공사	11. 사내복지기금을 원금 미보장형인 TPF에 투자한 이유와 투자금 전액 회수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 보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PF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에 의거한 적법한 투자상품 ○ 소송 추진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15231(2014. 12. 15.) - 청구취지 : 기망행위에 의한 신탁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등 - 청구금액 : 금6,491백만원(미회수금액+이자) - 소제기 '14. 12 . 15 - 변론(1차~7차) '15. 5. 22 ~ '16. 3. 18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투자금 회수 가능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결과에 따라 확정 예정</p> <p>< 향후 조치계획 ></p> <p>○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대응계획 수립</p>
한국 도로공사	12. 고속도로 공사현장의 인부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p>○ 도로보수원 작업장 안전 관리 대책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보수원의 위험 노출 최소화를 위해 유지보수 작업 방식을 개별부분보수에서 장기집중보수, 다공종통합 작업으로 개선 · 장기집중보수 : 장기 전면(부분) 교통제한을 통해 집중적으로 보수하는 방식 · 다공종통합작업 : 2가지 이상 다공종을 하나의 공사로 통합하여 동시에 작업하는 방식 -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로봇신호수를 운영 중 - 운전자 시인성 향상 및 사고피해 감소를 위해 작업장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를 강화 · 운전자 시인성 증대를 위해 작업장 표지판높이 상향 : H=1.6m→4.0m · 변이구간 시인성 향상을 위한 안전시설 변경 : 라바콘→갈매기 표지 · 전방 교통상황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주의구간 연장 확대 : 1.5km→2.0km · 안전관리차 후미충돌 피해감소를 위한 후미 충격흡수시설(TMA) 설치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구간에서의 제한속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하향(80km/h→60km/h)하여 안전사고를 예방
한국 도로공사	13. 고속도로 역주행사고, 음주 합동단속 등 안전 예방대책을 강구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주행 금지 시스템 운영 중(경부선 등 3개노선 180km) ○ 연말연시 톨게이트 입구 경찰청 합동 음주단속 시행
한국 도로공사	14.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피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소 입구(341개소) 및 본선(이동단속 및 안전순찰 활용) 24시간 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년 93,557→‘15년 105,491(13% 증가) ○ 국민 참여형 단속제도인 낙하물 신고 포상제 시행 : 20건/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 영상제보 → (도공) 포상, 고발 ○ 유관기관 합동단속 및 캠페인 월1회 시행 ○ 적재불량 위반차량 처벌 강화(‘1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 시 벌점 15점 부과 (40점 이상 시 면허정지, 121점 이상 시 면허 취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 도로공사	15. 졸음쉼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진·출입로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졸음쉼터 진·출입로에 불법 주·정차 방지시설(PE방호벽, 시선유도봉 등)설치 - 졸음쉼터 가·감속차로 길이 연장 <table border="1" data-bbox="799 683 1425 846"> <thead> <tr> <th>구분</th> <th>기존</th> <th>개선</th> </tr> </thead> <tbody> <tr> <td>감속차로</td> <td>160m</td> <td>190m</td> </tr> <tr> <td>가속차로</td> <td>190m</td> <td>220m</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속유도 노면표시, 가상과속방지턱, 횡방향 노면그루빙, 속도제한표시 등 속도저감시설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의시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졸음쉼터 191개소 중 103개소 화장실 설치(설치율 : 54%) <p>< 향후 조치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순찰 강화를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 계도 및 홍보와 정기적인 졸음쉼터 관리실태 점검(반기 1회)을 통해 지속적으로 졸음쉼터 안전성을 강화하겠음 ○ ‘16년에 설치되는 모든 졸음쉼터에 화장실 설치 등 지속적으로 화장실을 확충하겠으며, 차량시설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이용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겠음 	구분	기존	개선	감속차로	160m	190m	가속차로	190m	220m
구분	기존	개선									
감속차로	160m	190m									
가속차로	190m	220m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 도로공사	16. 안전성능이 미달한 중앙분리대를 개선하고 충격흡수시설 파손 시 즉각적인 복구가 가능하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1년 관련기준 개정 이후 현재까지 노후도, 사고위험구간,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473km를 개량완료 하였으며, ○ 잔여구간(645km)은 2015년 수립한 중장기 계획에 의거하여 연차적으로 개량 추진 <p>* 중분대 개량 적용기준 검토 및 중기투자계획 수립(도로처-3928, '15.12.)</p> <table border="1" data-bbox="772 913 1453 1249">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6">연도별 중기 투자 계획(5개년)</th> </tr> <tr> <th>계</th> <th>'16</th> <th>'17</th> <th>'18</th> <th>'19</th> <th>'20</th> </tr> </thead> <tbody> <tr> <td>사업비 (억원)</td> <td>813.8</td> <td>96.2</td> <td>173.9</td> <td>188.2</td> <td>185.0</td> <td>170.5</td> </tr> <tr> <td>연장 (km)</td> <td>476.2</td> <td>53.0</td> <td>94.2</td> <td>114.0</td> <td>111.8</td> <td>103.2</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격흡수시설의 복구 지연은 보험사의 직접 복구 시에 주로 발생하고 있음 ○ 교통사고 피해시설물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 선 복구, 후 정산 가능토록 보험사와 협의 중 <p>< 향후 조치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사고 피해시설물 신속 복구방안 수립 	구분	연도별 중기 투자 계획(5개년)						계	'16	'17	'18	'19	'20	사업비 (억원)	813.8	96.2	173.9	188.2	185.0	170.5	연장 (km)	476.2	53.0	94.2	114.0	111.8	103.2
구분	연도별 중기 투자 계획(5개년)																												
	계	'16	'17	'18	'19	'20																							
사업비 (억원)	813.8	96.2	173.9	188.2	185.0	170.5																							
연장 (km)	476.2	53.0	94.2	114.0	111.8	103.2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 도로공사	17. 빗길사고가 잦은 지점에 배수성포장을 확대하고 고장난 기상관측설비 보수방안을 강구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관측 불량 24개소 조치 완료('16.1) * 교체(13개소) 및 수동전환(11개소) <p>< 향후 조치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수취약구간 및 소음민원 구간을 대상으로 지속 확대·적용할 예정임 - 영동선 42.7k 구간 등 6개 구간 (총 33.4km, 16년 말까지 완료예정)
한국 도로공사	18. 차선도색공사 하자 보수기간 연장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자문결과 관련법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강행규정이 아니며 당사자 간 합의로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
한국 도로공사	19. 터널 화재 시 소방차 도착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차 도착시간 개선을 위해 고속도로 이징·시설물 정보를 담은 전자지도를 제공하여 소방당국이 운영 중인 '긴급구조표준시스템'의 개정작업을 진행 중 <p>< 향후 조치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임시진출입로 추가설치 검토 예정(28개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 도로공사	20. 인제터널 입출구부 소방대 설치 등 대형 터널 사고 발생 시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대 출동시간 분석 및 정부 관계 기관(국민안전처, 강원도) 소방대 설치 필요성 협의 - 정부 관계기관(국민안전처) 소방대 설치 관련 해외사례 조사를 포함한 실무협의 진행 ○ 자체 터널관리 강화를 위해 터널관리 사무소 상주감시 인력배치 및 지사 상황실 원격감시 시스템 구축 추진
한국 도로공사	21. 요금수납원 심리상담 등 각종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행료수납업무 종사자 심리상담 프로그램(한국산업간호협회 연계) 추진 * 16개소 완료 ○ 감정노동자 교육 프로그램 연계 확대
한국 도로공사	22. 톨게이트 블랙박스 설치를 확대하고 대응매뉴얼을 보강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금소 상시 개방차로 설치 완료 (561개 차로) ○ 향후 신고센터 이용 활성화 및 법적 조치 강화 방안 마련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 도로공사	23. 스마트톨링 도입 시 영업소 고용 안정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일자리 전환배치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보정센터, 고객센터, 콜센터, 과 적단속, 현장안내 등 ○ 영업소 유희지 개발 등 지속적 일자리 발굴
한국 도로공사	24. 선불하이패스카드 선수 금 부실 관리에 대한 대 책을 수립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불교통카드 선수금 보호를 위한 관련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금융 위원회에 건의('15.10) <p>< 향후 조치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부실화 방지 및 고객보호를 위한 선수금 보호입법 추진
한국 도로공사	25. 고속도로 폐도 및 영구폐쇄 구간을 효율 적으로 활용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도의 효율적 활용방안 구축을 위한 자체 T/F팀 구성('1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무처, 사업개발처, 품질환경처, 설계처, 건설처 ○ 폐도 실태조사 실시('16.2~'16.3) ○ 폐도 활용방안 의견수렴 및 협의('16.3~'1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각, 사업개발(태양광 등), 녹지대 조성 등 ○ 폐도 효율적 관리, 활용방안 수립 시행('16.6)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 도로공사	26. 간접비 청구소송 증가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업계 및 발주기관 의견을 수렴한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간접비)의 합리적인 지급방안 마련을 위해 기획재정부 주관하에 연구용역 진행 중 *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지급방안 연구('15. 6 ~ '16. 6, 한국개발연구원(KDI)) <p>< 향후 조치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연구용역 결과에 상응되는 조치계획 검토 예정 ○ 공기연장의 발생이 원천적으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배정 및 사업기간 지정의 합리화에 관해서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
한국 도로공사	27. 고속도로 건설 시 아스팔트 포장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속도로의 아스팔트 포장 확대를 위하여 최근 기후변화 및 아스팔트 포장 품질향상 반영, 평가항목 배점 조정(정량적 요인 +790점, 정성적 요인 +210점 → 정량적 요인 +500점, 정성적 요인 +500점) 등 고속도로 포장형식 선정기준을 개선하였으며, * 고속도로 포장형식 선정기준 개선방안 수립 [설계처-1134(2015.04.27)]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중인 고속도로의 포장형식 적용방안 마련 <li style="margin-left: 20px;">* 건설중인 고속도로 포장형식 적용방안 검토 [건설처-2348(2015.05.28)] ○ 설계 및 건설 중인 고속도로에 대하여 아스팔트포장을 지속적으로 확대
한국 도로공사	28. 고속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 시 중소기업 우수 신기술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한 특정공법/자재 설계 적용방안 수립('1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적용 대상) 신기술/신공법 등 정부기관이 인증 장려하는 신기술, 기술력·품질이 우수한 경우 등 - (설계반영 시) 기술자문위원회 특정공법 심의 시행
한국 도로공사	29. 하도급 대금 미지급 업체에 대한 제재방안과 임금체불 해소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공사대금 미·체불 점검 및 고발 ○ 미·체불로 인한 행정처분 요청 시 해당업체 서면경고 부과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경고 : 입찰시 감점사항 * (원도급사) 위반 0.5점/1건, (하도급사) 위반 0.3점/1건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대금 직불 확대방안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체불 1회시 직불 시행 * (기존) 미·체불 2회시 직불 시행 ○ 하도급대금 지급 관리시스템 개선 방안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권과 연계하여 공사대금을 건설참여자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 운영 *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활용 - 10개 공구 시범적용(‘16.5) - 하도급대금 지급 관리시스템 전 현장 확대 적용(‘16.8)
한국 도로공사	30. 불합리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용역의 사업 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지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선방안 수립 완료(‘15.10) - 사업책임기술자 경력기간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5년간 60개월 → 5년간 36개월 - 참여기술자 등급별 감점폭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점폭 10% → 감점폭 5%
한국 도로공사	31. 고속도로카드 미환불 잔액 활용계획을 수립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시효가 만료되어 환불의무는 소멸되었으나 계속 환불 조치하고 있으며, 최종 미환불잔액의 공익적 활용 계획 수립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부터 행복의길 장학재단에 출연 - 이자수익을 활용하여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원, 교통사고 예방 및 복지사업 등 사회공헌 추진 - 유사 사회복지재단 벤치마킹 등을 통해 효율적 운영 도모
한국 도로공사	32. 고속도로 투자비 미회수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타당성 평가 시 철저한 교통수요예측을 시행하여 향후 투자비 미회수 문제 개선 - 관련지침(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및 제재방안(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마련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벌칙조항 과태료(500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 벌칙(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벌칙 및 과태료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116조제5항)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와 국가교통조사서를 교통 수요의 분석 및 예측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지 아니한 평가대행자 · (법 제122조제3항) 교통조사지침 또는 투자평가지침의 내용과 다르게 교통 수요를 조사분석하거나 예측한 평가대행자
한국 도로공사	33. 통행료 감면 요구 증 대, 국가재정지원 축 소 등에 따른 재무구 조 악화에 대한 대책 을 수립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효율 업무개선을 통한 도로운영비 절감 강화, 도로 및 휴게서비스 강화를 통한 수입 증대 등 자구노력을 더욱 강화한 중장기 부채감축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 결산결과 부채비율 87.96%로 전년대비 3.68%p 감소 등 재무건전성 강화
한국 도로공사	34. 도로공사 임직원의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렴교육 실효성 강화, 자체 감찰활동 강화 등 비위행위 예방 및 통제를 위한 관리시스템 지속적 강화 - 직급·직종별 맞춤형 교육, 공감·참여형 교육 등 실효성 있는 청렴의식 제고 활동 전개 - 연도별 중점 감찰테마 선정 및 집중 점검, 취약인물·분야(Red Zone)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 - 기동감찰팀(3개조 6명) 연중 상시운영 등 자체 감찰활동 및 부패통제 시스템 강화 - 비위행위자 무관용 처벌 및 관리·감독자에 대한 엄중한 관리책임 부과

한국철도공사

공백

□ 한국철도공사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 철도공사	1. 군 장병 할인제도를 재시행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장병 할인제도 재시행('15.9.25.) * 병장이하 사병이 정기휴가 및 사적여행시 10% 할인 적용
한국 철도공사	2. 열차내 자동제세동기 안내표지를 설치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차 내 안내표지류 개선계획 수립/시행 ('15. 11월~'16.1월) * KTX, 누리로, 무궁화호 등 393량에 제세동기 표시기 및 안내도 5,578장 설치 완료
한국 철도공사	3. 자살사고 예방을 위해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도 13개역(450억원)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 1~ 4월 : 설계 및 발주 - '16. 5~12월 : 공사시행 및 완료 * 외대앞, 구리, 노량진, 금천구청, 가평, 삼송, 가천대, 대공원, 개포동, 대모산입구, 구룡, 정바산, 이매 ※ 미설치 125개역은 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할 예정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 철도공사	4. 민자역사의 경영과 수익배분에 관하여 적정한 감독권한 및 주주권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자역사 주주권한 대책수립('15.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자산을 매각토록 하여 배당수익 확대 - 롯데그룹일가(신동주/신동빈)의 보유주식 매각 협의 - 임대매장 관련 롯데그룹 일가가 특혜를 받는 일이 없도록 개선 협의 * 롯데역사(주)에 조치 요구('15.10월)
한국 철도공사	5. 선로무단횡단으로 인한 사상사고 예방을 위해 방호울타리를 보강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1,817km중 1,568km(86.3%) 완료 하였으며 2016년 사업분 82km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여구간(167km)은 2019년까지 완료 * 방호울타리보강 사업은 정부예산으로 설치 (철도시설공단 수탁사업)
한국 철도공사	6. 청년고용률을 확대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신규채용 계획 수립('15.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319명(청년채용비율 1.1%) ☞ 2016년 1,070명(청년채용비율 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반기 570명, 하반기 500명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 철도공사	7. 역세권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가격 감정 등 개발사업 관련 지침의 합리적인 개정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 표준지침 개선방안 수립('16.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별 특성에 따른 토지대금 차등 적용 - 인허가 완료시까지 토지대금 납부시기 조정 등 <p>* (현행) 토지대금에 미래가치 반영, 납부시기 및 납부방식 사전 확정</p>
한국 철도공사	8. 철도차량청소용역 설계가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시중노임단가의 적용 등 청소용역 설계 심사를 정확히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시중노임 단가(65,674원)를 적용 설계('16.1.22.) <p>* (시중노임단가) '14년 63,326원 → '16년 65,674원</p>
한국 철도공사	9.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자산매각을 통한 부채 감축 노력 이외에 경영 합리화를 통한 자구노력을 강화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가절감, 주력 운송사업 강화 등 자구 노력을 통해 2년 연속 1,000억원대 영업흑자 달성으로 부채감축 기여 - 화물역 거점화, 구매예산 프로세스 개선 등 약 1,300억원 비용절감 등 <p>* ('15년 성과, 연결기준) '14년 대비 부채 4.4조원 감축, '14년 17.9조원 → '15년 13.5조원</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 철도공사	10. 코레일톡을 통한 철도승차권 예약 및 반환의 편리성을 제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레일톡 반환은 부정승차 확산의 우려가 있어 열차 출발 후 온라인 반환은 현행과 같이 시행하되, 고객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한 고객안내 강화방안 수립('15.5월) - 코레일톡 Push 알림서비스 구축 * 승차일 3일전 및 승차 당일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열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통신매체반환 이용 알림 서비스 제공 - ARS 반환 접수 프로세스 개선 - 승차권 예매시 취소, 반환방법에 대한 안내 강화
한국 철도공사	11. 역명부기 수수료를 타기관 수준으로 상향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명부기 수수료 상향('15.9월) - 기간 : '15년 9월 ~ '16년 4월 - 대상 : 재계약 7개, 신규 1개 기관 - 인상폭 : 기존 계약대비 약 51% 인상
한국 철도공사	12. 터널공사시 가연성 시료가 사용되었는데 전수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터널 보수·보강개소 전수조사(총21개소) 시행 및 난연성능 시험의뢰('15.9~10월) ○ 부적합개소(17개소) 재시공 통보, 이행확약서 징구 등 대책 수립/시행('15.10월~)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 철도공사	13. 구내입환, 전호 등 업무 위탁시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위탁 개선방안 마련('16.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성·경영 및 업무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코레일의 임피제 적용 업무 전환을 검토 중이므로 계약종료 시점 ('16년 11월)에서 재검토 - 공정한 평가기준 개선 * 계량평가 항목 중 유사용역 수행실적 배점 개선 등
한국 철도공사	14. 열차지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차지연 대책 수립('16.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기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원인 및 분야별 지연예방 대책 마련 - 열차지연 분석 및 예방대책에 대한 현업의 이행실태 점검 - 매월 정시운행율 실적 및 VOC 분석을 통해 상습지연열차 상세 원인분석 및 분야별 개선대책 마련 등

공백

인천국제공항공사

공백

□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인천국제 공항공사	1. 터미널 내 위험물처리 시설 설치 등 위험물 취급 개선방안을 마련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위험물 프로세스 및 안전관리 진단 연구용역 시행('16.3~7) - 수입/수출/환적분야의 항공위험물 처리 프로세스(취급·운반·보관 등) 및 안전 관리에 대한 진단용역 진행 중 - 국제기준 및 해외공항 안전체계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개선사항 발굴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위험물 처리 관련 개선방안 마련 ○ 항공위험물 안전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역할 재정립
인천국제 공항공사	2. 허브공항의 역할에 맞게 외항사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부 공동 “인천공항 경쟁력 강화 방안” 수립('16.3) - 전략 인센티브 도입 등 통한 외항사 신규노선 개설 유도 ○ 아시아/유럽 루트회의 참가 및 외항사 국내 지점 방문 확대('16.1~5)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 인센티브 시행('16.7) - 전략노선 신규 취항/증편 시 항공사 사용료 면제 혜택 대폭 확대 등 ○ '16년 세계루트회의 참가 및 타깃항공사 유치마케팅 시행('16. 9)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인천국제 공항공사	3. LCC 환승객 편의제고, 환승협의체 운영등을 통해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승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토부 공동 “인천공항 경쟁력 강화방안” 수립('16.3) - (공급 증대) 국적항공사 환승역량 강화 및 외국항공사 유치 확대 - (서비스 강화) 네트워크·사용료·인센티브 운영 환승기여도 강화 및 환승시설·서비스제고 - (LCC지원) LCC 협의체운영 및 환승라운지 이용쿠폰 배포
인천국제 공항공사	4. 높은 임대료가 식음료 가격에 전가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 사전협의, 시내매장과 동일가격 원칙 등 다양한 노력 시행('15.11) - 1만원 이하 메뉴비중 82% 달성 등 중저가 메뉴 확보(기존 48%) - 시내와 동일가격으로 판매하는 체인형브랜드 매장 비중을 기존 63%에서 91% 까지 확대 완료 - 1만 5천원 이상의 고가 음식을 팔던 터미널 4층의 호텔 고급식당을 8~9천원 대의 합리적인 캐주얼 브랜드 식당으로 변경 ○ 시내 유사시설, 유사매장과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등 가격경쟁력 유지를 위한 방안 실행('15.12) - 다중이용시설과 가격비교 모니터링 및 ‘동일메뉴=동일가격’ 위반매장 신고제 등 강력한 실행방안 도입 운영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인천국제 공항공사	5. 일반고 전환, 입학정원 조정 등 하늘고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늘고 운영개선 및 발전방향 연구 용역」 시행('15.12 ~ '1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형태) 자율형사립고 형태 유지 - (입학정원) 공항종사자 전형 비율 축소 - (부족재원마련) 단계별 학비 인상, 학생 정원 증가 및 외부 후원 유치 등 ○ 인천시 및 학부모 등 의견 수렴('1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형 사립고 학교형태 유지 - 지속적인 공사 지원 유지 ○ 하늘고 재정지원 계획(안) 수립('1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기('16년~'20년)는 외부 후원금 총당 계획분(44억원) 제외한 운영자금 지원 - 제3기('21년~'25년)는 재정지원 50% 축소하여 운영하며 용역결과에 따라 재단 재정 자립 자구노력 적극 추진
인천국제 공항공사	6. 관련업체에 대한 하늘고 후원금 요구문제를 철저파악 및 조치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교육청 실시 하늘고 입학전형 및 교육과정 등 특별감사('15.10) 결과 기부금 강요 및 기부 입학이 없음을 확인 ○ '17년 입학설명회에서는 불필요한 오 해소지 차단토록 재단과 협의('15.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하늘고 발전 협약 체결 중단 - 후원관련 오해소지 없도록 관리 철저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인천국제 공항공사	7. 인천지역에만 국한된 사회공헌활동을 전국적 으로 확대 실시 할 것	<p>< 조치실적 ></p> <p>○ '16년도 사회공헌활동은 전년대비 13.4억원 증액하여 전국단위 사회공헌 활동 강화('16.2)</p> <p>* '16년도 대국민 사회공헌 프로그램(단위 : 백만원)</p> <table border="1" data-bbox="805 577 1469 1021"> <thead> <tr> <th>프로그램명</th> <th>'15</th> <th>'16</th> <th>증감</th> </tr> </thead> <tbody> <tr> <td>메이커워시(난치병아동)</td> <td>230</td> <td>250</td> <td>+20</td> </tr> <tr> <td>BBB 후원</td> <td>51</td> <td>70</td> <td>+19</td> </tr> <tr> <td>Youth Music Camp</td> <td>70</td> <td>100</td> <td>+30</td> </tr> <tr> <td>국민 체육진흥</td> <td>1,009</td> <td>1050</td> <td>+41</td> </tr> <tr> <td>항공레저 인프라</td> <td>300</td> <td>500</td> <td>+200</td> </tr> <tr> <td>인천공항 공모전</td> <td>17</td> <td>48</td> <td>+31</td> </tr> <tr> <td>신규 대국민</td> <td>-</td> <td>1,000</td> <td>+1,000</td> </tr> <tr> <td>합 계</td> <td>1,677</td> <td>3,018</td> <td>1,341</td> </tr> </tbody> </table>	프로그램명	'15	'16	증감	메이커워시(난치병아동)	230	250	+20	BBB 후원	51	70	+19	Youth Music Camp	70	100	+30	국민 체육진흥	1,009	1050	+41	항공레저 인프라	300	500	+200	인천공항 공모전	17	48	+31	신규 대국민	-	1,000	+1,000	합 계	1,677	3,018	1,341
프로그램명	'15	'16	증감																																			
메이커워시(난치병아동)	230	250	+20																																			
BBB 후원	51	70	+19																																			
Youth Music Camp	70	100	+30																																			
국민 체육진흥	1,009	1050	+41																																			
항공레저 인프라	300	500	+200																																			
인천공항 공모전	17	48	+31																																			
신규 대국민	-	1,000	+1,000																																			
합 계	1,677	3,018	1,341																																			
인천국제 공항공사	8. 국민안전, 핵심역량 강화 관련 아웃소싱 분야의 자회사 전환, 직고용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p>○ 부서 정원조정을 통해 6개분야 70명 정원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보안관제, 전력시설감시 등 4개 분야 31명('16.1) - 수하물, 대테러/보안상황통제 등 2개 분야 39명('16.3) <p>< 향후 추진계획 ></p> <p>○ 직영전환을 위한 추가소요인력 정원확보 및 자회사 전환방안 수립/협의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영) 폭발물처리, 수하물 등 260명 * (자회사) 소방대 208명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인천국제 공항공사	9. 사이버테러에 대비 업무용 PC 인터넷 분리, 대응인력을 보강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테러 대비 업무망 및 인터넷망 분리 완료('16.4.30)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테러 대응인력 증원 예정
인천국제 공항공사	10. 클린에너지 도입을 확대 하기 위해 공항지역 유희부지에 민간 태양광 발전사업자 유치 방안을 검토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양광 시설을 공항시설에 포함하기 위한 법령(항공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 완료('15.11) ○ 항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6.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시설 범위에 태양광 시설 포함 * 공항지역 민간태양광 발전사업자 유치 가능 ○ 항공법 시행령 개정·공포('16.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시설 범위에 태양광 시설 포함
인천국제 공항공사	11. 공헌 규모 및 대상 범위 확대 등의 사회 공헌활동 개선방안을 검토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도 사회공헌활동의 규모는 대국민 사회공헌 프로그램 증액 등 전년대비 확대 운영('1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범위 또한 지역사회공헌과 더불어 전국단위 사회공헌 활동으로 크게 확대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인천국제 공항공사	12. 자기부상열차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쟁점사항 점문기관(철기연) 검토('15.12) ○ 쟁점사항 검토결과 보완('1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풍시 열차운행 기준 변경 - 우천시 전원차단 현상 세팅값 조정 - 비상대피시설 개선 - 전차선(전력공급시설) 보완 - 분기기(선로전환기) 보완 등 ○ 자기부상철도 개통('16.2.3)
인천국제 공항공사	13. 공항 내 주차난 해소방안을 마련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주차장 추가 확보 운영('1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늘정원 주차장(796면) 및 공항청사 후면 임시주차장(708면) 조성 완료 ○ 제2여객터미널 운영전 주차장 확보계획 수립('1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 인근 총 4,000면 임시주차장 추가 확보 추진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주차장 조성 및 운영('16.7~'1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인근(PC제작장 주변 부지) 임시주차장을 단계적으로 조성, 주차난에 대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인천국제 공항공사	14. 불법주차대행 근절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관련 불법행위 단속인원 증원(35→46명)을 통한 단속 강화('15.10) ○ 시설 및 운영 개선을 통한 불법영업 차단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주차 취약지역 시선유도봉 설치로 불법주차 차단 시행(1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종해안남로 321번길 가변 600M 설치 ○ 불법주차대행업자 과태료 부과의뢰(서항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 43명, '16년 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사항이 확보된 업자를 중심으로 과태료 부과 의뢰하여 단속실효성 제고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주정차 단속 CCTV 확대운영 (21개소→29개소) ○ 제도적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지속 협의 시행 및 공항시설 내 금지행위 위반자 통보 확대 시행 ○ 불법행위 인터넷 홍보자료 및 불법정보 유통 방통위 차단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설주차 홈페이지 및 블로그/카페 등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인천국제 공항공사	15. 공항 3단계 공사현장 내 토양오염 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 및 개선 대책을 수립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공항 3단계 공사현장의 토양오염(불소)은 “자연적인 원인으로 판명”(환경부, ‘15.7.7)되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에 제출(’16.4.29) * 서울대 산학협력단 용역결과 비발암위해도(0.0022~0.24)가 기준치(1.0) 미만으로 인체에 허용가능 수준판단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 검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시행(’16.7)
인천국제 공항공사	16. 소형항공기에 불리한 인천공항 사용료의 체감형 과금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공항 신규 사용료 체계 시행(’16.1~) - 기존 체감형 → 항공기 중량에 관계 없이 동일단가 적용토록 동률형 변경
인천국제 공항공사	17. 개인정보 관리대책을 수립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16.2.25) - 개인정보 관련 교육, 점검 등을 포함한 “2016년도 개인정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 ○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전자문서 내 개인정보 검출솔루션 구축(’16.2.5)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인천국제 공항공사	<p>18. 임대료 미납채권을 18. 방지할 수 있는 18. 안전장치를 마련 18. 할 것</p>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4월말 기준 미납채권은 498억으로 '15년 매출액(1조 8,785억원) 대비 2.65% * 이중 ARP(341억), 그랜드스카이(유)(65억), (주)인천골프클럽(52억)이 전체 미납채권의 92% 차지 ○ ARP(에어조이 로얄플라자)는 현재 파산절차 진행 중으로서 파산채권 신고완료('16.2.23) ○ (주)인천골프클럽은 파산재단으로부터 10억원의 배당을 지급 받음('16.3.28) * 그랜드스카이(유)는 現 압류중인 항공기 2대 경매 진행 중 ○ 미납채권 관리지침 개정으로 미납 독촉 세부기준 마련('15.3.26)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납채권별 회수방안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P 건물매각을 통해 미납채권 일정부분 회수 - (주)인천골프클럽은 차기 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시설물 원상회복 등 후속조치 실시 ○ 악성 미납채권이 발생치 않도록 민자사업 추진시 자격요건 심사를 강화하는 등 역량 있는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만전을 기해 추진 예정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인천국제 공항공사	1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기준에 접합 하도록 볼라드 설치방안을 검토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약자 이동편의 보행안전시설(볼라드) 개선계획(안)」 수립('15.9.30) ○ 「교통약자 이동편의 보행안전시설(볼라드) 설계용역」 완료('15.11.23) ○ 유관단체 설계도면 검수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지체장애인협회”(‘15.12.8)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16.5.16) ○ 「교통약자 이동편의 보행안전시설(볼라드) 개선공사」 계약체결 및 공사시행('16.4.18) * 계약기간 : '16.4.18~7.18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볼라드 설치 완료('16.7)
인천국제 공항공사	20. 자동체크인 시스템의 공항 확대설치 및 적극 홍보방안을 마련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체크인 서비스 전용구역 조성('15.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탑승권 발급기(12식) 및 자동수하물 위탁기기(10식) 추가 설치 - 체크인아일랜드 국적사지역(5식) 추가 설치 ※ 전년동월대비 이용객수 28% 증가(4월기준) ○ 자동체크인시스템 홍보 및 프로모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 SNS, 홈페이지를 통한 프로모션('16. 2) ※ 자동화시스템 사용여객 경품증정 행사 - 자동화시스템 산학협력단 운영('15. 12~'16. 2)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인천국제 공항공사	21. 공항 협력업체 밀수입 방지대책을 마련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수출입 단속 업무는 관세청(인천본부 세관)에서 수행 ○ 공항공사에서는 승객, 승무원 뿐 아니라 상주직원에게 대해서도 휴대품 전수검색을 시행중이며 보안검색을 통해 관세청의 밀수출입 단속 업무에 협조 ○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으로 최상의 안전 및 보안 지속적으로 유지
인천국제 공항공사	22. 공항 내 항공보안법 위반 급증에 대한 대책을 마련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여객 보안검색 사전안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수기 위해물품 반입금지 사전 안내 캠페인 실시 - 보안검색 규정 위반시 처벌 강화 안내문 제작 배치('16. 5. 4.) ○ 인력증원을 통한 검색강화('16. 4.20.)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검색 안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검색 홍보 디자인 및 홍보 강화 * 국내·외 여객에게 통용되는 통일된 이미지로 개선 - 출국장 보안검색 안내 사이니지 설치 - 항공사 사전 보안질의 강화 등 협조요청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인천국제 공항공사	23. 임직원의 과도한 성과급 지급 문제를 개선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2014년 과다 지급된 성과급 총 649명의 229백만원 환수('15.11) ○ 정부지침에 맞춘 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 등 관련규정 개정 완료('16.1)
인천국제 공항공사	24. 단기/장기 주차장 주차요금 재개편 등을 통해 주차난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장기주차장 요금체계 개편 시행('15.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주차장 1일 요금부과 기준 변경 (5시간→10시간, 24,000원/1일) - 장기주차장 요금을 주말 및 성수기 요금으로 일원화(9,000원/1일) ○ (효과) 주차장 운영 효율성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1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단기주차장 만차일수 58.1% 감소 → 장기간 주차하는 수요를 장기 주차장으로 유도

한국공항공사

공백

□ 한국공항공사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 공항공사	1. 국민편익을 고려하여 김포공항 국제선 활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부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15-’19)에서 정한 김포공항 개설 후보노선 선정 및 항공회담을 통한 운수권 확보등 노선 개설 추진 (‘15~) - 인천공항 허브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김포공항 국제 노선 확충 (3-4개 노선 신설 검토) ○ 항공정책기본계획에 따른 국제노선 개설 지속추진 ○ 비즈포트에 적합한 공항시설 인프라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선/국제선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FBO건설, 배후단지 개발 등
한국 공항공사	2. 김포공항 비즈니스 공항 역할 확대를 위해 홍콩, 싱가포르 등 실제 비즈니스가 활발히 이루지는 도시 취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항공정책기본계획’(3-4개 노선 신설 검토)에 부합하는 후보노선 선정 및 정부 협의(‘15. 3 ~)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비즈니스 수요가 높은 도시로의 취향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노선 개설 추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 공항공사	3. 김해공항 국제선 확대를 위한 커퓨시간 완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자 (지자체, 지역민, 부항청, 공군 등) 간 간담회 개최, 협의체 구성을 통해 커퓨완화 추진 필요성 설득('15~) ○ 부산시 '16년 하반기부터 김해공항 2시간 커퓨단축 추진 발표 ('16.5) * (현재) 23:00~06:00 → (추진예정) 24:00~05:00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와 협업을 통해 소음 피해지역 주민 설득 등 커퓨 단축 추진('16.下)
한국 공항공사	4. 동서화합을 위한 부산-광주간 동서노선이 신속하게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부산시-에어부산 3자간 노선개설 논의('15.1월~4월) ○ 국회 주관, 동서노선 재취항 간담회 참석('15.11월) ○ 국토부 주관, 동서노선 개설 실무자 회의 참석('16. 2. 12, 3. 18) * (에어부산) 발생손실 보전 요청 / (부산시) 국내선 관련 조례가 없어 지원 곤란 ○ 정부, 지자체와 공동으로 LCC(에어부산) 동서노선 개설 지속 추진 ○ 소형항공사 대상 노선개설 병행 추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 공항공사	5. 김포-광주간 고속철도 개통 등과 연계하여 지방공항 이용수요 회복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김해간 동서노선 개설 추진('15~) ○ 광주-제주노선 확대 추진('16~) ○ 제주노선 확대를 통한 활성화 지속추진
한국 공항공사	6. 제주노선 슬롯 확보 등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프라 확충 추진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10: 인프라확충 협의체 구성(국토부,공사) · '14.12~'15.11: 인프라확충 타당성 연구(국토부) · '15.4: 인프라 확충 단기 방안 TF구성(공사) · '15.6: 단기 후속조치 이행 지시(국토부→공사) · '15.8: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 및 기본계획 변경고시(국토부,공사) · '16.2: 설계용역 완료(10.4억원)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활주로 슬롯증대 사업('13-'15) 완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 354억원 · 사업내용 : 고속탈출유도로 신설 1개소, 연결유도로 이설신설 각 1개소, 자력출발주기장 12개소 등 · 사업효과 : 슬롯 1회 증가(34→35회/hr) <p>【A/S 단기 인프라확충 사업 설계완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기간 : '15.8.20 - '16.2.29 · 계약금액 : 10.4억원 (총사업비 600억원) · 사업내용 : 고속탈출유도로 신설 3개소, 이륙 대기구역 개선 2개소, 계류장 확장(주기장 7면) · 사업효과 : 슬롯 5회 증가 예정(35→40회/hr)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 단기 인프라확충 사업 공사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3 - '16.6 : 인허가 및 공사발주 - '16.6 - '17.12 : 공사시행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 공항공사	7. 군산공항에 시설 투자를 위해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산공항 시설개선계획 수립('14.9) ○ 군산공항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등 시설 개선('16년 49억, '17년 17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터미널 리모델링('15~'17) - 주차장 및 구내도로 포장공사('17) - FIDS 및 수배전 설비 교체('16)
한국 공항공사	8. 비즈니스 항공센터 추진과 관련 사업내용과 운용계획의 투명한 홍보방안을 강구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혜시비 방지 및 대응, 홍보 방향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컨틴전시 플랜' 수립·시행('13.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특성상 홍보 역효과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 국내 홍보는 지양하고 해외 홍보에 주력 * 내국인의 특혜성 시설이용 엄격 제한 (공사 내규에 반영) * 국제행사 지원,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수익의 공항시설 재투자 등 공익적 기능 적극 수행으로 국민들에게 긍정적 인식 형성 * 문제 발생시 동 계획에 따라 대응TF 구성 및 국토부와의 협업을 통해 해소 노력 ○ 연간 해외홍보계획 수립·시행('15.12월)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 공항공사	9. 김포공항 등 공항내 혼잡한 주차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시설 확충 및 요금 조정(인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증설관련 상위계획 반영('16년 하반기) * 국토부 김포,울산공항 개발기본계획 용역진행 중 - 적절한 주차수요 관리를 위한 장기 주차요금 할인 조정(인상) 추진('15. 8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부와 세무 시행방안 협의 진행 중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시설 증설공사 추진('17년 ~) ○ 장기주차 요금 할인 조정('16년 하반기)
한국 공항공사	10. 김포공항 국제선 리모델링시 항공 수요 증가에 대비 본연의 공항기능 관련시설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선 대형상업시설 지역 시설개선(활용) 계획 보고('15.6.19) ○ 김포공항개발 기본계획 변경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19호 ('15.8.28.) ○ 시설개선(활용) 사업 설계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기간 : '15.11.26 - '16.5.23 - 계약금액 : 11.8억원 - 사업규모 : 국제선 환원 및 시설개선 47,548㎡ (공항시설 52,952㎡ → 79,063㎡) - 공항시설 환원 관련 시설개선 주요내용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격리대합실 확장 5,767㎡ * 탑승교 E급 1대 신설 * 여객편의 및 환경개선을 위한 기존시설 이설 (체크인카운터 15대, 탑승교 1대) * E/L, E/S 신설 및 전기, 통신장비 개선 * 항공사사무실 등 업무시설 확장 <p>- 사업효과 : 여객수용능력 63만명/년 증대 (430만명/년→493만명/년), '29년까지 처리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개선(활용) 사업 공사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6 - '16.8 : 인허가 및 공사발주 - '16.9 - '17.12 : 공사시행
한국 공항공사	11. 내용연수를 초과한 항공보안장비 교체, 양양 등 일부 공항에 없는 액체폭발물 탐지장비 배치 등 항공안전에 철저히 대비할 것	<p>< 조치결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항공보안 및 대테러장비 전면교체 예산확보(12종 386대, 약 105억원) ○ 대테러 및 항공보안장비 배치계획 수립('16.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보안장비 : 5종 326대, 약 76.8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X-ray 검색기, 문형 및 휴대용 금속탐지기, 액체폭발물 탐지장비 등 - 대테러 장비 : 7종 60점, 약 27.9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폭복, 내시경, 방폭가방, 분쇄기 등 ○ '16년 항공보안 및 대테러장비 교체 및 신규배치 ('16.12월)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 공항공사	1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볼라드 설치방안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법 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선조치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공항 : 김포 등 12개공항 - 개선수량 : 총 254개 (교체225개, 철거29개) 																																			
한국 공항공사	13. 자동체크인 시스템의 공항 확대 설치 방안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탑승수속간소화를 위한 국내선 공용셀프 체크인(KIOSK) 추진계획 수립('1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 국내선 공용셀프체크인 신규 개발 - 2017~2018년 : 전국공항 단계별 설치 <p>※ 항공사별 전용셀프체크인(KIOSK) 설치현황</p> <table border="1" data-bbox="794 1406 1407 1639"> <thead> <tr> <th rowspan="2">항공사</th> <th colspan="5">공항별 운영현황</th> </tr> <tr> <th>김포</th> <th>김해</th> <th>제주</th> <th>기타</th> <th>합계</th> </tr> </thead> <tbody> <tr> <td>대한항공</td> <td>15식</td> <td>9식</td> <td>10식</td> <td>5식</td> <td>39식</td> </tr> <tr> <td>아시아나</td> <td>8식</td> <td>-</td> <td>8식</td> <td>5식</td> <td>21식</td> </tr> <tr> <td>에어부산</td> <td>3식</td> <td>5식</td> <td>2식</td> <td>-</td> <td>10식</td> </tr> <tr> <td>합 계</td> <td>26식</td> <td>14식</td> <td>20식</td> <td>10식</td> <td>70식</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항공 : 39식(김포, 김해, 제주, 울산, 여수) · 아시아나 : 21식(김포, 김해, 제주, 광주, 여수) · 에어부산 : 10식(김포, 김해, 제주) 	항공사	공항별 운영현황					김포	김해	제주	기타	합계	대한항공	15식	9식	10식	5식	39식	아시아나	8식	-	8식	5식	21식	에어부산	3식	5식	2식	-	10식	합 계	26식	14식	20식	10식	70식
항공사	공항별 운영현황																																				
	김포	김해	제주	기타	합계																																
대한항공	15식	9식	10식	5식	39식																																
아시아나	8식	-	8식	5식	21식																																
에어부산	3식	5식	2식	-	10식																																
합 계	26식	14식	20식	10식	70식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 공항공사	14. 안보위해물품 적발 증가 문제 관련하여 항공보안을 강화할 것	<p>< 조치결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X-ray 18대 도입 등 항공보안장비 첨단화 추진('15년) ○ 보안검색인력 48명 증원('14~'15년) ○ 10년이상 노후장비 전면교체('16.12월) ○ 보안검색 인력 추가 확보(53명, '16.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포 19명, 제주 27명, 포항 7명
한국 공항공사	15. 국민의 생명, 안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의 개선 및 직고용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운영 안정성 강화를 위한 조직인력 연구 용역 실시 : '14.1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방재분야 자회사 설립 권고 ○ 자회사 설립 정부 건의 : '14.12~ ○ 공공기관 기능점검 결과 : '15.5.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웃소싱 기조 유지 <p>< 향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검색, 소방 등 항공보안방재 업무는 항공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자회사 설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 공항공사	16. 전국 공항 지역특산물 코너를 확대하여 해당 지역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화 맛집 유치를 통한 중소기업과의 상생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지역 특화음식(어묵) 판매점 유치('15.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포어묵(중소기업) - 제주지역 전통음식 판매점 유치('15.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토골(향토음식업소 지정 영업자) ○ 김해, 제주 등 5개 공항에서 9개의 지역특산물 판매점 기운영 中

공백

한 국 감 정 원

공백

□ 한국감정원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 국 감정원	1.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의 표본을 확대하고 활용도 제고방안을 모색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임대가격지수 신규 생산·공표('1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진흥원 컨설팅 완료('15.12) - '15.4분기 시범생산 및 '16.1분기 공표 * 표본 : 집합건물 23,000호 ○ 맞춤형 정보 제공을 통한 활용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공단 국내외 투자다각화 방안 연구에 수익률 등 36개 정보 제공('15.7)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공공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참고자료로 당해지역 수익률 정보 제공('15.9) - 서울지역 창업활성화 제고를 위한 “우리 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에 임대시세 정보제공('15.12) - “KAB오피스리포트” 발간을 통해 프라임 오피스에 대한 투자지표 제공('16.1)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시스템 및 서울시 골목상권서비스에 제공('16.2) 															
한 국 감정원	2. 주택가격동향조사와 확정일자 자료를 이용한 통계의 정확성을 비교·조사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의 정확성 관련 비교·조사 내용 <table border="1" data-bbox="783 1787 1476 2027"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d9ead3;">구 분</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ad3;">주택가격동향조사</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ad3;">확정일자 자료 통계</th> </tr> </thead> <tbody> <tr> <td>분석대상</td> <td>표본조사 자료</td> <td>확정일자 신고 자료</td> </tr> <tr> <td>산출방식</td> <td>표본가격 변동에 대한 지수 산출</td> <td>매월 신고된 전세보증금 변동</td> </tr> <tr> <td>통계특징</td> <td>전체 가격변화 추이 파악에 유리</td> <td>평균 전세보증금 변동 파악에 유리</td> </tr> <tr> <td>승인여부</td> <td>공식 승인통계</td> <td>미승인</td> </tr> </tbody> </table>	구 분	주택가격동향조사	확정일자 자료 통계	분석대상	표본조사 자료	확정일자 신고 자료	산출방식	표본가격 변동에 대한 지수 산출	매월 신고된 전세보증금 변동	통계특징	전체 가격변화 추이 파악에 유리	평균 전세보증금 변동 파악에 유리	승인여부	공식 승인통계	미승인
구 분	주택가격동향조사	확정일자 자료 통계															
분석대상	표본조사 자료	확정일자 신고 자료															
산출방식	표본가격 변동에 대한 지수 산출	매월 신고된 전세보증금 변동															
통계특징	전체 가격변화 추이 파악에 유리	평균 전세보증금 변동 파악에 유리															
승인여부	공식 승인통계	미승인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국정감사('15.9) 이후, 양 통계의 비교·조사내용을 국토교통위원회에 서면자료로 제출하고, 해당 의원실에 설명하였음('15.10)</p>
한 국 감정원	3.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시 현장조사를 보다 철저히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시스템 개선 ('1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바일 현장조사 앱을 통한 촬영사진 및 조사내용 전산시스템에 실시간 등록체계 구축 - 모바일 현장조사 앱 출장관리(단지별) 시스템 개편 및 전산 조사완료 조건(신규 사진 등록)강화 ○ 현장조사내용 검증 강화('15.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가격 조사에 대한 검증·심의 과정에서 심사를 '일반/정밀' 과정으로 세분화 - 현장조사표양식 변경, 시산가격 검증항목 추가 등 검증을 강화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승강기정보 등 대외기관 협업을 통한 조사정보 검증 강화 ○ 교육 방법 및 내용 개선('15.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집합교육에서 지사별 현장교육으로 개선 <p>※ 현장조사 방법 등 실무위주 교육 실시</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 국 감정원	4. 타당성조사에 대한 역할을 확대하여 감정평가의 신뢰성을 개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타당성 표본조사’의 표본물량 지속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년 638건 → ‘14년 853건 → ‘15년 1,080건 → ‘16년 1,200건(예정) ○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른 사례집 발간 등 부실평가 사전 방지에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집 배부수 확대 (‘14년 대비 1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년 500부 → ‘14년 1,200부 → ‘15년 1,400부 - 다양한 타당성조사 사례 수록하여 전파교육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이지 수 ‘13년 145p → ‘14년 200p → ‘15년 250p - 타당성조사 사례 수록건수 증가(24건↗26건) - 사례 내용을 상세하게 수록하여 이해도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밀조사 사례1건 당 10p.내외↗20p.내외
한 국 감정원	5.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의 부실정보 입력 방지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정보 입력내용 자동검증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력오류건 방지기능 추가(‘15.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정보 입력시 집합건축물대장, 공동주택공시자료와 비교·검증기능 구현 추진 - 입력항목간 상호체크기능 구현(‘15.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비 발생금액과 실부과총액, 입력관리비와 회계 감사보고서상 관리비 - 공동주택 관리정보에 대한 주기적인 일제 점검실시(‘15.12)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타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기준 통일 -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등록 및 회계감사 주요항목 공개확대를 통해 투명성 제고('15.12) - 관리비 회계계정항목 표준분류 책자 발간·배포를 통해 관리비 회계처리 표준화('15.12) - 유사단지 대비 관리비 상태표시를 통한 비교·검증실효성 제고('16.2)
한 국 감정원	6. 감정원이 생산하고 있는 통계의 유형을 세분화(ex. 전월세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준전세, 준월세 등으로 세분화)하고 정확성을 제고할 것	<p>< 조치실적 ></p> <p>1) 주택가격동향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가격동향조사 중 보증금-월세 조합을 반영한 세분화된 월세 지수 개발 - (기존) 월세지수 → (개선) 월세통합, 월세, 준월세, 준전세지수 - 세미나, 전문가 자문, 한국감정원 협력 중개업소 및 기자단 설문조사 등을 통한 의견수렴(~'15.6) - 통계작성 변경승인('15.7) 및 공표('15.8) <p>2)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오피스, 매장용 중 매장용을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중대형(3층이상), 소규모(2층이하) 및 집합으로 구분공표('15.4) ○ 집합임대가격지수를 신규로 생산·공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4분기 시범생산 및 '16.1분기 공표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 국 감정원	7. 상가권리금 제도 법제화에 따라 상가권리금 실태조사를 조기 실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가권리금 현황조사 실시('15.1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 서울 및 6대광역시 - 조사표본 : 대상지역 사업체 8,000호 - 조사주기 : 연 1회(기준일 : 9.30) - 조사항목 : 권리금, 유형·무형 형성요인 등 ○ 상가권리금 분석 및 조사내용 공표 ('1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에서 공표 및 보도자료 배포

공백

주택도시보증공사

공백

□ 주택도시보증공사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도시 보증공사	1.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사의 역할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사업 기금지원 지원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 금융지원을 위한 제규정 마련 등 제도적 기반 구축 * 도시재생금융사업보증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15.12) ○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관련 공사 역할 수행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도 도시재생분야 공사 업무추진 계획 수립('16.3)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임위 업무보고시 해당 내용 포함하여 보고
주택도시 보증공사	2. 서민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장 현실에 맞는 보증상품을 개발·출시함으로써 보증상품 이용을 활성화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임차자금보증 등 사규 개정('1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배려계층*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료 할인 대상 확대 * 신혼부부, 한부모·다문화 가정 등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 세입자를 위한 버팀목 대출 추가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민주거안정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보증제도 개선 및 신상품 개발 지속 추진 예정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도시 보증공사	3. 최근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체도 보증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은바, 사고 축소를 위한 보증심사역량을 강화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평가 및 조기경보 체계 개선('15.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규모별 신용평가 세분화 및 당기손익과 신용등급의 연계 강화 -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선정기준 도입 등을 통한 부실예측력 강화 ○ 보증심사 역량강화 교육 실시('15.10) ○ 주택경기에측지수 개선을 통한 지역별 심사체계 도입으로 심사의 신뢰도 향상('16.3)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심사체계 개선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위기 선제적 대응 위한 금융보증위험 관리 전략체계 구축 ○ 신용평가시스템 개선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평가시스템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주택도시 보증공사	4. 실질적인 지역 수요를 고려하여 지역별 지사 설립 우선순위를 결정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영업지사 설치시 거래고객 등 보증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추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도시 보증공사	5.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보증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대상 확대('15.11) - 소규모 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위해 보증대상 범위에 포함
주택도시 보증공사	6.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상품의 홍보 강화 등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 협의회를 통한 홍보 제고('16.1) ○ 금융기관 대출상담사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상품 활성화('16.1)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 모닝와이드 “김보성이 간다”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상품 홍보 ○ 모델하우스,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상품 홍보 리플렛 제작·배포 ○ 부동산 박람회를 통한 보증상품 홍보
주택도시 보증공사	7. 홍보비 지출을 줄이고 사회공헌 사업 지출을 확대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비 지출 감소 및 사회공헌 기부금 지출 확대('16.1) - 전년 대비 홍보비 13% 감액 기부금 19% 증액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도시 보증공사	8. 개인보증 확대, 주택도시기금 운용 등 업무영역 변화 및 인구구조, 경제여건 변동 등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판단지표 개선('1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미래위험성을 예측하기 위해 위기판단지표의 개선·신설 * 주택경기실사지수, 부진사업장비율, 부동산경기순환 주기 도입 및 위험업체 비중 기준 강화 ○ 보증리스크 정밀진단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1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스크관리 정체성확립 등 개선과제 발굴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상황분석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시장에 맞는 위기상황분석 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외변수에 따른 리스크 증가에 사전 대비 ○ 리스크 산출량 적합성 제고를 위한 리스크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주택도시 보증공사	9. 전세 축소, 월세 증가 등 주택시장 변화와 상품별 위험도 증감에 따른 신상품 개발 및 보증수수료율 재산정 방안 등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 대출상품 개발('1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 및 매입자금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수수료율 재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보증상품 적정보증료율 재산정 연구 용역 의뢰 추진 - 기여고객 할인 확대로 보증료율 인하 추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지원방안 등
주택도시보증공사	10. 전세금반환보증 이용절차 및 요건을 개선하여 활용도를 제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15.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건설 임대사업자와 계약한 전세 계약도 보증대상으로 포함 - 보증갱신시 담보취득 및 약정절차 생략 - 보증한도 산정시 금융비용부담율 요건 폐지 ○ 신혼부부 보증료 할인 요건 완화('1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료할인대상을 결혼 2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완화
주택도시보증공사	11. 고객편의를 위한 보증심사기간 단축 등 서비스 품질 제고 노력을 강화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견건설사의 정비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심사기준 개선('1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평점표상 배점기준 합리화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F보증 시공사 주택건설실적요건 완화(500세대 → 300세대)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도시 보증공사	12. 예산 낭비, 금품 수수, 퇴직금 과다 지급 등 직원 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분야 등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15.3 ~ '1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실태('15.3), 방만경영('15.6, '16.4), 하자보증이행('15.11) 등 - 점검결과 : 특이사항 없음 ○ 해이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복무감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 : 11회 실시, '16년 : 3회 실시 - 점검결과 : 특이사항 없음
주택도시 보증공사	13. 과거 인사드래프트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드래프트자 구제방안 확대('1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진T/O와 관계없이 원직책 승진 후보자에 지속적으로 포함 - 승진대상 선정을 위한 인사위원회 심사시 가점부여 기준 신설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직책 미회복 대상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방안 마련
주택도시 보증공사	14. 하자보수 판정업무 관련 비리 발생 여부를 재조사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자이행 특정감사 실시('15.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자비리 및 유착여부, 하자이행 절차·금액의 적정성 감사 - 감사결과 : 비위행위 정황 미발견 <p>* 이연주 위원실 방문 보고('16.1.8)</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도시 보증공사	15. 대위변제 금액 대비 회수 금액이 저조하므로, 분양보증의 채권 회수방안을 강구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수자원 정보제공 채널 확대('15.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분양물건 등 회수자원의 공매공고를 기관 블로그, 지역신문 등으로 확대 ○ 공공정보 수집 강화('15.9 ~ '15.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료 및 지적 전산자료 수집 ○ 개인채무자 관리강화('15.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면탈 등 혐의가 있는 채무자를 선정하여 재산조사 주기 단축 등 집중 관리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정보 활용 편의성 증대를 위한 정보 관리 개선 ○ 매각가치 제고를 위한 자산매각 프로세스 개선

공백

교통안전공단

공백

□ **교통안전공단**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교통안전공단	1.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위험성이 높은 50개 아파트단지 내 도로점검('15.5월~12월) * 160개 아파트단지 내 도로점검 완료('12~'15년)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위험성이 높은 아파트단지 내 도로 점검 확대(50개→55개) 시행 ○ 설계단계부터 교통안전을 고려한 교통안전 안심아파트(1개 단지) 조성 시범사업 시행
교통안전공단	2. 자동차안전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리콜정보를 자동차리콜센터(car.go.kr)에 공개하고 있으며, ○ '15년 자동차안전도 종합평가 결과를 반영한 올해의 안전한 차 선정 시 에어백, 안전벨트 등 제작결함 발생 이력을 적극 반영하여 선정하고 있음('15.12.14).
교통안전공단	3. 에어백, 변속기 등 안전운전 관련 보조 전자장치에 대한 점검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용진단기 개발을 위한 정부협의 및 법령개정 건의(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 제출('15.3.20) - 자동차제작사 등의 진단기 등 제공에 관한 고시 제정안 의견제출('15.11.13)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사, 국내 제작사 등이 영업상 비밀 등 이유로 우리 공단에 전자장치 진단관련 정보제공 반대 - 자동차관리법 개정 건의('16.4.27) · 차량제작사 등이 공단에 전자장치 진단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 ○ 진단기 제작사와 협의('16.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규칙·고시 제·개정에 따라 진단기 제작업체에 유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범용진단기의 개발 저조* * 차량제작사와 진단기 제작사 간 정보 이용료에 대한 이견 발생 < 향후 추진계획 > ○ 법령 개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상 비밀 이외에 전자장치 진단에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는 내용으로 추진 ○ 진단기 제작업체의 개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차량제작사, 진단기 제작사 및 공단 등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을 통해 진단기 제작사의 범용 진단기 개발 지원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교통안전공단	4. 어린이 카시트 보급 사업을 확대하고, 카시트 착용률 제고 방안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유아보호용장구(카시트)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시트 제작('16.5월~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작수량 : 1,000대 · 안전성과 편리성이 뛰어난 제품선정을 위한 규격·가격 동시입찰 추진 * '15년 카시트 제작·보급(1,000대)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카시트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급대상 : 전국 3세 이하 자녀가정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가정 ○ 고속버스 카시트 시범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속버스에 카시트 시범설치 관련 협의(국토부, 고속버스조합 등) ○ 카시트 홍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속도로 카시트 착용률 제고를 위한 현수막 설치 등 관계기관(한국도로공사) 협의
교통안전공단	5. 호적정정으로 정년 연장관련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년기준에 대한 규정 신설('15.9.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 결정, 행정관청 직권상정 등으로 생년월일이 정정되더라도 정년퇴직일은 입사 당시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상의 생년월일로 산정토록 규정 신설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교통안전공단	6. 자동차 부실검사 및 검사결과 조작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기준 명확화 및 구체화를 위한 법령 개정 건의('15.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검사 대상 기준 명확화 - 검사 부적합 내용 구체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5월 현재 총리실 규제심사 중 ○ 내부직원 대상 자동차검사 철저 업무지시 시달(5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8.20) 전자장치진단 검사 철저 지시 - ('15.9.1) 자동차검사 철저 재강조 지시 - ('15.11.7) 전자장치진단 관련 검사 철저 지시 - ('15.12.1) 운행기록장치(DTG) 및 최고속도 제한장치 검사 철저 재강조 지시 - ('16.1.26) LPG·CNG 등 내압용기 장착차량 검사 철저 재강조 지시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업무 지도·감독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 검사기준 및 방법 표준화 연구를 통한 검사기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제작기술 발전, 국내·외 자동차 검사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검사 기준·방법, 검사항목 및 검사 부적합항목 등에 대한 개선점 발굴 및 제도개선 건의안 마련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교통안전공단	7. 출장검사소 대도시 편중 설치 및 부실 검사 문제 등 운영 관련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적 역할 및 정부정책에 부합된 경우를 중심으로 대도시 출장검사장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도시 출장검사장 5개소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장인, '15.3월), 남양주(경춘, '15.5월), 대전(동아, '15.12월), 울산(동구, '15.12월), 수원(경오, '16.4월) ○ 부실검사를 방지하기 위해 검사기준을 명확히 하고, 규정 개정을 추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합항목 및 시정권고 사항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5월 현재 총리실 규제심사 중 ○ 전국 자동차검사소 대상 검사 철저 업무지시(5회)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실검사 방지를 위한 지정정비사업자 검사업무 지도·감독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교통안전공단	8. 에어백 관련 결함 조사를 철저히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에어백 관련 결함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에어백 전담조사팀을 구성('14.4월) 하여 정밀조사 진행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 불만신고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전화·기술분석·현장조사 등) - 충돌시험 및 에어백 단품시험을 통한 성능 검증 확인 - 에어백 관련 해외 리콜조사를 통해 국내 영향성여부 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4.11, 현대 아반떼 HD 에어백 제작결함조사 결과 리콜 실시(111,553대)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조사팀 지속 운영 및 제작결함 확인 시리콜 실시
교통안전공단	9. 사업용 고령운전자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강화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운전자용 운전적성정밀검사 기법 개발 완료('14.12~'15.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7종) : 시야각, 신호등, 화살표, 도로 찾기, 표지판, 추적, 복합기능 ○ 고령운전자용 검사기기 시범제작·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성산검사소 2대 운영('16.2.15~)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용 버스 고령운전자 운전적성 정밀검사 전국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기제작·설치 : '16.4~6월(39대) - 전국 시행 : 15개 검사장 ○ 택시업종 확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시운수단체 등 고령운전자 운전적성 정밀검사 필요성 설명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교통안전공단	10. 렌터카 사고 방지를 위해 렌터카 임대 시 자격제한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연령층 운전자 임차조건 강화 등 법제화 관련 국토부 및 국회 입법 건의(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자 자격에 대한 법적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세 미만으로 운전면허 취득 후 경과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 운전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경과한 운전자를 동승 - 무면허자, 청소년 등에 대여하는 렌터카 업체에 대한 처벌방안 마련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연령층 운전자 임차조건 강화 등 법제화 관련 의원입법 재추진 ○ 렌터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연구 결과를 반영한 제도개선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별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예방 대책수립 연구('16.3월 ~ 12월)
교통안전공단	11. 수입차 안전운전 보조전자장치 검사 제도를 개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용진단기 개발을 위한 정부협의를 및 법령개정 건의(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 제출('15.3.20) - 자동차제작사 등의 진단기 등 제공에 관한 고시 제정안 의견제출('15.11.13) · 수입사, 국내 제작사 등이 영업상 비밀 등 이유로 우리 공단에 전자장치 진단관련 정보제공 반대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개정 건의('16.4.27) · 차량제작사 등이 공단에 전자장치 진단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 ○ 진단기 제작사와 협의('16.2.1) - 시행규칙·고시 제·개정에 따라 진단기 제작업체에 유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범용진단기의 개발 저조 * 차량제작사와 진단기 제작사 간 정보 이용료에 대한 이견 발생 < 향후 추진계획 > ○ 법령 개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상 비밀 이외에 전자장치 진단에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는 내용으로 추진 ○ 진단기 제작업체의 개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차량제작사, 진단기제작사 및 공단 등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을 통해 진단기 제작사의 범용 진단기 개발 지원
교통안전공단	12. 화물차 불법구조변경으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튜닝 계도를 위한 포스터(2,700부)배포 ('15.10.19) ○ '15년 불법자동차 단속(22,044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기준 위반(15,922건), 불법구조변경(3,871건), 등록번호판 등 위반(1,333건), 기타(918건)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 개최 - 일시 : '16. 5. 12~13 - 내용 : 자동차관리법 및 제도 운영, 자동차일반, 불법자동차 단속실무, 지정 정비사업자 지도점검 실무 및 분임 토의 - 참석자 : 149명(국토부2, 지자체70, 경찰청65, 교통안전공단12)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튜닝에 대한 리플릿 배포 및 건전한 튜닝문화 조성 홍보 - 지자체 교통안전담당공무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불법개조 유형과 단속요령 - 불법튜닝 리플릿(8만부) 제작 및 배포 - 자동차튜닝 문화교실 운영 ○ 공단 불법단속반과 경찰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불법자동차 단속 협력체계 유지 강화
교통안전공단	13. 전세버스 운전자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등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버스 특별안전교육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버스 운전자 대상으로 졸음운전, 음주운전, 과로운전 등 사고사례 및 안전운전 방법 교육 - 교육실적('16년 1~4월) : 5회, 178명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버스 회사가 이용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차량 및 운전자에 관한 자격취득여부, 차령, 의무보험 가입여부 등 교통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안전정보 제공의무를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와 운송 계약 시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15.6.22 시행 '15.12.23) ○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관련 통보서 홈페이지 배너 신설('15.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보서 진위여부 확인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공단 홈페이지 배너 신설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버스 특별안전교육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버스 운전자 대상으로 졸음운전, 음주운전, 과로운전 등 사고사례 및 안전운전 방법 교육

한국철도시설공단

공백

□ 한국철도시설공단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철도 시설공단	1. 시설개선 필요 역사의 전수조사 실시 및 노후 시설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에스컬레이터 등)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 및 편의시설개선이 필요한 철도 역사를 대상으로 투자 계획에 따라 매년 순차적으로 개선 완료 - 철도시설개량 종합계획 보완수립 및 '15년 256억원 예산 집행 완료 * '16.12월까지 351억원 집행 예정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년까지 순차적 개량 추진
한국철도 시설공단	2. 스크린도어에 부착 되어 있는 광고판의 안전저해 여부 등을 검토하여 스크린도어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강장 스크린도어 안전 강화 방안 연구용역(과천대, '15.6월~'16.7월) 시행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스크린도어 설치기준 등 안전강화대책 수립예정 * (국토부) 용역결과 후 철도시설 기술기준 등 관련규정 개정 추진예정
한국철도 시설공단	3. 일반철도 대비 고속 철도 내진 개량을 저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속철도 내진 개량을 개량대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4월 성능평가 실시(전체:253개소) - '16.5월 28개소 개량 완료(대상:80개소) - '16.5월 신규착공 입찰공고 시행(23개소) * '16.7월 23개소 착공 후, 29개소 신규설계예정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까지 시설 개량 추진 완료
한국철도 시설공단	4. 30년 이상 노후 철도 시설 과다로 안전 사고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안전예방 대책을 강구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주기적인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등 사전 안전예방 점검활동 시행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된 철도 시설물의 개량은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투자계획 및 우선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량 예정 <p>* 철도시설개량 종합계획보완 수립(국토부, '15.12월)</p> <p>* 시설개량, 유지보수, 입체화 등 철도안전예산 증액요청: ('16년) 7,600억원 → ('17년) 8,796억원</p>
한국철도 시설공단	5. KTX 공항운행을 위한 공항철도 신호 시스템에 대한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평가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TX 공항철도 운영을 위하여 당초 ATC시스템에 ATP를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기술적 어려움 으로 ATS로 우선 개통 ○ ATP 설치를 위해 국내기술진(산,학,연) 으로 구성된 기술검토반 구성('15.9월) 하여 기술 검증 시행('15.12월)완료 및 제2여객터미널구간부터 우선 적용 <p>* '16.3.15 : 신호분야 실시설계 승인요청(ATP구축)</p> <p>* '16.4.14 : 설계자문회의 시행</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철도 시설공단	6. 대전역 복합역사 증축 관련 공단·공사 간 긴밀한 협의 등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4월 착공후 계획공정에 맞춰 증축 공사 정상 추진 중(공정율 43%) - 상부 복합시설 수직증축이 가능토록 기초보강 기 완료('16.2월) * 복합시설 역세권개발은 코레일에서 추진 중
한국철도 시설공단	7.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관련 '15년 예산 (300억원)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공고('15.8월) 및 분야별 설계착수 ('15.11월)하여 기성비용(4억원) 집행 - '16.5월까지 누적 21억(7%) 집행완료 - 잔여사업비(279억원)는 이월 집행예정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5~6월 노반·건축분야 실시설계 착수 및 하반기 궤도·전철전력분야 단계별 공사 착공 등으로 최대한 예산 집행 예정
한국철도 시설공단	8. 경전선 부전~마산 국책사업 지하화 등 지역 민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화 타당성 검토용역 진행 * 용역시행 : 한국교통연구원, '16.1~7월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국토부, 부산시 등)과 협의를 거쳐 조치예정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철도 시설공단	9. 광주송정역 증축을 위한 조속한 수요 재조사를 실시하고, 증축 전이라도 임시 주차장, 대합실 승객 혼잡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재조사('15.12월 완료) 결과에 따라 대합실 확장 추진중('16.8월 완료)이며, 승·하차 동선분리를 위해 승강장에서 광장으로 직접 연결하는 여객 통로(승강 설비 포함) 설치 진행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하차 동선분리를 위한 여객통로는 '16.6월 중 사용개시 추진 * 임시주차장은 코레일에서 별도 설치 검토 중
한국철도 시설공단	10. 창원중앙역 혼잡도 등 현장점검 후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고, 캐노피 공사 후 바닥에 물고임 발생 등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장 바닥의 물고임 발생 등은 조치 완료('15.12월) ○ 대합실 혼잡 및 편의시설 부족해소를 위해 현장점검 실시 후, 대합실 확장 방안을 마련하여 증축 추진 - 설계완료('16.4월) 후 개발제한구역관리 계획 변경 협의 중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완료 후 대합실 증축 시행예정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철도 시설공단	11. 철도부지 불법점유에 대한 단속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교량 하부 무단 불법점유에 대한 단속 강화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점유조사 실시('15.10월~11월)하여 무단점유 107개소(26,535㎡) 적발 * (철거) 12개소 (계고) 85개소 (소송) 10개소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무단점유 방지 등을 위한 지속적인 실태조사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국유재산 전수 실태조사시,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단속 병행 실시 * 시행기간 : '16.6월 ~ '17.6월
한국철도 시설공단	12. 동해안 철도(포항~삼척) 건설에 따른 지역 단절 및 경관 훼손 등을 고려한 토공 또는 교량화 여부 등 사업추진 방식을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방식 재검토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량화 타당성용역 시행('15.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기관) 제네시스코퍼레이션 * (용역기간) '15.5~10월 * (검토항목) 토공 시행 시 통행권, 조망권, 양분/분리, 통풍권, 홍수피해영향 등 검토 * (용역결과) 총 8개소(3.8km) 중 5개소는 교량 또는 통로BOX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 * (추가공사비) 626억원(정거장595억,본선31억)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결과를 토대로 국토부 및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결과에 따라 추진 * '16.5~6월 국토부 및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한국철도 시설공단	13. 터널 방수공사 시 부직포 재질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립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직포 재질인 장섬유에 대해 시공성, 경제성, 품질성 등을 검토하여 시방서 개정 추진 중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부중앙심의위원회 심의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한국철도 시설공단	14. 공사 및 물품구매 발주 시 설계변경 제한, 간접비 미반영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계약 특수조건('16.11월) 및 복수 예비가격 산정기준('16.12월) 개선을 통해 불공정관행 개선방안 마련 및 시행 완료 - 신규대체비목 폐지, 계약상대방에게 일방적 불리 조항 삭제 등 - 복수예비가격 산정 범위를 설계금액 기준 -5% → ±2.5%로 개선
한국철도 시설공단	15. 성남지역 교통사각 지대 개선을 위해 수서~광주 일반철도 건설 방안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국토부, '14.8월), 대상사업 선정 및 착수(기재부, '15.1월)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타당성 중간점검(기재부, '16.5월) 시, 사업비 절감 및 사업 영향권 재분석 요청 * (용지보상비) 기 매입한 환승부지 168억원 제외 * (도로 교통량) 네트워크 교통량 변화 불일치에 따른 재검토 등 * (역무인원) 중복 계상된 역사 근무인원 제외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타당성 결과(기재부, '15.1월~'16.12월)에 따라 후속 조치 추진
한국철도 시설공단	16.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금강산선, 동해선(강릉~제진) 연결계획 수립 및 추진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강산선 및 동해선 기술조사용역을 시행('15.6월~'16.3월), 사업추진 방안 마련 및 국토부 건의 완료 - 금강산선, 동해선 사업추진방안 * (사업내용) 금강산선 세포-내금강 66.2km, 동해선 강릉-제진 109.7km 단선 비 전철 건설 * (재원조달) 남북협력기금, 민간투자(BTL, BTO) 활용 등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부, 국토부 등 정부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정부 정책에 따라 추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철도 시설공단	17. 재 하청업체 자재 대금 미납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과 온라인으로 연계한 ‘체불e제로’ 시스템 구축·시행으로 자재, 장비업체,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의 대금 체불 원천방지 제도 마련
한국철도 시설공단	18. 설계 변경으로 지난 5년간 2조 3천억원이 증액되는 등 공사비가 과다하게 증액되는 설계변경에 대하여 감사실의 철저한 검토를 실시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부터 내부감사를 통하여 설계 변경 부적정 등 총 385건, 1,751억원의 계약금 감액조치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행 중
한국철도 시설공단	19. 금년 해외사업 수주액이 4억여원에 불과한 바, 해외사업수주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과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인도 렉나우 메트로 PM 등 804억원(공단 144억원) 수주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싱 현지홍보관 개관('15.11월) 등 ○ 2016년 수주 가능성이 높은 6개국 9개사업 선별 후 수주방안 마련('16.2월) 등 선택과 집중의 사업수주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싱 전담처 신설('16.2월), 사업단 개소('16.2월), 한국 컨소시엄 정예화 (27개사, '16.2월), SPD 위원장 ('16.3월) 초청행사 등 핵심인사 대상 적극적 마케팅 활동추진 중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경전철 사업 1단계(PM, 시스템구축 1,500억원) 진출 MOU체결('16.5월) 및 계약협상 진행
한국철도 시설공단	<p>20. 철도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해 특정 대학과 협약을 통해 추진하는 것은 타 대학과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할 것</p>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대학과의 협약에 따른 교육은 단기적인 교육 수요 충족을 위해 시행한 것으로, 이를 재검토 하여 '16년 교육계획 수립 시 개선완료 - 직원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해 신청자가 자율적으로 선정한 대학의 학위취득과정(38개) 개설

공백

한국시설안전공단

공백

□ 한국시설안전공단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시설 안전공단	1. 소규모취약시설물 안전 점검 시설물에 대한 사후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점검 이후의 안전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시 보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점검 관련 사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기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치사항 후속조치 결과 통보('15.5.7, 8.3, 11.3, '16.1.13) - 반기별 해당 부서에 시행 결과 보고 (‘15.7.17, 12.31) - 소유자 및 해당관리주체 조치결과 이행 독려 ※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조치이행 결과 제출 협조요청 공문 발송('16.1.12) - 사후관리 미흡시설에 대한 확인점검 실시 ○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시행시 보수· 보강계획 및 조치결과 이행사항 제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중 ※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 및 20대 국회 개원일정에 따라 추후 국토위 보고 예정
한국시설 안전공단	2. 소규모취약시설물 안전점검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취약시설 점검 수량 대폭 확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 1,757개소 - 2015년 : 4,015개소 (2.2배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본부-8451(2016. 12. 05) - 2016년 : 4,000개소예정(확대수량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본부-2357(2016. 02. 05) - 2017년 : 4,000개소예정(확대수량유지)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시설 안전공단	3. 공단이 공공기관 경영평가 E등급을 받은 것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 및 경영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 보고시 보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경영체계 및 경영혁신 TFT 운영 ('15.6.23~'16.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경영협의회 : '15.6.23부터 수시 - 비상경영실무협의회 : 총 4회 - 비상경영 간부회의 : 총 8회 - 경영혁신TFT 운영 : 총 5회 * 외부전문가 6명, 내부 직원 6명 ○ 경영개선계획 수립/추진('15.8.28~'15.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평가단 컨설팅 수감 : 총 5회 - 경영개선계획 제출('15.8.28, 기재부, 국토부) - 경영평가 지적사항 개선(지속) - 실무담당자 역량강화 내부교육(8회) - 체크리스트 활용한 모의평가(매월) ○ '15년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및제출('16.3.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실적보고서 내부검토(4회) - 주무부처와 공동 검토(2회) ○ '15년 경영평가 현장실사 실시(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효율 계량지표 현장실사('16.4.5) - 경영관리 비계량지표 현장실사('16.4.15) - 주요사업 계량/비계량지표현장실사('16.4.21) ※ 현장실사 대비 사전 모의현장실사 실시('16.3.14) ○ 경영평가단 체크리스트 작성 및 요구자료 제출('16.4월부터 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평가 결과 발표('16. 6월말 예정) 및 20대 국회 개원일정에 따라 추후 국토위 보고 예정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시설 안전공단	4. 안전진단 용역비 저가 낙찰로 인한 안전진단 부실화 문제 및 안전진단 업계의 영세업체 난립 문제 해소 대책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은 국가계약법 개정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 할 수 있는 사항으로 공단 조치 실적은 아래와 같음 ○ 관련 지침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밀안전진단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따라 계약금액 결정 - 정밀안전진단 : 「시설물안전법」 제 13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기준 따라 수행 - 저가수주 방지를 위하여 관리주체 및 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 실시 (공단 기술자 교육 등) ○ 평가대상 확대('15.7.6, 평가지침 개정)를 통한 민간업체의 저가 수주 방지 유도(완료)
한국시설 안전공단	5. 최근 사기공모·금품 수수 등 비위 행위로 인한 징계 건수가 증가 하였는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렴교육 및 행동강령 사례 핸드북 제작·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 및 간부직원 국민권익위 청렴 연수원 교육 참가(17명)('15.4.8~10.16까지 17회) - 전직원 청렴교육 실시('15.5.11, 15.8.10, '16.5.16.) ○ 부패예방을 위한 외부 익명신고시스템 운영(지속) (2015.1.1~현재)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렴문화 확산 TFT 운영 및 결과 발표('15.12.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개선 및 청렴성 향상을 위한 과제 발굴 등 현안과제 40개 완료 -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위반 행위 점검 ○ 임원 및 1,2급 등 고위직의 청렴교육 실시 ('16.4.21 44명 수료)
한국시설 안전공단	6. 국산 진단장비 활용 비중을 제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산 장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선 자분 탐상기('15.7)(3대/○○양행(주)) - 휴대용 무전기 도입('15.11)(5대/○○아이텍) ○ 국산제품의 적극 구입 활용(지속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 장비와 성능 가격 등이 동등한 경우 적극 구입
한국시설 안전공단	7. 안전점검 인력의 자격요건 및 실적관리를 강화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부별 실링제 운영실시('15.1월부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링제도 (Ceiling System) : 본부별 총 인원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유연성 있게 인력배정 및 운용 - 「2016년도 인력운영계획」에 반영·추진 ○ 월급제계약직의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15.12.15) ○ 기술분야별 멘토링 제도 운영을 통한 전문성 및 업무능력 향상 ('15.12.21)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밀안전진단 참여인원의 지속적 직무역량 강화교육실시 - 「2016년도 인력운영계획」에 반영·추진 ○ 월급제계약직의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15.12.15)
한국시설 안전공단	8. 국토교통재난정보(#4949) 시스템 활용실적을 제고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관리시스템(#4949) 통합 이관추진 - 국민안전처 안전디딤돌, 안전신문고 시스템과 통합 또는 이관 검토 추진 - 시설물안전법개정(안) 반영 추진 ○ 통폐합에 대한 국토부 업무 협의('16.3.11)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안전법」 개정 결과에 따라 세부추진 계획 및 협의 진행 예정(시특법 전면 개정 후 1년 이내)※ 국민안전처 협의 필요
한국시설 안전공단	9. 환풍구 점검 실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FMS 시스템 개선 등 조속히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시 보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에 정기점검표(환기구 포함) 입력기능 반영(~'16.6.27) - 기능개선 사업 용역 발주('15.12.28) - 환기구 점검결과 집계 기능탑재(~'16.6.27) - 기능개선 사업 용역 수행 중(~'16.6.27) <p>※ 기능개선 사업 용역 수행 완료 및 20대 국회 개원일정에 따라 추후 국토위 보고 예정</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시설 안전공단	10. 미조치 상태로 방치된 D·E급 시설물에 대하여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관리주체에 대한 통보 및 관련 제도 홍보를 강화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급 시설물의 관리주체 및 시설물의 방문 점검 등 이행확인 점검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 하반기('15.11.10 ~ '15.12.11) - '16년 상반기('16. 4. 6 ~ '16. 4.22) ○ 보수보강 등 조치사항 확인 및 독려 ○ 진행사항, 사용제한, 주민공지 확인, 문서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1/4분기('16.1.6)/'16년2/4분기('16.4.5)
한국시설 안전공단	11. 시설물 안전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OT-line 구축 등 적극 협조체계 추진('15.9.7) ○ 경찰청과 국토부 MOU 체결 추진 예정
한국시설 안전공단	12. 사장교, 현수교 등 특수교량 안전확보를 위하여 관리주체를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남도와 시설물 안전관리 기술교류 MOU체결('15.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남도 MOU체결 관련,이순신대교 국기안전대 진단관련 점검지원 수행('16.4.27~4.29) ○ 사천시 관할 삼천포대교 및 초양대교의 유지관리용 전기설비 관련 점검지원 ○ 사천시 관할 삼천포대교 및 초양대교의 유지관리용 전기설비 관련 점검지원 지속 수행 예정 (사업종료시까지 지속 수행)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시설 안전공단	13. 진주 혁신도시 이전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 121명 이전완료('15.12.29) ○ 2단계 : 특수시설신축 착공('16.3.8), '16년 하반기 완공 및 이전예정(17명)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단계 : 통합청사 임차 및 이전('17년 하반기)
한국시설 안전공단	14. 용역업체(청소,경비)에 대한 노동 3권 침해 등 부당업무 지시내용을 개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업체(청소,경비)에 대한 부당업무 개선 - 부당업무 지시관련 과업지시서 수정 등 변경 계약 체결('15.9.23)
한국시설 안전공단	15. 위험물 취급 항만이나 창고 등의 시설물을 공단 전담 시설물로 지정하는 등의 안전사고 방지노력을 강화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 전담시설물 축소 조정에도 불구, 위험물 취급 항만시설물 5개소 추가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035호, 2015.12.28) - 시설물의 상대적 중요도분석(기술적 난이도, 위험성, 전담관리 필요성 등)을 통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위험물 취급, 해안매립지역 및 전력공급, 대규모 접안시설 등에 해당하는 계류시설 5개소 추가 고시 <p>* 5개소 : 현대제철당진공장원료 및 제품부두 (20만톤), 광양항 LNG터미널 LNG부두, 연료 하역부두(제2부두), 통영생산기지LNG부두, 신선대부두5번선석및배후부지</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시설 안전공단	16. 시설물 진단·점검 기술자 보수교육을 강화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 개정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70시간 이수, 1회 교육 → (개정) 최초 교육 이수 후, 보수교육 35시간/3년주기 ○ 법령개정의견 국토부와 협의('16.4.) ○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물에 3종 시설물이 편입됨에 따라 안전점검과정과 보수교육 통합 검토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부(건설안전과)와 법령개정의견 협의 예정('16.6) ○ 3종 시설물 편입에 따라 안전점검 교육 신설과 연계한 보수교육의 종합적 검토 및 실시 내용 확정('16.6) ○ 시특법 하위법령안 마련 및 검토 ('16.7) ○ 시특법 하위법령안 확정('16.하반기) ○ 하위법령 개정 및 공포('17.상반기) ○ 보수교육 시행 준비('17.하반기) ○ 보수교육 시행('18.1)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시설 안전공단	17. 내진성능평가 및 수중조사 미실시 등에도 불구하고 정밀안전진단결과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존재하므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진성능평가 및 수중조사 미실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하여 국토부 정기감사('15.8)의 지적 이후 평가를 수행하고 있음 * 평가결과 국토부 보고일 ('15.8.13, '15.11.25, '16.3.14, '16.5.26)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평가지침(국토부 고시) 개정 시 내진성능평가 및 수중조사 미실시 시설물은 평가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 요청('16.10) 시설물은 평가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 요청('16.10)

공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공백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법적 검토 등 대책을 마련할 것	<p><조치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원지 특례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완료('16.5)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원지 세부시설 기준 마련을 위한 道조례 개정('16.6~) ○ 투자자, 관계기관 등과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 및 사업계획 재수립('17.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 면세점 매출 및 수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도민 지원사업은 오히려 축소, 지원을 확대할 것	<p><조치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산업, 도민지원사업 예산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예산 82억원 반영 (전년 대비 24% 증액 66억원→82억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 지역 특산물,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등 면세점 품목 확대를 검토할 것	<p><조치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면세점 내 제주지역 중소기업 입점 매장 운영 확대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장 : 2개소('16.2월 1개소 추가) - 브랜드수 : 15개('15.11월 5개 브랜드추가) - 판매원 : 5명('16.2월 2명 추가)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제주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4. 항공우주박물관 운영 개선 및 적자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p><조치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케팅 강화 통한 관람객 유치 극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 관람객 수 265,349명 (전년대비 50.4% 증가)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 시행('16.6~10)
제주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5. 신화역사공원 카지노 관련 분쟁 해소 대책을 마련할 것	<p><조치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화역사공원 카지노도입 관련 인허가 변경 취소 소송 종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단체의 1심 소송 각하('15.9) - 시민단체의 2심 항소 취하('15.11)
제주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6. 제주공항 혼잡 문제가 심각하므로 공항 인프라 확충 및 복합환승센터 사업 등에 JDC가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p><조치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환승센터 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추진 제안(이사장→도지사, '15.9) - 기본구상 용역관련 업무협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발전연구원) - 제도개선 협의(국토부)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 및 복합 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고시(국토부, '16.6. 예정, JDC 공공개발 사업시행자 지위 명확화) 후 제주특별자치도와 사업추진 계획 협의 ○ 제주공항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착수('16. 하반기)
제주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7. 미술품 등 회계처리 부실 의혹이 있으므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p><조치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처리 오류점검·수정 완료 및 내부통제 절차 강화(자산관련 통제절차 추가, '15.12) ○ 자산 실물 전수조사 완료 후 내용연수 종료 자산 폐기처리('15.12)
제주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8. 면세점 등 외주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p><조치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고용승계 및 노임단가 등 준수사항 반영 한 계약체결 ('15.10 이후 3건)
제주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9. 국제학교 학생 총원률이 여전히 저조하고 자회사 (주)해울의 자본잠식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p><조치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학생수요가 높은 저학년 정원규모 확충('15.10) ② 다수의 국내·외 입학 설명회 개최를 통한 학생총원 여건 개선('15.10~) ○ BLT 금리 추가 인하를 통한 국제학교 시설임대료 비용 총 639억원 절감('15.12)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16/'17학년도 모집대상 입학전형 시기(정시→수시) 변경 ② 적극적인 마케팅 홍보 등 학생 충원률 제고 노력(상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0. 모바일 앱 개발시 보안성 검토가 미흡하여 해당 앱을 활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p><조치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화사업 추진시 보안성검토 확행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위한 “정보보안지침 개정('16.4)” ○ 정보화 용역사업 추진에 따른 보안관리 방안 수립 및 부서별 용역사업 추진현황 점검('16.5)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1.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공동주택을 입주기업 근로자 등에 특별 분양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p><조치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근로자 특별공급 실시 완료 ('16.5.9~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분양 590세대 중 295세대(50%)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4(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특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공백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토교통 과학기술 진흥원	1. 지역별 균형있는 R&D 예산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국토부 R&D 감소(△0.9%)에도 불구하고, 지역특성화 사업 예산 확대 (10% 증가) *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 예산 : ('15) 79억원 → ('16) 87억원 ○ 지역특성화사업을 통해 6개 권역*별 특화 기술 선정·지원 등 균형있는 R&D 지원 노력 * 6개 권역 : 강원, 동남, 충청, 대경, 제주, 호남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성화 사업의 지속 지원을 위해 '16년 하반기 일몰사업 평가 적극 대응 (~'17 상반기) ○ 타 사업을 통해 지역 전략사업 및 주요 정책·현안 해결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한 과제 발굴·지원(~'16.12)
국토교통 과학기술 진흥원	2. 드론산업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인항공기 안전운항기술 개발 및 통합 시범운용* 연구 착수('15.12) - 고고도(150m 이상) 민간 무인항공기 인증 체계 및 운항기준의 수립을 통한 국내 무인항공기의 운용기반 확보 * 무인항공기 안전운항기술 개발 및 통합 시범 운용('15.12~'21.12, 한국과학기술원) ○ 저고도(150m 이하) 무인비행장치 교통 관리 체계 관련 다부처 공동기획 및 다부처 특위 심의 통과('16.5)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고도(150m 이하)의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탐지 및 관리기술 개발을 위해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체계 개발 및 실증시험” 연구 착수('17년)
국토교통 과학기술 진흥원	3. 국토교통 R&D 테스트베드 확보 노력을 통해 실용화를 강화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 물관리 등 7개 사업 22개 과제에서 테스트베드 확보 완료하는 등 실용화 강화 조치 수행 * 제로에너지 주택 실증단지(서울 노원구), 스마트 워터그리드(인천 영종도) 등 ○ 성과 실용화를 위한 실대형 규모 이상의 실험·검증을 추진하는 과제를 매년 신규 발굴 * 자율협력주행 고속도로 테스트베드 구축 추진 과제('15년), 저에너지 역삼투방식 해수담수화 파일럿 플랜트 구축 과제('16년) 등 추가 발굴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연계 등을 통해 '17년 신규 실용화 과제의 테스트베드를 확보하여 성과 검증 및 실용화 강화 예정(~'17 상반기) ○ 국토교통R&D기술의 검증에서 실용화,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종합실증단지 구축·운영 타당성 검증을 위한 기획 추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토교통 과학기술 진흥원	4. 자기부상열차 상용화를 위해 안전성 문제를 검토·보완하여 추진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성 문제의 검토·보완을 통해 인천 국제공항 자기부상열차 개통 완료('16.2) ○ 자기부상열차 성능개선, 건설비절감 관련 후속 연구과제* 수행 중 <p>* 도시형자기부상철도 시범노선 안정화 지원 및 성능향상 기술개발('13.12~'17.4, 한국기계연구원)</p>
국토교통 과학기술 진흥원	5. 경제성 확보 등을 통해 바이모달트램 상용화를 위해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이브리드시스템 도입과 대용량 수송 으로 운영효율성을 높이고 차량인증 및 신뢰성 시험 등으로 내구성 확보를 통한 연구* 수행 중 - 청라국제도시 전시운영('15.9) - 세종시 시범운행을 통한 경제성·편리성 검증('16.4) <p>* 바이모달 트램 실용화 기술개발('14.6~'16.6, 우진산전)</p>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부의 신교통수단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시 경제성, 투자효과 분석 등 지원 - 바이모달트램 실용화 개발 과제를 통해 지자체 등 수요처 마케팅 방안 및 운영 비용 분석 등 관련 연구 지원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토교통 과학기술 진흥원	6. 해수담수화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연구개발 과제를 추진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생산단가 절감을 위한 R&D 과제*를 추진 중 * 역삼투방식 해수담수화 플랜트 공정고도화 기술개발('14.12~'19.12, 광주과학기술원) ○ 역삼투막 방식 고프럭스(고유량) 기술개발 기획* 완료('16.3) *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고효율 저에너지 해수담수화플랜트 기술개발 기획('15.8~'16.3, 광주과학기술원)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삼투막 방식 고프럭스(고유량) 기술개발 신규과제 착수 예정('16.6)
국토교통 과학기술 진흥원	7. 비영리기관 소유특허의 중소기업 이전 및 기술사업화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연·대학 등의 사업화 유망기술을 중소기업으로 이전하기 위한 설명회 개최('15년 5회 19개 기술, '16년 2회 9개 기술) ○ '16년 중소기업 전용R&D 예산 확대 * '15년 184억 → '16년 205억(21억 증가) ○ 중소기업 기술의 해외 판로개척 지원 강화를 위해 KOTRA와 MOU 체결('16.1) * 국토교통 전문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해외 프로젝트 수주 공동 지원 ○ 국토교통기술대전시 해외 발주처 초청 상담회 개최('16.5) * 미얀마 등 4개국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이 보유한 국토교통R&D 우수기술(10개) 설명 및 1:1 상담 지원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비영리기관 보유기술 이전 지원 설명회 실시(3회 이상) ○ 해외 판로개척(전시·설명·상담회 등) 지원 3회 이상 ○ '17년 중소기업 전용 R&D 예산 확대('16.12) * '17년 예산 275억원 요구 및 심의중
국토교통 과학기술 진흥원	8. 연구성과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성과 조사·분석 및 활용 촉진 등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 연구성과 조사 실시('16.2) - 대형 실용화 과제 성과 및 파급효과 분석 실시('15.11~'16.6) ○ 기술실시계약 체결 안내 및 상담시행('16.4~)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자 및 과제수행 기관 성과관리·기술이전 담당자 대상 기술실시계약 및 기술료 설명회 개최('16.6, 12) ○ '15년 연구성과 분석 실시(~'16.10) ○ 대형 실용화 과제 성과 홍보 실시('16.7~)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토교통 과학기술 진흥원	9. 연구책임자 변경 또는 연구과제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평가시 연구책임자가 연구기간내 연구연가 및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검토 강화해 운영 중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책임자 변경 또는 연구과제 중단이 발생되지 않도록 연구기관에 안내 강화 및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엄격히 적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
국토교통 과학기술 진흥원	10. 제재조치평가단을 통해 사업비 환수여부에 대한 심의·의결 절차를 강화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재조치평가단 운영 매뉴얼’ 개정(’15.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재사유별 참여제한 기간 및 환수기준을 구체화하여 제재조치평가단에서 일관된 심의가 가능하도록 개선
국토교통 과학기술 진흥원	1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시 제재부가금 및 참여제한 강화(’1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비 부당집행 시 제재부가금 부과기준을 강화하여 용도외 사용한 금액의 300% 이상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강화 - 학생인건비의 용도외 사용시 무조건 5년의 참여제한을 주도록 강화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비 관리·집행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전담 실시하는 연구비 관리 도우미 운영확대('15.12) ○ 연구비 집행 유형을 분석하여 연구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연구비 사용실적 모니터링 실시 (연중)
국토교통 과학기술 진흥원	12.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구축시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추진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양광전지 등 유지보수가 용이한 건자재를 활용하여 실증단지 구축중 * 태양광전지 부품 교체는 불필요하며 발전 패널 등 시설수명 20년 이상으로 유지보수 용이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 후 평가(POE)를 통해 기술 보완 실시 및 유지보수 매뉴얼 작성·배포 예정 * POE : Post Occupancy Evaluation ○ 시공사의 하자보수보증증권 발급 및 A/S 전담부서를 통해 하자·보수 실시
국토교통 과학기술 진흥원	13. 물 분야 위상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후속 연구개발 분야 지원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시장 선점을 위한 물관리분야 원천 기술 개발 신규과제 3개* 선정 완료('16.5) 및 착수예정('16.6) * 시장 맞춤형 모듈화 기반의 분산형 용수 공급시설 실증 연구 등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분야 위상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획 연구 3개 및 신규과제 1개 추진 예정('16.9)
국토교통 과학기술 진흥원	14. 신기술 활용실적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청의 신기술 사용 확대를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15.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 적용 확대를 위해 발주청의 신기술 사용 의무화 조항 및 발주청 담당자의 면책 조항 신설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제5항 및 제6항 신설 ○ 신기술 협약자도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1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4조 제3항 개정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 협약 체결자 관리 등을 규정한 세부 규정 마련('16.12) ○ 신기술 홍보활동 지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 활용 활성화를 위해 발주기관 등을 대상으로 “신기술 찾아가는 설명회” 6회 개최 - 발주처, 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신기술 제도안내, 최신 신기술 소개 등을 위한 워크숍 개최('16.11)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토교통 과학기술 진흥원	15. 국내기업의 해외 플랜트건설 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플랜트시장 진출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바탕으로 기술 개발 추진 중 * MD/PRO 복합탈염공정 해수담수화플랜트 기술 개발('13.6~'19.6, 경남대학교) * 정·역삼투 융합 플랜트기술 개발('14.12~'19.12, 국민대학교) * 오일샌드 모듈화 플랜트 시공을 위한 설계, 제작 및 현장적용기술 개발('14.12~19.12, 성진이앤티)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동지역의 담수화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한-UAE 국제공동연구로 중동지역 맞춤형 해수담수화 기술 개발 추진 예정('16.6) * 중동지역 맞춤형 저에너지 해수담수화플랜트 기술 개발('16~'20)
국토교통 과학기술 진흥원	16. 연구개발비가 연말에 집중 집행되지 않도록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 R&D 예산 조기집행 및 실행률 관리 강화를 위해 상설 점검 체계 '예산집행 점검반' 구축('16.1) - 예산집행실적 및 계획 점검을 통해 '16.5월 현재 51.3% 집행 완료하였으며, 연구비 집행이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조치중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예산집행 점검반 회의 개최 및 집행실적·계획 점검 예정(~'16.12) ○ '16년 국토교통R&D 4,377억원 중 2분기 74.6%, 3분기 97.2% 집행예정으로 연구비 연말 집행 편중 방지 예정
국토교통 과학기술 진흥원	17. 연구개발비 사용 잔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비 집행현황을 집계하여 매월 연구기관에 통보하는 등 연구비 사용 모니터링을 통한 잔액 최소화 추진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비 사용실적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실태조사 등을 통해 점검 실시
국토교통 과학기술 진흥원	18. 주거복지 연구사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일몰 대비 주거환경연구 추진 당위성 확보 등을 위한 사업체계 개편(안) 마련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 R&D 사업관리체계 개편(안) 수립' 용역 수행('15.10~'16.9)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환경연구사업 사업체계 개편(안) 마련을 통한 사업연장 신청 예정

한국국토정보공사

공백

□ 한국국토정보공사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국토 정보공사	1. 지적측량의 정확도 제고와 공신력 확보를 위하여 폐기처분 측량장비의 재사용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규(측량장비 관리요령) 개정('15.6.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규정 강화로 재사용 미연에 방지 * 검·교정센터의 성능검사 결과에 따라 폐기 승인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폐기 승인된 측량장비는 전량 검·교정센터로 이관하여 교육용으로 기증하거나 부품 재활용 후 폐기 처리하도록 하였음
한국국토 정보공사	2. 지적확정측량 사업철수 등 지적측량 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에 따른 품질확보 등의 공공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기능조정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전담팀 구성('15.10.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본부 산하에 'LX경영혁신추진단' 구성 *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구조를 재설계하고 합리적인 조직·인력 운영방안 검토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기능조정 주요내용</p> <p>확정측량 민간이양에 따른 제도 안정성 유지를 위해 공사에 성과검사 등 품질관리 기능 부여</p> * 국가재정전략회의 VIP 보고('15.5.13.) 및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15.5.27.) </div>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측량 민간이양 및 품질관리 기능의 제도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 민간사업자 교육을 통한 기술이전 등 공사의 책임기능 강화

공백

주택관리공단(주)

공백

□ 주택관리공단(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관리 공단(주)	1. 무단결근, 입주자 개인정보 유출 등 근무기강 해이로 인한 사건의 징계 수위를 강화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규정 개정('16.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계 양정의 기준 세분화 * 근무기강 해이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시 비위의 유형을 복무기강 문란으로 간주하여 징계양정 처분 ○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수시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120개 관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300여개 관리소 중 2015년에는 120개 관리소를 불시 현장점검하였음.('15.12) - 연중 시행되는 각종 직무교육시 복무 기강 확립 및 청렴·윤리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음.(분기 1회)
주택관리 공단(주)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은 수정 공시 및 개선계획서를 제출('15.6.30, 기재부) 하였으며, 담당자 교육과 공시 체크리스트를 운영하고 있음.
주택관리 공단(주)	3. 공단이 수탁운영중인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행복지원센터) 홈페이지의 관리를 내실화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접수 및 신청 일정을 연중 게시 홍보하여 국민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배너 연결 및 게시판 업데이트 개선 완료('15. 9)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관리 공단(주)	4. 임대주택 관리방식을 결정함에 있어 관리비 절감 및 관리서비스의 질 제고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운영과 주택관리업무의 인력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한 「준공동관리」 시범 운영('15.4.1) - 6개 국민임대 공동관리로 평균 28.7% 일반관리비 절감 - 시설점검 및 관리팀을 구성하여 매분기 1회 점검 <p>* (준공동관리) 일정지역에 소재한 수개단지의 업무를 집중화를 통한 임대운영 및 주택관리 인건비절감 방안, 시흥능곡 6개단지 시범운영</p>

(주)한국건설관리공사

공백

□ (주)한국건설관리공사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한국건설 관리공사	1. 기관장이 특정 정당 발간매체와 정치적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된 인터뷰를 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 잡지사의 인터뷰 요청 및 광고 게재 중단('15.8)
(주)한국건설 관리공사	2. 지방자치단체 및 중소기업 건설현장에 대한 기술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시 보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및 중소기업 건설현장에 대한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 '16년 5월말 현재 39개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기술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16년말까지 기술지원 지방자치단체를 50개까지 확대 추진예정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의 재정상태와 지원할 수 있는 기술자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기술지원을 수행할 예정
(주)한국건설 관리공사	3. 청년 고용을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청년 고용(신입 정규직)을 9명 채용('16.3)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임금피크제 별도 정원에 맞추어 청년고용 추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한국건설 관리공사	4. 수주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수주 노력을 강화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흑자경영을 하고 있으며 수주실적은 수주목표를 초과 달성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다각화를 통한 업역 확대
(주)한국건설 관리공사	5. 공사의 건설안전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시설안전공단과의 업무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 역할 분담 방안을 모색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건설관리공사의 주요 업무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감리), 엔지니어링(설계) 사업, 건설사업관리(CM) 등을 수행하고 있어 시설안전공단과 업무상 중복되지 않음 <p>*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설립된 기관으로 동법 제25조 내지 제32조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점검과 유지관리”가 주요 목적임</p>

(주)윈터웨이플러스

공백

□ (주)워터웨이플러스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워터웨이 플러스	1. 영업이익 1억, 인건비 19억 6천만원에 불과한 워터웨이플러스의 존립 재검토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터웨이플러스는 수공의 핵심사업 영역이 아닌 마리나사업 및 아라뱃길 관광레저·시설관리 사업 부분을 자회사를 통하여 전문화함으로써 비용 절감 도모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코자 설립 ○ 창립 초기(3년차)이므로 가시적인 영업이익과 수익창출이 다소 미흡하였으나, 국내 마리나 최초 「골드앵커 4.0」 국제인증('15.8) 및 「해양아카데미」 설립('15.12) 등 전문영역 구축을 통해 영업이익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 또한 서해5도 수산물복합센터* 사업 추진 ('15.4)을 통해 자립기반을 확충하고 있음 <p>* 총 투자비 62.5억원, 워터웨이플러스 20% 투자 ('15.4~12)</p>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레저 및 마리나분야 사업확대 등 자생적 존립기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리나복합지원센터('16.1~'17.12) - 서해5도 수산물복합문화센터('15.4~'16.12)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워터웨이 플러스	2. 수입의 대부분(87.9%)을 모회사에 의존하고, 수공 출신 임직원이 경영을 지속하는 문제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회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자립경영 계획(비전2020 /'15.8) 수립하고 자체사업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리나복합지원센터('16.1~'17.12) 및 서해5도 수산물복합센터(15.4~'16.12) 등 자체 수익사업 추진. <p>* 자체사업비중</p> <table border="1" data-bbox="842 696 1469 786"> <tr> <td>'14년</td> <td>'15년</td> <td>'16년(계획)</td> </tr> <tr> <td>6%</td> <td>10%</td> <td>12%</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직원의 경우, 워터웨이플러스 창립 초기 안정적인 기반조성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수공출신을 선임하였으나, 앞으로는 “임원추천 위원회 운영규정(워터웨이 '14.12)” 및 인사운영시행지침('15.10)에 따라 외부전문가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부여할 계획 <p>* '14년 이후 수공출신 직원 채용 실적 없음</p>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해5도 수산물복합센터 및 마리나 복합지원시설 건립등 비전2020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자체사업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예정 <p>* (참고)자체사업비중 확대 목표 및 추진방안</p> <table border="1" data-bbox="794 1529 1469 1619"> <tr> <td>구분</td> <td>'17년</td> <td>'18년</td> <td>'19년</td> <td>'20년</td> <td>'21년</td> </tr> <tr> <td>비중(%)</td> <td>20.8</td> <td>28.9</td> <td>32.3</td> <td>34.9</td> <td>36.3</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해5도 수산물복합센터 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사업비 62.5억원(정부 50, 자체 12.5), ** 기간 : '15.4~'16.12 - 마리나복합지원시설 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사업비 56억원(연면적 1,330평, 지상 4층) ** 기간 : '16.1~17.12 ○ 직원의 경우 수공출신 채용 억제, 임원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 	'14년	'15년	'16년(계획)	6%	10%	12%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비중(%)	20.8	28.9	32.3	34.9	36.3
'14년	'15년	'16년(계획)																		
6%	10%	12%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비중(%)	20.8	28.9	32.3	34.9	36.3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워터웨이 플러스	3. 낙동강문화관장 채용절차 및 사후 인력관리의 미흡, 향후 인사시스템 개선 대책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용대상자의 신원조회 및 평판조회(전직장) 등을 강화하여 비적임자를 사전 배제하는 등 인력관리 강화('15.5~) ○ 본사에서 수시 현장 방문 및 고충상담을 시행하여 하급직원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이를 내부 인사시스템에도 반영('15.5~)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채용직원에 대한 인성·적성 테스트 강화를 통하여 부적격자 선임을 원천 배제하고, 직원 인사관리시스템도 합리적·체계적으로 운영
(주)워터웨이 플러스	4. 자체 수익사업의 비중 확대 등 경영개선 계획 및 실행방안을 수립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수익사업 확충을 위한 장단기 추진 대책(비전2020)을 수립('15.8) 하여 추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해5도 수산물복합문화센터 건립추진 ('15.4~'16.12) - 신규 수익창출을 위한 마리나 복합지원 시설 건립추진('16.1~'17.12))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리나, 관광레저 관련 신규사업 발굴, 수익 확대 노력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2020」 거점별 전략에 따라 아라뱃길 10개 과제*, 강문화관 7개 과제** 추진 - 마린에듀센터 건립 추진('16.1~)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아라빛섬 즐길거리 먹거리 확대, 여객물류 활성화, 서해5도 수산물 복합 센터 등 10개 과제</p> <p>** 수상레저사업, 강문화 투어 축제 운영, 물문화관 네트워크 운영 등 7개과제</p>												
(주)워터웨이 플러스	5. 주요 사업비 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향후 개선 대책	<p>< 조치실적 ></p> <p>○ '15년도에는 메르스사태 등으로 인한 내방객 감소로 사업집행실적이 저조하였으나, '16년도에는 아라뱃길 봄꽃축제 등의 사업활성화로 '16.5월말 기준 사업비 집행율은 약 35.3%로 전년 동기 22.6% 대비 약 156% 증가</p> <p>* (참고)사업비집행율 비교(%)</p> <table border="1" data-bbox="826 1146 1469 1256"> <tr> <td>'15.5</td> <td>'16.5</td> <td>증감</td> </tr> <tr> <td>22.6</td> <td>35.3</td> <td>156</td> </tr> </table> <p>< 향후 추진계획 ></p> <p>○ 집행실적 관리 강화로 사업비 집행율 제고 노력</p> <p>- 2/4분기 43.0%, 3/4분기 81.0% 계획</p> <table border="1" data-bbox="826 1617 1469 1704"> <tr> <td>2/4</td> <td>3/4</td> <td>'16.12.10</td> </tr> <tr> <td>43.0%</td> <td>81.0%</td> <td>98.0%</td> </tr> </table> <p>* (참고)사업비 집행계획</p> <p>* 단 강문화·관광레저사업은 사업특성상 9~10월에 행사와 이벤트가 집중되므로 상반기 조기집행 곤란</p>	'15.5	'16.5	증감	22.6	35.3	156	2/4	3/4	'16.12.10	43.0%	81.0%	98.0%
'15.5	'16.5	증감												
22.6	35.3	156												
2/4	3/4	'16.12.10												
43.0%	81.0%	98.0%												

코레일네트웍스(주)

공백

□ 코레일네트웍스(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코레일 네트웍스(주)</p>	<p>1. KTX특송 위험물 배송 예방을 위한 개선책 마련</p>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해물품 배송 예방활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속 탐지기 검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14개 영업소에 비치 완료 - CCTV설치 및 운영(4개 영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대전, 동대구, 부산사업소 - 위해물품 배송금지 안내문 게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14개 영업소 - 관할경찰서 마약 탐지견 순찰 활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1~2회 순찰 → 주 1회 순찰로 강화 - 위험물 발견 시 처리절차 보완·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별(격리→즉시보고→인원통제) 조치사항 매뉴얼화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 철도사법경찰관 주관 주요 KTX역 X-Ray 투시기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8월부터 순차적 * 특송수화물은 전수검사, 일반고객은 샘플링검사

공백

(주) 해 윤

공백

□ (주)해울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해울	1. 제주국제학교 적자 누적, 전출생 및 교사 이직률 증가 문제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p><조치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LT 금리 추가 인하를 통한 국제학교 시설임대료 비용 총 639억원 절감('15.12) ○ 운영프로그램 개선 등 학생·학부모간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 국내외 국제학교 교원 채용기간 통상 2년 내외로 이직교사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18학년도 총원율 80% 달성으로 경영정상화 실현
(주)해울	2. 제주국제학교 수업료, 교복구입비 등이 본교보다 오히려 높아 외국인 학생 유치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해결 방안을 검토할 것	<p><조치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교대비 유학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감안하면 가격 경쟁력 확보 ○ 공개입찰을 통한 교복구입비 절감노력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졸업생 해외 명문대 진학성과 및 현지 마케팅 강화로 외국인학생 증가 (184명->251명 67명 증가)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해울	3. 제주국제학교 학생 출신 지역의 불균형 문제 해소 및 장학금 혜택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p><조치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의 국내·외 입학 설명회 개최를 통한 학생충원 ○ JDC와 공동으로 저소득층 및 글로벌 우수인재 장학제도 운영 3명('16.1)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상황 고려하여 장학금 점진적 확대추진

지방자치단체

공백

서울특별시

공백

□ 서울특별시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서울특별시	1. 대한하천학회에 대한 연구용역 발주 과정이 적절하였는지 여부를 조사 하여 사후 보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의원에게 용역발주 적절성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일시 : '16. 2.15, '16. 5.10 - 방문자 : 물순환정책과장 외 3 - 면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노근의원('16. 2.15) · 이장우의원실 유운호 보좌관('16. 5.10) - 설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하천학회의에서 수행한 용역에 대해 계약관련법 및 관련 지침에 의거 공정하게 선정하였음을 설명함 - 방문결과 : 용역선정 시 공정성 이해함
서울특별시	2. 안전성, 교통문제 등을 고려하여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사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동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교통대책, 안전대책 및 주변상권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안전대책 수립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경찰청·도로교통공단·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교통영향 심층 검토 및 최적 교통개선안 협의 ('14.11.~'15.10) - 서울역고가 차량통행금지에 따른 교통대책 수립('15.12.3) - 서울역주변 교통개선공사 완료('15.12.12) - 서울역 고가 바닥판 철거공사 안전관리 계획 승인('16.1.5)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상권 등에 대한 대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단체와의 민관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 각계각층 위원 추가위촉, 분과위 구성, 현장 소통센터 설치 운영 등 7017 시민위원회 운영 내실화 - 봉제산업 지원을 위한 봉제사랑방 개설('15.6.5) - 서울역 주변빌딩과 연결통로 설치 양해각서 체결('15.8.21) - 시-자치구 간 실무협의체 회의를 통해 세부 사업별 협력방안 논의('15. 7~8월)
서울특별시	3. 인근 주민, 남대문시장 상인 및 경찰청·문화재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남대문시장상인회 간담회시 상생협력 합의('15.8.20) 등 인근주민·상인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600여회 이상의 소통을 통해 시민 공감대 확산 ○ 특별시도 노선변경(국토부, '15. 10 ~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도로 연결성과 도로망 구성 등 특별시도 지정기준에 대해 국토부와 약 100여 차례 협의를 거쳐 노선변경 승인('15.11.25) ○ 교통안전시설심의(경찰청, '15. 2 ~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역고가 폐쇄전에 서울역 주변 교통 지·정체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 시민, 전문가 및 경찰청, 서울시가 약 130여 차례에 걸친 논의를 거쳐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역주변 4개 교차로를 개선하는 최적의 교통 개선안을 마련하여 최종 통과('15.11.30) ○ 구서울역사 문화재 현상 변경 (문화재청, '15. 7 ~ 12월) - 문화재 보호구역((구)서울역사) 안에 서울역 고가도로 일부가 위치하고 있어 - 문화재 위원과 문화재청과 문화재 안전, 시위 및 투신대책, 경관 및 역사성 보존방안에 약 90여 차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여 최종 통과('15.12.18)
서울특별시	4. 지하철 지지절연물 내구연한을 설정하고 유지·보수를 강화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구연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2.28 : 애자(지하철 지지절연물) 내구연한 관련 수립 · 현수애자(특별고압용) 내구연한 : 본체 60년 (캡 20년, 설치 금구 20년) ○ 애자 관리 교체기준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7.11.2. 애자관리 및 교체 기준 방침수립 · 인장력을 받는 키퍼부위 부식에 따른 교체 기준 수립 ▶지상부 24,450개 중 11,771개 기교체 및 연차적 교체 추진계획 수립 시행 중 * 지하부 지지애자의 경우 우천과 상관없이 키퍼부위 부식상태 양호(자체 점검 검사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시행 결과)하며, 2년 주기 애자세척공사를 통한 절연성능 유지관리 시행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p>○ 연차별 애자 교체 (단위 : 개)</p> <table border="1" data-bbox="794 479 1465 654"> <thead> <tr> <th>구분</th> <th>계</th> <th>2016년</th> <th>2017년</th> <th>2018년</th> <th>2019년</th> </tr> </thead> <tbody> <tr> <td>지상부 현수애자 교체</td> <td>12,679</td> <td>3,279</td> <td>3,100</td> <td>3,300</td> <td>3,000</td> </tr> </tbody> </table>	구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지상부 현수애자 교체	12,679	3,279	3,100	3,300	3,000
구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지상부 현수애자 교체	12,679	3,279	3,100	3,300	3,000									
서울특별시	5. 광고판 부착 등으로 개폐가 불가능한 스크린도어 안전 보호벽을 비상시 개폐가 가능하도록 보완할 것	<p>< 조치실적 ></p> <p>○ 독립문, 홍제역, 양평역 광고판 철거 및 비상문 설치 완료('16. 5.)</p> <p>< 향후 추진계획 ></p> <p>○ 서울대입구, 신림, 안국, 청담등 16개 역사 광고판 철거 및 비상문 설치 추진 ('16. 7.~)</p> <p>○ 군자, 신금호, 마천 등 80개 역사 광고판 철거('16. 8. 까지 철거 완료)</p> <p>○ 재정여건 및 광고 계약기간 고려하여 연차별 사업추진('17. 1.~)</p>												
서울특별시	6. 지하철 객차 내 CCTV 설치를 확대하고, 국비 보조가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 간 협의를 진행할 것	<p>< 조치실적 ></p> <p>○ 신규 전동차 CCTV 설치 도입</p> <p>- 2호선 노후전동차 200량 교체 ('18.12. 납품 완료 예정)</p> <p>- 9호선 전동차 70량 증차 ('17.12. 납품 완료 예정)</p> <p>* 도시철도법 개정('14.7.)에 따라 신규도입 전동차 CCTV 설치</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전동차 CCTV 설치비용에 대한 정부지원 법적근거 마련시 확대설치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추진 ○ 노후전동차 교체 등 신규전동차 도입시 CCTV 설치 지속추진 <p>* '22년까지 2,3호선 노후전동차 620량 교체 (CCTV 설치)</p>
서울특별시	7. 서울시철도공사의 성남-여주선 운영 참여계획을 재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성남-여주 복선전철 운송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 발주사업으로 도철에서 운영 기관 단독입찰,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국토부와 도철 간 협약(안) 협상 진행('15.6~'16.3) · 초기 적자에 대한 국토부 지원 여부 및 방법 협상 - 국토부 협상 종료 통보('16.3.10.) · 도시철도공사 사업 미참여 결정
서울특별시	8. 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 광고에 대한 유진메트로컴의 독점문제 및 탈세, 회계부정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강장안전문 민자협약의 회계사항 검증 용역 실시('15.11) - 용역 결과 유진메트로컴의 원가매출의 부적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검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다만 수익률 검증 및 대안분석 결과 '타인자본 재조달을 통한 재구조화'가 현실적 대안으로 분석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강장안전문 민자협약 관련 법률자문 실시('15.9/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일방에 의한 협약해지는 불가하며, 해지 하더라도 해재시지급금 지급 및 추가적인 배상 필요 ○ 자금재조달 관련 법률자문 실시('16. 3.23 ~ 3.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투자법 준용불가하므로 자금재조달 이행 강제 불가함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리적인 협약개선 방안 지속 검토와 사업자와 협약개선 검토 위한 회의개최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도한 사업수익률 및 계약사항 재검토, 대외적 지적 사항에 대한 논의 요청 - 향후 합리적 사업운용을 위한 방안 및 협약 내용 개선방안 논의 ○ 국토부의 '승강장안전문시스템 개선에 관한 협조요청' 등 대외적 여건 변화를 협약개선의 조건으로 협상 및 법리적 검토
서울특별시	9.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하철 안전 관련 인력의 외주화를 최소화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부민간위탁 운영개선 방안 수립 (서울메트로 사장결재-108, '16.3.4.) ○ 구의역 사고 관련 안전업무 외주화 개선을 위한 본선 안전분야(승강장안전문 유지보수, 전동차경정비)자회사 설립 관련 출자승인요청 중단 및 전면 재검토 중('16.6.)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성 PSD 외주화 중단 및 직영방안 검토 ○ 유진 메트로컴 관련 협약변경 및 재구조화를 통한 직영화 방안 검토 ○ 안전시설 전분야 업무분석을 통한 적합한 운영방식 선정 예정
서울특별시	10. 서부선 경전철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제안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제출 독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도시철도 관련 정책자료 제공 * 우리시 시책에 부합되는 제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변경된 요금정책 등 제안관련자료 지속 제공 - 타 지자체 경전철 견학 및 차량규모 사전검토 * 부산 지하철 4호선(반송선) 및 부산 김해 경전철 견학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제안자(두산건설) 수정제안 제출('16. 상반기) ○ 수정제안 검토 및 민자적격성 조사 의뢰 등 민자사업 절차 추진('16. 하반기)
서울특별시	11. 택시 불친절 민원 해소를 위하여 민원 과다발생 회사에 불이익 처분을 부과하는 등 대책 검토 필요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시 불친절 관련 처분 근거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개선명령 의견 수렴하여 불친절 처분 제도 정비('16.2.1. 시행) ○ 법인택시 회사별 민원 총량제 실시에 따른 민원 과다발생 회사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중단 및 택시평가 반영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별 운수종사자 규모에 따라 민원 발생 기준 설정하여 그 달성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 '16년도 법인 택시 : '14년(18,515건) 대비 5,572건(30%) 감축 목표 - '16년도 법인택시 평가에 민원 관련 배점 상향 조정 * '15년 100점→'16년 300점 ○ 택시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계 공감대 형성 및 분위기 확산 유도 - 법인택시 책임자 대상 불친절 등 택시불편 민원 개선을 위한 간담회 교육 실시 ('15.12월, '16. 5월) - 친절택시 기사 선정(100명) 및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강화로 특별 관리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도 택시회사 서비스 평가 실시 : '16.5~12월 ○ 친절택시 기사 선정 및 표창수여 : '16.11월 ○ 택시민원감축 추진보고회 개최 : '16.12월
서울특별시	12. 승차거부 문제 해결을 위한 심야택시 요금 지원 및 해피존 확대 계획을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운영 개요 - 기간 : '15.10.23.~12.25.(10주간) <li style="padding-left: 20px;">매주 금요일 23시~2시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신중하게 검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 : 강남대로 신논현역~강남역(770m) - 운영방식 : 지정승차대 에서만 택시이용 가능 <p>○ 시범운영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시공급 11.7% 증가(우천 제외) * 평시 1,520대, 해피존 1,697대 (1일평균 177대 추가 운행) - 시민만족도 79.3%, 대기시간 8.4분 단축 - 심야택시 요금지원은 택시업계에서 자체부담 (서울시 비용부담 없었음)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효과 및 시민반응이 좋은 만큼 지속 운영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 추진 * 국토교통부에 관련법 개정 등 제도개선 요청 ('15.10월, '16.1월/3월) ○ 심야 택시승차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 및 시행 (심야 콜승합 등)
서울특별시	13. 고급디젤 택시의 운영원가 및 모범택시 운수종사자와의 이해관계 상충 문제 등을 고려하여 그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규정에 따라 고급 택시 업무 추진 ○ 국산 및 비경유 차량 등 다양한 차량이 도입 될 수 있도록 업계 협의 완료 * 운행대수 202대 중 비경유 차량 100%, 국산차 105대 운행 중 ('16년 5월말 기준) ○ 모범택시와의 이용수요층이 겹치지 않도록 서비스 및 요금수준 차별화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16시간 서비스 교육 의무화, 도어서비스 등 차별화된 서비스 - 요금은 모범택시의 1.5배 수준 * 자율신고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고급택시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미지급
서울특별시	<p>14. 기초철근 누락이 확인된 264개소 버스승차대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공업체에 제재처분을 부과하는 등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p>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밀안전진단 및 부실벌점 부과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철근 누락 승차대 1개소 정밀안전진단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진단 - 설계도면 상이하게 시공하고 감리한 시공사와 감리단에 각각 부실벌점 1점 부과 조치 ○ 버스조합을 통해 시공사에 재시공 및 보완 시공 요구하고 감리단에 고발조치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구사항에 대해 시공사 및 감리단 반발 ○ 관계자 반발에 따른 법적 제재가능 여부 외부 법률 자문 실시(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제재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안전상 이상이 발견시 시공하자 가능하다는 자문 의견 제시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 9월 중 기초철근 누락승차대 정밀안전진단 실시 (공인 전문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결과 승차대 이상 발견시 하자보수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서울특별시	15. 중앙버스전용차로 시행에 따라 버스정류소 설치기준을 보완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버스전용차로(서울형BRT)는 「간선급행 버스체계(BRT) 설계지침(’10.6, 국토교통부)」을 준용 ○ 현재 시행 중인 중앙버스전용차로 설계 용역(설계, VE 등)을 반영하여 우리시 도로 여건에 적합한 설치 기준을 작성 중에 있음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12 서울형BRT 설치기준 수립(예정) 								
서울특별시	16. 시내버스 종사자에 대한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문제에 대한 시정방안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금 금융기관 예치실적의 평가를 통해 퇴직금 적립률 지속 향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금 적립률 현황 <table border="1" data-bbox="780 1303 1401 1424"> <thead> <tr> <th>연도</th> <th>’13년</th> <th>’14년</th> <th>’15년</th> </tr> </thead> <tbody> <tr> <td>적립률</td> <td>80.1%</td> <td>83.6%</td> <td>88.2%</td> </tr> </tbody> </table> ○ 임금체불 지속 발생업체(신흥기업)의 체불 임금해소를 위해 운수종사자 계좌로 직접 지급 실시(’16.4월부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 4월 459백만원, ’16.5월 530백만원 ○ 시내버스회사 평가에서 ‘운수종사자 1인당 평균 체불액’에 따라 70점까지 감점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년도 신흥기업 63점 감점 	연도	’13년	’14년	’15년	적립률	80.1%	83.6%	88.2%
연도	’13년	’14년	’15년							
적립률	80.1%	83.6%	88.2%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스 운수종사자 임금체불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불 발생시 운전직 임금 직접 지급방식으로 개선 시행 - 버스회사 평가시 임금체불에 따른 페널티 강화('16년도 평가에 적용)
서울특별시	17. 설치규격에 부적합한 과속방지턱을 정비하고, 장기적으로 도로 포장기법 및 구조 개선을 통하여 과속방지턱 설치를 축소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 8. : 과속방지턱 전수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규격 과속방지턱 7,888개소 적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 7,858, 사업소 27, 공단 3 ○ '15. 9.~'16 .5. : 비규격 4,451개소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 4,421, 사업소 27, 공단 3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정비 3,437개소(자치구) 정비 예정
서울특별시	18. 싱크홀의 주요 원인인 노후 하수관로를 조사·정비하고, 지하공간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싱크홀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 7 : 노후 하수관로 조사용역 시행 ○ 사전 탐지활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 6 : 도로함몰지도 전산시스템 구축 추진 - '15.12 : 첨단 GPR 탐사장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관리구간 동공탐사 실시하여 도로함몰 선제적 대응(지속 추진) ○ 굴착공사 및 지하수 유출 관리강화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상·하반기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발생 현장조사 실시 - 대형 굴착공사 시 지하수 영향조사 의무화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18.1.1부터 시행) - 민간 건축공사장 굴토심의 시행 * '15.7.30 : 굴토심의 의무화(조례 반영)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 7 : 도로함몰지도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 ○ '18.12 : 노후 하수관로 조사완료 - 조사결과 불량 하수관로 '19년까지 정비추진
서울특별시	19. 올림픽대로 지하화 건설 필요성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림픽대로 전면 지하화는 많은 사업비가 필요하고 진출입 체계변경으로 시민불편이 예상되어 신중한 검토 필요 - 도로법에 의한 법정계획인 제1차 서울시 도로건설관리계획에서 검토 예정
서울특별시	20. 올림픽대로 영동대교 남단 강남 진출 램프 건설 필요성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동대교 남단 연결램프 구조개선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중 ('16. 6월 현재) - 올림픽대로(김포방향)에서 영동대로 방면 진출 램프 추가설치 방안 검토 중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 예정
서울특별시	21. 우면산터널 민간투자 사업의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1.14 사업재구조화에 따른 변경실시 협약체결
서울특별시	22. 강남순환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의 직접 연결을 적극 추진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1.11 한국도로공사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산방향 연결로 접속방안(평면교차, 입체교차) 검토 후 재협의 ○ '16.5.30 수서방향 직접연결 설치 완료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7.3 수서방향 직접연결로 개통 ○ '17.12. 설치비용 분담방안 협의 완료 예정
서울특별시	23. 제물포터널 여의도 출구지역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여의도 샛강지역에 대형 수직 환풍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12.16 수직환풍구 설계 완료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 8. 실시계획 변경 승인 예정 ○ '20. 5. 설치공사 완료 예정
서울특별시	24. SH공사 관리 영구임대주택 내 고급 외제차량 보유자 등 부적격 거주자를 가려낼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구임대아파트 고가 외제차 보유자 퇴거와 관련하여 국토부에서 공공주택특별법 규정 신설 및 '15.12.29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마련,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수 있도록 퇴거 기준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모색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주택특별법 관련 규정 신설 전에는 영구 임대아파트 거주자중 고가 외제차 보유자에 대한 퇴거 규정이 없었음 ○ 향후 ‘동법시행규칙 제정’(국토부) 및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운영 및 관리규칙’ 보완 및 퇴거근거 개정(서울시)이 되면 SH공사에서 이를 근거로 재계약시 적용 예정 *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3 (재계약 거절 등) : '15. 8.28신설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47조(재계약의 거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항 2호 임차인의 자산이 법 제48조에 따른 임차인의 입주자격 요건을 초과하거나, 임차인의 소득이 법 제48조에 따른 임차인의 입주자격 요건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15.12.29.시행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제정(국토부) 및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운영 및 관리규칙(퇴거 근거 마련) 후 적용 예정
서울특별시	<p>25. 서울리츠 사업을 포함한 임대주택 8만호 건설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투자 유치 등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p>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투자회사(리츠)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12.17 : 부동산리츠 활성화 실무 협약 체결 (국토부, 서울시, SH공사) -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주택도시기금 활용 추진 - 리츠 안정화 시점, 일반공모를 통한 일반인 참여 추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츠민간자금 공모 구체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MOU체결 추진 ('16.하반기)
서울특별시	<p>26. 대학생 임대주택 (희망하우징)의 신청자격 중 주택 소유 여부 판단 시 주택의 소재지역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p>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와 SH공사가 국토부에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규정 개정을 건의 하였고, 국토부에서 희망하우징 공급관련 주택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신청가능한 것으로 질의회신함('15.12.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부 개정건의 1. 대학생임대주택 공급규정 개정 건의(서울시) : '15.11. 6 2. 대학생임대주택 공급규정 방문 건의(SH공사) : '15.12. 6 3. 대학생임대주택 공급규정 개정 건의(SH공사) : '15.12.10 4. 질의회신(대학생 임대주택 공급규정)(국토부) : '15.12.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63조의2제1항에 의하면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해당하는 가구의 대학생 입주자를 선정하며 무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대상 가구에 해당함 ○ SH공사 내부방침('15.12.31.) 수립 후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신청이 가능
서울특별시	<p>27. 장기전세주택 임대보증금을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p>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수준 상향조정 실적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전세주택 재계약분은 5% 범위에서 임대보증금을 증액 청구하나, 공가분 신규계약은 시세의 80%로 공급 중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전세주택 임대보증금 증액청구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임대료의 100분의 5 이내에서 증액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임대보증금 현실화를 위해서 법령 개정 추진 검토
서울특별시	28. 현행 방안은 한강 르네상스 사업과의 유사성 및 한강 수상비행장 사업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추진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강 자연성회복 및 관광자원화 사업은 한강 르네상스 사업과는 다르게 정부-서울시가 합동으로 자연성 회복을 기본기조로 계획을 수립하여 여의도-이촌권역을 우선 추진 ○ 정부-서울시 간 합의사업에서 수상비행장 제외
서울특별시	29. 샛강 정화사업을 동방안에 포함시킬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서울시 간 합의사업에 샛강 정화사업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여의샛강 유지유량 확보
서울특별시	30. 한강 수상택시 사업의 전면 취소를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해지 또는 양도·양수 가능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해지·사업허가 취소는 어렵고,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허가요건을 가진 회사에게 양도 가능 ○ '15.10.20 : 수상택시사업 양도·양수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 청해진해운 →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사회 * '16. 10월 재운행 예정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서울특별시	31. 한강 수상택시 이용객이 하루 17명 내외로 이용이 저조한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p><조치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월호로 중단된 수상택시 운영업체가 변경되어 현재 운영재개를 위한 시설(도선장) 보완과 활성화 계획중 임 - 변경: 청해진해운→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 수상택시 활성화에 대한 운영사(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와 협의 다각도로 모색중 ○ '15.10.20 : 수상택시사업 양도양수체결 ○ '16.01.06 : 도선장 이전 완료(이촌→반포) ○ '16.03.04 : 도선장 리모델링공사 하천 점용허가 ○ '16.04.24 : 수상택시 8척 확보 선박보수 중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 9월 : 수상택시 수선 및 도선장 리모델링 공사 완료 ○ '16.10월 : 시범 운행후 정상운영 예정 * 오랜 기간 운행 중단된 기존 수상택시 선박보수 및 도선장 리모델링 공사 기간 4~6개월 소요됨
서울특별시	32. 한강~아라뱃길~사해간 여객유람선 운항 문제와 수자원 공사의 여의도 신규선착장 조성계획을 한강관광자원화 계획에 반영하고 한강~아라뱃길 연계방안을 한강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강 자연성회복 및 관광자원화를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협약체결('14. 9.22) (중앙정부-서울시) ○ 한강 자연성회복 및 관광자원화를 위한 종합 계획 수립연구('14.11~'15.12)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것	<p>○ 한강~아리뱃길 여객유람선 운항 및 신규 선착장 조성관련 업무협약('15. 1~현재)</p> <p>① 수자원공사의 신규선착장 설치허가 협의 → 설치허가신청 철회(수자원공사, '15.6)</p> <p>② 수자원공사 신규선착장 및 여객선유람선 운항 관련 현안업무 추진('15. 3~'15.12)</p> <p>· 환경단체 (경인운하백지화 수도권공대위) 설득 및 지역주민설명회(여의도동) 개최</p> <p>· 한강시민위원회의 관련회의 개최(5회) 및 전담 소위원회 구성 요청</p> <p>< 향후 추진계획 ></p> <p>○ 쟁점사항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논의 구조 마련</p> <p>- 한강시민위원회 분과위원회 등 활용 집중검토</p> <p>- 한강관광자원화계획과 연계.를 위해 중앙정부와 공동 추진</p>
서울특별시	33. 아리뱃길사업의 타당성과 별개로 한강~아리뱃길 연결에 따른 관광수요 창출 가능성에 대하여 적극 검토할 것	<p>< 향후 추진계획 ></p> <p>○ 정부와 서울시는 한강의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p> <p>○ 한강~아리뱃길 연계 공론화 과정과 병행 하여 관광수요 창출효과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음</p>
서울특별시	34. 녹조 문제 해소 등을 위하여 신곡수중보 철거 문제를 적극 추진할 것	<p>< 조치실적 ></p> <p>○ 녹조관련 국토부(하천계획과, 하천운영과) 방문</p> <p>- 일 시 : '15. 3.15</p> <p>- 내 용 : 녹조관련 국토부 논의 및 협조</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자 : 물순환정책과장 외 1 - 방문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조저감을 위한 수중보 개방관련 지원 및 협조체계 유지 합의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조발생시 펄스방류 등 실행방안 논의 예정
서울특별시	35. 국토부·김포시·고양시 등 관계 기관의 반대 입장을 고려하여 신곡수중보 철거계획을 신중히 재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곡수중보 관련 국토부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시 : '15. 10. 23, '16. 2. 3, '16. 3.15 - 내 용 : 신곡수중보 관련 논의 - 방문자 : 물순환정책과장 외 2 - 방문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적인 신곡보 관련 용역은 국토부와 논의 후 진행 · 국토부와 신곡보 관련 상호논의 필요성 인식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부와 신곡보 관련 지속 논의
서울특별시	36. 한강하류의 끈벌레 출현 및 녹조발생의 원인을 밝히고 주민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서울시·고양시·행주어촌계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피해 어민에 대한 생계지원책을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주어민 지원사업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년부터 매년 2천만원 지원 - 치어방류 어민 선호사업 협력 - 고양시 한강하류 생태향상 사업 추진시 협의 및 적극 참여 등 지속적으로 협조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검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 수질합동조사 실시('16. 5.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난지·서남물재생센터 - 참여 : 학계, 환경단체, 연구기관 전문가 6명 - 내용 : 하수처리 공정 및 수질측정시설 점검 및 수질조사 ○ 어민피해조사 용역 중('16.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명 : “한강수질오염으로 인한 끈벌레 발생 및 실뱀장어 폐사원인 용역” - 주관 : 고양시 - 용역기간 : 18개월('16. 6~'17. 12) - 용역비 : 5억원 - 수행기관 : 인하대 산학협력추진단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양시 및 행주어촌계와 어민지원사업 시행 협의(치어방류사업 등) ○ 고양시 주관 “어민피해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 검토
서울특별시	37.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한 수도권매립지 매각대금 (1,025억)을 인천시에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는 합의사항을 존중하여 매각 대금을 조기에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경인아라뱃길 편입부지 매각대금 총 1,025억 중 540억 지원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지급할 것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억원)</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합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2013년</td> <td style="text-align: center;">2015년</td> <td style="text-align: center;">2016. 4.</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40</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td> <td style="text-align: center;">140</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td> </tr> </table> <p>< 향후 추진계획 ></p> <p>○ 나머지 485억은 '18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하여 매립지 주변 환경개선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p>	합계	2013년	2015년	2016. 4.	540	200	140	200
합계	2013년	2015년	2016. 4.							
540	200	140	200							
서울특별시	38.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 지분을 인천시에 신속하게 양도할 것	<p>< 조치실적 ></p> <p>○ 서울시와 환경부간 매립면허권 지분 분할('15.12)</p> <p>○ 양여 조건 등에 대한 법률 자문 및 행정부 유권해석 추진('16.1~4.)</p> <p>○ 법령자문 및 유권해석이 완료됨에 따라 공유재산 처분(양여)계획 수립 중('16. 5.)</p> <p>< 향후 추진계획 ></p> <p>○ 공유재산처분계획수립 → 공유재산 심의회 의결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시의회 의결 → 양여</p>								
서울특별시	39. 맨홀 전수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맨홀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p>○ 맨홀관리기관과 합동 TF 구성·운영(3회)</p> <p>- 서울시 및 민간기관 등 총 32개기관 참여</p> <p>- 맨홀관리 업무협약체결('16.4.29)</p> <p>* 맨홀관리 및 점검계획, 안전조치, 정보교류 등</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맨홀 상태조사 및 평가기준 마련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맨홀등급(A~E) 평가기준(안) TF 논의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맨홀 가이드라인 마련, 전수조사 및 정비 계획수립 예정
서울특별시	40. 설치기준 부적합 볼라드의 교체 등 대책을 모색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공공보도상 볼라드 전수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기간 : '16.1. ~ 2. (2개월) - 조사내용 : 재질, 파손여부, 위치 등 - 조사결과 : 총41,135개소 (적합 30,051, 부적합 11,084) * 서울시 주관, 자치구별 실시 ○ 자치구 도로별 볼라드 관리카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기간 : '16. 3. ~ 4. (2개월) - 작성내용 : 관리부서 및 담당자, 위치, 적합 부적합 여부, 사진 등 * 서울시 주관, 자치구별 작성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6월초 : 볼라드 정비계획 수립 ○ '16년 : 도심 보행길 시범사업과 연계한 볼라드 정비 포함 4,146개소 정비 ○ '17년 : 부적합 볼라드 정비 완료 * 건축선 후퇴부분 볼라드는 건축기획과에서 별도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부적합 볼라드 1,443개소 '17년 상반기 정비완료 예정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서울특별시	<p>41. 아파트 화재 대피시설의 설치 시 건축면적·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아 그 설치가 기피되는 등의 문제가 있는 바,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설치기준 신설 또는 보완할 것</p>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의 대피시설 설치 근거 기준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설치 -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설치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3㎡ 이상 ·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 이상 -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설치 예외 규정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등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설치 기준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처리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서울특별시	42. 서울시내 건축물의 중국산 불량철근 사용 여부를 조사하고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산(수입)철근 사용현장 조사 및 조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 43개 건축현장 (중국산/수입철근 사용 서울소재 43개 현장) - 조사결과 : '05 ~ '14년 공사준공 <p>* 공사완료 현황</p> <table border="1" data-bbox="783 730 1445 840"> <thead> <tr> <th>계</th> <th>'05~'08년</th> <th>'09~'11년</th> <th>'11~'14년</th> </tr> </thead> <tbody> <tr> <td>43개소</td> <td>18개소</td> <td>22개소</td> <td>3개소</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치결과 : 조사대상 43개 건설현장이 모두 공사 완료되어 현장 점검 불가능 - 서울시 발주공사에 대하여는 현장기동반을 운영하여 불량철근 등 불량자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지속점검 <p>* 조례 : 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 제12조</p>	계	'05~'08년	'09~'11년	'11~'14년	43개소	18개소	22개소	3개소
계	'05~'08년	'09~'11년	'11~'14년							
43개소	18개소	22개소	3개소							
서울특별시	43. 서울시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는 31.5%이나 자치구 간 편차가 심한 상황임으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의 해소 방안을 모색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와 자치구, 자치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자원조정을 통해 자치구 재정수요에 실질적 지원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 마련 시행('16.1.1) -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보통세의 21%에서 22.6%(2,728억원 증가)로 인상하여 자치구 재정수요 충족도 100% 수준으로 조정교부금 운용 - 안전관리비 측정단위 변경(유동인구수 → 사업자 종사자수, 세대수)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자치구 세출예산 평균으로 고정비용과 단위비용 재산출
서울특별시	<p>44. 서울시 17개 산하기관에서 3년간 총 3,560억원의 성과급이 지급되었는바, 동 기관의 부채규모 (총22조원)를 고려하여 적절성을 검토할 것</p>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규정 준수 성과급제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법령과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시행중 - 공기업 적자·부채는 임대주택확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운영 등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 - 경영평가시에는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 증진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성과급을 책정함 ○ 재정건전성 강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의 재무지표 강화 및 적자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최고등급 배제 적용 ○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범위내에서 채무감축 노력 등 자체기준을 정하여 추가적인 성과급 조정
서울특별시	<p>45.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독립청사 건립을 적극 추진할 것</p>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서소문 청사 리모델링(증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완료시 도시기반 시설본부 입주 예정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업무효율성 및 시민 편의 도모를 위해 독립청사 건립보다는 시청사(서소문 청사)에 입주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음</p> <p>< 향후 추진계획 ></p> <p>○ 서소문청사 리모델링(증축)사업 추진 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 9 지구단위계획 결정 - '16. 12 예산 반영 - '17. 1 ~ '17.10 (리모델링 증축) 설계 - '17. 11 ~ '19.10 공사시행 - '19. 11 입주예정
서울특별시	46. 서울시 산하 각종 위원회 인사의 공정성을 제고할 것	<p>< 조치실적 ></p> <p>○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개정('15. 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복위촉(최대3개), 장기연임(6년) 제한 도입 - 다양한 민간전문가 확보 및 여성(위촉직의 40% 이상)·장애인(위원회별 최소1명) 위원 참여 확대 <p>* 국가인재DB(인사혁신처), 여성인재DB(여가부) 활용</p> <p>< 향후 추진계획 ></p> <p>○ 서울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개정('16. 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복위촉(최대3개), 장기연임(6년) 제한 규정 신설 - 위촉해제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 <p>*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47. 서울시 산하기관 주요 임원의 인사공백 문제를 해소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규정에 따라 임원선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기업법과 관련 조례 및 정관 등에 따른 적법 절차를 거쳐 공개모집하여 선발함 - 인사공백은 적합한 후보가 없어 재공모 절차를 거치거나, 임기만료 전 의원면직에 따른 인선준비로 공석이 되는 사례가 있음 ○ 인선지연 방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하고 투명한 임원선발 절차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후보자 추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치
서울특별시	48. 서울시 산하기관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을 위한 경영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규정 준수 성과급제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법령과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시행중 - 성과급 재원은 민간기업의 초과이익 추가 지급과 달리, 일괄로 지급되던 수당 중 일부를 성과급으로 전환하여 차등지급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평가 제도 개선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강화를 위해 평가체계 및 지표 개편 지속 - 기관평가와 기관장 평가의 결과 차이가 클경우 이를 조정하여 성과급 지급의 불균형 해소 - 기관별 경영혁신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관장 평가에 혁신평가 결과 반영
서울특별시	49. 석촌호수 수위 저하 및 인근 지역 싱크홀 발생과 제2롯데월드 및 지하철 9호선 건설 간의 연관성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릴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촌호수 수위저하의 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 완료 * 용역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명 : 석촌호수 수위저하 원인조사 및 평가 용역 - 용역기간 : '14.8.18~'15.8.28 - 용역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컨소시엄 - 과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리지질 특성 조사 및 지하수위 변화 예측 · 수위저하 원인 분석 및 대책방안 수립 등 · 석촌호수 주변지역 지반침하가능성 및 평가 ○ 석촌호수 수위저하 및 주변 싱크홀, 제2롯데, 지하철 9호선과의 연관성을 포함하여 언론 발표('15. 8. 6)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서울시, 송파구청, 롯데 건설이 참여하는 '석촌호수 주변 지역 안전관리 TF'를 통하여 주변 지역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서울특별시	50. 스마트카드 복지재단의 장기 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을 별도 계좌로 관리하고, 시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환원 방안 확대 위해 ‘시민 공모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시민 대상 사업 공모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15.12월 / 2차 '16.4월 - 일반 시민 대상 아이디어 공모제 추진('15.12) - 교통 전문기관 대상 목적사업 발굴 추진('16.4월)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불준비금 ‘선 공제’ 대신 실제 환불금액을 차년도 기금에서 ‘차감’방식으로 변경('1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환불준비금 25% 공제 후 재단 적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OC 환불준비금 별도 관리계좌 필요 - [개선] 실제 환불한 금액을 다음 년도 재단 적립 대상 기금에서 차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불준비금 별도 관리계좌 불필요 ○ 시민 공모제 지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공모제(매년 상반기) - 아이디어 공모제('16년 하반기) - 전문기관 대상 목적사업 발굴(분기별)
서울특별시	51. 이화여대 기숙사부지 중 1만9천여㎡의 비오톱 등급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이화여대측이 시세차익 528억원을 거두게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오톱 조정은 지침과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감사원 감사 결과('15.7.7)도 위법사항 없음 확인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되었는바, 특혜 여부를 조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상 정책임 ○ 학교사업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개발부담금 대상 아님.
서울특별시	52. '서민밀집 위험지역'의 사업명 변경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민밀집위험지역' 사업명칭 변경을 건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기관 :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 재난경감과 - 조치내용 : 국고보조사업인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명칭 변경 건의 * 시설안전과-2487('15.10.19.) * 참고 : '16년부터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폐지됨
서울특별시	53. SOC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간접비 지급 기준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비는 지방계약법과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급 가능함 ○ 간접비 인정범위 및 지급 세부기준 마련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소관으로 현재 검토 중임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침(기준)에 따라 간접비 지급절차 이행
서울특별시	54. 서울시 채무감축의 성과를 마곡지구 기반 시설 및 문화·체육 시설 확충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4말 현재 시 및 투자기관의 채무는 12조 3,204억원으로 '11년 10월(취입시) 19조 9,873억원 대비 7조 6,669억원을 감축.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할 것	<p>- 총 이자비용 4천여억원(일 10억여원) 절감으로 재정 부담 완화 효과</p> <p>○ 토지매각이나 주택·상가 분양수입은 SH공사의 대규모 공공개발, 주택 건설, 택지개발사업 등에 재투자 하거나 채무감축에 활용하고 있음</p> <p>< 향후추진계획 ></p> <p>○ 우리시는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시행 할 때 그 지역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과 어린이집, 경로당, 복지관등 복지 시설을 건립하고 있는 바,</p> <p>○ 마곡에 투자하여 발생 전망되는 최종 수익에 대하여는 마곡지구 입주민의 편의 및 지역발전을 위해 재투자할 계획임</p>
서울특별시	55.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을 위하여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p>○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 위반자들의 단속 인원이 부족해 단속에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p> <p>- 다만, 포상금제도 이전에 과도한 파파라치의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입법 마련이 필요</p> <p>* 형법 제 156조의 무고죄의 구성요건은 ‘<u>형사 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u>’으로 과태료 처분에 관한 무분별한 신고에 대해서는 제재 규정 미비</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상금 지급에 관한 입법사항 검토 및 무분별한 신고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
서울특별시	56. 남산 곤돌라 설치 사업을 재검토 하고, 시민 의견 청취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의 경제적· 사회적· 정책적 타당성 검토 완료('16. 4) * 조사처 : 서울공공투자센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공청회, 기자설명회, 주민설명회, 도시관리 계획 열람공고 등으로 시민의견 지속 수렴 및 공론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청회 개최('15.12.21) - 기자설명회('16. 2.22) - 도시관리계획 열람공고('16. 4.14) - 필동 주민설명회 개최('16. 4.15) <p>< 향후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추진 예정
서울특별시	57. 2015년 8월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의 재검토 결정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 클래식 콘서트홀 건립을 재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원안동의) : '15.10.28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시민 여론 수렴 등 사업추진에 대한 공론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엠보팅 시민여론조사 : '16.2.24 ~ 3.31 - 시민리서치 : '16. 4.30 ~ 5.1 - 건립관련 시민토론회 : '16. 5. 9(시민청)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 발주 : '16. 7월 ○ 중앙 투자심사 의뢰 : '16. 8월 ('16.10월 심사완료) ○ 국제설계 공모 : '16. 10월 ~ ○ 기본·실시설계 및 공사 : '17 ~ '20년
서울특별시	58. 청계천 자연형 하천복원 사업과 함께 기존 청계천 상인의 생계대책도 모색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든파이브 임대기간 5년 만료상가 처리계획 (안) 수립('14.11.26.) * 임대기간 5년 만료 상인이 계속 영업 희망시 임대기간 연장 가능 ○ 가든파이브 임대기간 5년 만료상가 추가 지원 계획 수립('14.12.30.) * 월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동결 * 전세 희망자의 경우 전세 유지 가능 * 분양전환시 계약금 인하(20 ⇒ 10%) * 분양전환시 잔금 납부기간 연장(60일 ⇒ 1년) ○ 가든파이브 임대기간 5년 만료상가 추가 지원 계획 수립('15. 7. 8.)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양전환시 잔금 납부기간 연장(1년 ⇒ 2년) * 잔금 납부기간(2년) 만료시 추가 3년 할부 시행 																	
서울특별시	59. 마곡지구, 마천지구 등 서울시가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의 분양률 제고 방안을 모색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곡 도시개발사업 중간평가 및 2단계 실행 전략’에 따라 마곡지구 단계적 공급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도 마곡지구 매각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시설용지 제11차 분양 결과 7필지 입주계약(11,300㎡ 361억원) · 업무시설용지 일반분양 결과 5필지 매각되었으며 (12,108㎡ 1,470억원), 이 외에도 매각 가능한 업무 시설 및 주유소 등 검토하여 조속히 매각할 계획임. · 열공급설비용지(1단계부지 9,500㎡ 285억원) 매각 ○ 마천지구 등 기존 사업지구의 미분양 물량은 마천 학교용지(초등학교, 중고등학교)와 같이 공공기관 용지가 많으며, 기관에 예산반영 요청하여 매입 촉구하거나, 매입의사 철회 시 계획변경 등을 통해 매각 추진하고 있음 ○ 은평 등 지구별로 미매각용지 활성화전략 수립 용역 진행 중이며, 용역결과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매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 : SH공사 미매각토지 현황('16. 5.31.) <table border="1" data-bbox="774 1624 1449 1796"> <thead> <tr> <th>총 매각대상</th> <th>매각</th> <th>미매각</th> <th>매각률</th> </tr> </thead> <tbody> <tr> <td>21개 지구</td> <td>21개 지구</td> <td>18개 지구</td> <td rowspan="4">73%</td> </tr> <tr> <td>1,476필지</td> <td>1,120필지</td> <td>356필지</td> </tr> <tr> <td>3,457,990㎡</td> <td>2,519,386㎡</td> <td>938,605㎡</td> </tr> <tr> <td>137,973억원</td> <td>106,711억원</td> <td>31,265억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지구 미매각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곡지구 : 235필지 613,666㎡, 22,972억원 ※ 2단계 전략수립용역으로 매각 보류된 물량이 많아 실질적으로 미매각이라 할 수는 없음. 	총 매각대상	매각	미매각	매각률	21개 지구	21개 지구	18개 지구	73%	1,476필지	1,120필지	356필지	3,457,990㎡	2,519,386㎡	938,605㎡	137,973억원	106,711억원	31,265억원
총 매각대상	매각	미매각	매각률																
21개 지구	21개 지구	18개 지구	73%																
1,476필지	1,120필지	356필지																	
3,457,990㎡	2,519,386㎡	938,605㎡																	
137,973억원	106,711억원	31,265억원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평지구 : 68필지 114,134㎡, 3,470 억 원 <li style="padding-left: 20px;">※ 단독주택 28필지(선착순 수의계약) 포함 · 기타지구 : 53필지 210,805㎡, 4,823 억 원

부산광역시

공백

□ 부산광역시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부산광역시	1. 낙동강하구 개방과 관련하여 농업분야 등 피해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서구 농민 탄원 처리(면담 및 회신) ○ 원탁회의 및 포럼 등을 통하여 농민 의견 수렴 및 농업대책 검토 ○ 농업현장 답사 및 자문으로 현황파악 (市 농업기술센터, 현지 농민 면담 등) ○ 낙동강 하구 주요 지점 실시간 염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16.9.완료예정) <p>⇒ 농업용수 확보와 염해대책 마련 위한 기초자료 확보 및 자체 검토 추진중</p>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용역에서 염분확산 범위 검증 및 농업분야 피해최소화 대책마련을 용역과업에 포함하여 추진 ('17년부터 3년 이상 용역 추진 예정) 																					
부산광역시	2. 낙동강하구 수상관광벨트 조성에 따른 서낙동강 수질정화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 2. : 수질개선 방안 연구▶BDI('16.2.17), 델타이니셔티브('16.2.24) ○ '16. 4. : 서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T/F팀 구성·운영 ○ 수질관리를 위하여 수질모니터 실시 ※ BOD 수질현황 (단위 : mg/ℓ) <table border="1" data-bbox="761 1895 1461 2029">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년도</th> <th style="text-align: center;">'10</th> <th style="text-align: center;">'11</th> <th style="text-align: center;">'12</th> <th style="text-align: center;">'13</th> <th style="text-align: center;">'14</th> <th style="text-align: center;">'15</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left;">지점</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left;">서낙동강 (둔차2호교)</td> <td style="text-align: center;">4.7</td> <td style="text-align: center;">4.5</td> <td style="text-align: center;">6</td> <td style="text-align: center;">4.5</td> <td style="text-align: center;">5.2</td> <td style="text-align: center;">5.2</td> </tr> </tbody> </table>	년도	'10	'11	'12	'13	'14	'15	지점							서낙동강 (둔차2호교)	4.7	4.5	6	4.5	5.2	5.2
년도	'10	'11	'12	'13	'14	'15																	
지점																							
서낙동강 (둔차2호교)	4.7	4.5	6	4.5	5.2	5.2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수질개선 대책</p> <p>- (내부대책) 하수처리장 신설 및 저영양개발기법(LID)도입</p> <p>▷ 하수처리장(42,000m³/일)건설, LID시설 (저류지, 습지, 투수성 포장 등)설치</p> <p>- (외부대책) 상·하류 수문 연계한 물순환, 하수도정비 조기시행, 하천준설 실시</p> <p>▷ 물순환(대상지역 : 평강천, 맥도강 수계) ⇒ 강서구청, '15.2.4(수)~계속</p> <p>▷ 서부·녹산구역 하수정비 조기시행(2035년→2025년) ※ 김해시(화목·장유·대동구역)하수정비 (2025년 완료예정)</p> <p>▷ 하천준설(서낙동강, 평강천, 맥도강)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예타 조사 중 ※ 낙동강은 국가하천으로 국가차원의 수질개선대책 수립 필요</p> <p>< 향후 추진계획 ></p> <p>○ 서낙동강 상·하류 수문연계한 물순환 촉진 및 개선방안</p> <p>○ 하수도정비계획 조기시행(2035→2025년)</p> <p>○ 낙동강 하구둑 전면개방(2025년)과 연계한 서낙동강 수질개선 종합검토</p> <p>○ 하수도정비, 수계기금, 준설 등 국비확보 노력</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부산광역시	3. 낙동강 뱃길 복원사업 관련 대규모 탐방선 도입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동강 뱃길 복원사업과 연계한 대규모 탐방선 도입 방안 마련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년 대형 탐방선 예산 확보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인승 규모, 20억 예산 확보
부산광역시	4. 김해공항은 2023년까지 포화상태로 인한 혼잡이 예상되므로 해결방안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해공항 시설 포화 해소를 위한 안전하고 24시간 운영 가능한 가덕 신공항 건설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1.19. 신공항 관련 5개 시·도 단체장 공동합의 - '15.6.25. 국토부와 KOTI+ADPi 컨소시엄간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수의계약 체결 - '15.7.31. 착수보고회 개최 - '15.8. 7. 지자체 의견 제출 - '15.9. 2. ADPi대상, 부산시 설명회 개최 - '16.2.12. 국토부 용역 중간보고회 - '16.5.25. 국토부 용역 자문회의개최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6월 신공항 최적 입지 선정을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용역 수행이 되도록 적극 대응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부산광역시	5. 김해공항 국내외 신규 노선 증편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 김해공항 국제선 확충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 5개 노선 주 36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다낭, 중국 연대, 라오스 비엔티엔, 태국 치앙마이, 필리핀 클라크필드 - 증편 : 15개 노선 주 248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청도, 연길, 광, 오사카 등 ○ '15년 김해공항 국내선 확충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편 : 2개 노선 주 18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김포(에어부산), 부산-제주(이스타) ※ 지속적 항공노선 확대 노력에 따라 역대 최대 운항편 달성 * ('14 동계) 1,546편→('15 하계) 1,717편→('15 동계) 1,902편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노선 증편 및 신규노선 확충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해공항 국제선 신규취항 사업자 공모, 선정을 통한 중장거리 국제선 개설 추진('16년 예산 10억원) - 항공노선 신·증편시 시정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지원 등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부산광역시	6. 김해공항 커퓨타임 단축 및 피해보상지원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퓨타임 단축을 위한 소음대책주민협의회 주민들과의 대화 총25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설명회('15.4) 주민간담회('15.8) * 커퓨조정 시간 및 주민요구사항은 민관협의회를 구성 공식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우리시의(1년 5개월)의견에 대하여, 주민측은 대화 자체 거부 ○ 커퓨타임 단축을 위한 공항관련 기관과의 회의 실시(총18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군, 항공청, 공항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퓨조정에 대하여 원칙적 동의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방적인 추진은 역효과 우려, 커퓨조정은 수면권이라는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 신중 접근 필요 - 민관협의회 구성으로 소음피해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요구사항 적극해소 노력 및 커퓨조정 시행
부산광역시	7. 김해공항 국제선 신규취항 인센티브 예산 추가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사 재정지원예산 지속 증액을 위한 노력 - ('14년) 4억원 → ('15년) 10억원 → ('16년) 10억원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공항 입지결정 후, 중장거리 노선 개설을 위한 항공사재정지원 예산 증액 추진
부산광역시	8. 부산-광주 항공노선 신설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광주노선 개설을 위한 협의 지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2,9월, 광주노선 개설 관련 (市,광주시,에어부산) 협의(2회) - '16.2월, 광주노선 개설 관련 협의 (국토부, 에어부산) - '16.3월, 광주노선 개설 관련 협의 (국토부, 부산시, 광주시, 에어부산)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항공사 대상으로 부산-광주노선 개설 검토
부산광역시	9. 급격히 상승한 부산의 전·월세 비용과 주택가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민·중산층 주거비 절감을 위한 뉴스테이 공급물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료 인상률 연 5% 제한 * 21건 31,716세대 제안서 수용 ○ 부산형 행복주택 건립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5,663세대)'17년(2,000세대), '18년~(2,500세대)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시 주택 공급사업을 내실있게 추진
부산광역시	10. 부산의 젊은 층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사업 확장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형 행복주택 건립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산단 근로자 대상으로 80% 입주 *'16년(5,663세대)'17년(2,000세대)'18년~(2,500세대)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0세대 공급을 목표로 지속추진
부산광역시	11. 부산시 순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투입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구 및 50년 임대주택 중 건설 후 15년 이상 경과된 단지를 대상으로 세대내부 및 주민공용시설 개·보수 등을 실시 * '16년 : 4개 단지, 4950호 개보수(29억 예산투입) ○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구임대주택(월동대책비지원 723세대 제외)에 대하여 세대당 28천원 정도 난방비 지원 * '16년 : 20개 단지, 26,926세대(7억 예산투입)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매입·전세임대 공급</p> <p>-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 가족 등에게 85㎡이하로써 공동주택, 다세대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을 매입 및 전세계약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으로 매입은 가구당 9,500만원 범위, 전세는 6,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p> <p>* '16년 : 300호 공급 계획</p> <p>< 향후 추진계획 ></p> <p>○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도모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p>
부산광역시	12. 부산시 공공건축물의 내진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p>○ 기존공공시설물 내진보강 대상 전수조사('15.10)</p> <p>○ 2단계(2016~2020) 기본계획수립('16. 1)</p> <p>○ 지진재난 종합대책 마련('16. 4)</p> <p>(개선과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단계별 추진</p> <p>▷ 국민안전처 건의</p> <p>- 856개소, 사업비 3,208억 ⇒연차별 계획수립 추진</p> <p>○ 기존공공시설물 내진보강 대책 보고('16.5, 시장)</p> <p>(대책) 소요사업비 국비(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등) 지원 요청(국민안전처, 기획재정부)</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국비지원 요청(16. 5.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년 175억 요청, 기획재정부(안전예산과), 국민안전처(지진방재과) 지원 건의 ▷ ‘17년 국비지원 협의 방문(16.5.31, 재난대응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안전예산과), 국민안전처(지진방재과) 협의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단계별 확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년도 국비 175억원 확보 추진 협의 (기획재정부, 국민안전처) - ‘18년 이후 1,750억원 지원 건의
부산광역시	13. 부산·김해 경전철의 과도한 MRG 부담으로 인한 재정부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김해경전철 운영비 323억원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 경영효율화를 통해 운영인력 감축추진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김해경전철 사업재구조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발전연구원 사업재구조화 용역 추진 - 사업재구조화 추진을 위한 국비지원 건의
부산광역시	14. 부산시와 김해시 공동출자로 부산-김해 경전철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발전연구원 사업재구조화 연구 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기간 : 2016. 4. ~ 10 - 연구내용 : MRG 대비 사업재구조 효과분석 및 경전철 인수 가능 여부 검토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p>○ 사업시행자와 사업재구조화 협상 추진</p>
부산광역시	15. 싱크홀 발생에 따른 대책으로 BTL 등 민자유치방식을 통해 노후하수관로를 조속히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p>○ 싱크홀 대비 '15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완료</p> <p>- 정비대상 L=126km</p> <p>○ '17년 국비신청 : 54억원</p> <p>- '16년 실시설계용역 자체 시행하여 '17년 국비배정후 즉시 정비 추진</p> <p>< 향후 추진계획 ></p> <p>○ 국비 및 지방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사업 추진</p> <p>※ 분류식 하수관로 확충(신설)사업을 BTL로 추진하고 있어 노후하수관로 정비는 재정사업으로 연차적 추진</p>
부산광역시	16. 지방공기업의 부채관리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p>○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추진</p> <p>- 금융부채 '11년 29,680억원→'15년 21,575억원 (△8,105억원)</p> <p>* 행자부 부채감축 가이드라인 초과달성중 (도시공사) '15년 부채비율 186.6%(가이드라인 230%) (교통공사) '15년 부채비율 26.6%(가이드라인 100%)</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제출('16.9월) ○ 공기업 유형별 맞춤형 부채감축 추진 등 공기업 경영혁신 지속 추진 																													
부산광역시	17. 부산지하철 역사 및 객차 시설의 가연성 소재를 불연성소재로 조속히 교체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연성 천장판 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강장 6역, 대합실 1역 완료('12년~'15년) <table border="1" data-bbox="788 853 1449 1093"> <thead> <tr> <th>연도</th> <th>교체 실적</th> <th>교체 역사</th> </tr> </thead> <tbody> <tr> <td>2012</td> <td>2호선 승강장 3역</td> <td>사상, 경성대부경대, 센텀시티역</td> </tr> <tr> <td>2013</td> <td>1호선 승강장, 대합실 1역</td> <td>하단역</td> </tr> <tr> <td>2014</td> <td>2호선 승강장 1역</td> <td>서면역</td> </tr> <tr> <td>2015</td> <td>2호선 승강장 1역</td> <td>수영역</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동차 통로연결막 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년 11개 편성(55Set), '15년 10개 편성(50Set) ○ 전동차 지붕도막재 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년 2개 편성(12량), '15년 8개 편성(48량)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장판(2020년까지 연차적 교체) <table border="1" data-bbox="788 1648 1449 2011"> <thead> <tr> <th>연도</th> <th>교체대상</th> </tr> </thead> <tbody> <tr> <td>2016</td> <td>2호선 승강장 7역, 2호선 대합실 1역</td> </tr> <tr> <td>2017</td> <td>2호선 승강장 15역</td> </tr> <tr> <td>2018</td> <td>3호선 대합실 6역</td> </tr> <tr> <td>2019</td> <td>2호선 대합실 13역</td> </tr> <tr> <td>2020</td> <td>2호선 대합실 10역, 1호선 통로 2역</td> </tr> <tr> <td>계</td> <td>승강장 22역, 대합실 32역</td> </tr> </tbody> </table>	연도	교체 실적	교체 역사	2012	2호선 승강장 3역	사상, 경성대부경대, 센텀시티역	2013	1호선 승강장, 대합실 1역	하단역	2014	2호선 승강장 1역	서면역	2015	2호선 승강장 1역	수영역	연도	교체대상	2016	2호선 승강장 7역, 2호선 대합실 1역	2017	2호선 승강장 15역	2018	3호선 대합실 6역	2019	2호선 대합실 13역	2020	2호선 대합실 10역, 1호선 통로 2역	계	승강장 22역, 대합실 32역
연도	교체 실적	교체 역사																													
2012	2호선 승강장 3역	사상, 경성대부경대, 센텀시티역																													
2013	1호선 승강장, 대합실 1역	하단역																													
2014	2호선 승강장 1역	서면역																													
2015	2호선 승강장 1역	수영역																													
연도	교체대상																														
2016	2호선 승강장 7역, 2호선 대합실 1역																														
2017	2호선 승강장 15역																														
2018	3호선 대합실 6역																														
2019	2호선 대합실 13역																														
2020	2호선 대합실 10역, 1호선 통로 2역																														
계	승강장 22역, 대합실 32역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동차 통로연결막 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20개 편성(100Set), '17년 15개 편성(75Set) ○ 전동차 지붕도막재 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15개 편성(90량), '17년 15개 편성(90량) - '18년 16개 편성(96량)
부산광역시	18. 부산도시철도 중 기대수명이 지난 노후 도시철도 개량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철도 종합안전대책 수립 ('14.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호선 노후차량 리모델링 및 단계적 신차 교체 ○ 1호선 노후차량 리모델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압전선배관 교체 등 난연성능 강화 - 보조전원장치, 주요장치 전원공급기 교체 ○ 1호선 노후차량 신차 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40량) 신차 제작건 계약('16.3월)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호선 노후차량 리모델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장치, 열차정보장치 등 교체 ('17년) ○ 1호선 노후차량 신차 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40량) 신차 제작 및 교체 ('18년) - 2~4단계(146량) 신차 제작 및 교체 ('19~'27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부산광역시	19. 버스충전금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 중 과다하게 보유하는 장래준비금을 최소로 유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 우리시는 교통카드 장기미사용 충전금 사회환원을 위해 교통카드사와 협의해 왔으며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금 129억원에 대한 장래준비금을 서울시의 사례 22% (57억원) 보다 2% 감소한 20% (26억원)를 예비비 성격으로 적용하고, ○ 논의된 사항에 대해 시의회, 시민단체 등과 협의를 거친 후 지난 ‘15. 10월, 총 120억원의 대중교통발전기금을 조성·사용하는 협약을 교통카드사와 체결하였음, ○ 또한, 협약기간 중에도 향후 여건 변화 시에는 재협의를 할 수 있는 단서조항도 마련하였음.
부산광역시	20. 택시감차 보상 시행기간이 바뀌었고, 감차지원금이 시·도별 금액이 다르므로 부산시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택시감차위원회 구성운영(‘15.5, 6회)으로, 업계의 출연금 부담 최소화 방안 마련으로 지속적 설득 및 협조 - 감차지원금은 실거래가격보상원칙으로 업계와 협의
부산광역시	21. 장산로 혼잡 및 교통제증해소를 위한 제2장산로 건설 용역을 실시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개요 - 구간 : 재송동(센텀)~좌동 부울고속도 - 규모 : L=4.94km, B=20m(4차로) - 사업비 : 2,058억원 - 사업기간 : 5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 6 : 혼잡도로 후보지 선정 건의(사-국토부) - '15. 7 : 교통량 및 경제성 분석(국토부, KOT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장산로 B/C 1.0이하로 지정대상에서 제외 ○ 현안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혼잡 해소를 위하여 해운대 신시가지 우회도로(제2장산로) 혼잡도로 지정 건의('14.6)하였으나, 국비확보 요건(B/C 1.0, AHP 0.5)을 만족하지 못해 지정대상에서 제외(국비확보 어려움) <p style="text-align: center;"><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적의 대안노선(경제성 확보) 선정을 위한 「'16년 도로건설·관리계획 재정비용역」에 포함 검토하여 국비 확보 할 수 있는 혼잡도로 지정 및 민간투자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
부산광역시	22. 부산시 터널 5곳의 교통사고 부상자 비율이 높으므로 전반적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할 것.	<p style="text-align: center;"><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터널 내 교통안전시설물 등 점검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대상 : 부산 시내 터널 26개소 - 점검기간 : 2016. 4. 1 ~ 4. 28 * 자체점검 : 4.1 ~ 4.15 ▷터널 관리기관별 합동점검 : 4.27~ 4.28 ▷유관기관 합동 -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터널 내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미끄럼방지시설(그루빙) 설치 터널 관리기관 점검 강화 등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부산광역시	23. 명품관광도시를 위해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수단 확대 방안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상버스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총 464대 도입 * 전체 버스대수 2,517대 중 464대로 18.43% * 2016년 64억 예산확보(국시비50%) 52대 추가도입 * 제3차 부산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의거 2017년~2021년까지 저상버스를 점진적으로 도입 ○ 다인승 특별교통수단(두리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대수: 1대(중형버스 특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휠체어 5명, 비휠체어 5명 탑승 가능 *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현황('16.5월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교통수단(두리발) 128대 운영 ▷ 장애인콜택시(바우처콜) 990대 운영 - 시범운영기간 : '16.7월~12월 * 정상운영 : '17.1월(예정) - 이용방식 : 예약제 운영 - 활용계획 : 주중→병원, 학교 주말→장애인시티투어 등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에 따라 점진적 도입 추진
부산광역시	24. 전포로 미확장 233m에 구간에 대한 조기개통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본예산 55억원 확보 - L=60m에 대한 사업비 55억원 확보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까지 270억원 확보토록 노력하겠음 - 2017년 : 도로확장 L=80m 시행 (사업비 100억원 확보) - 2018년 : 도로확장 L=80m 시행 (사업비 100억원 확보) - 2019년 : 도로확장 L=43m 시행 (사업비 70억원 확보)
부산광역시	25. 부산시 도시재생 경제기반형 선도지역 사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조지식플랫폼 설계공모 완료('15.12월) 및 실시설계중('16.3~8월) ○ 사업추진협의회(3개지구별 매월) 개최 ○ 도시재생대학 운영(3~8월, 3팀 76명)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조지식플랫폼 착공('16.12월 예정)
부산광역시	26. 국토교통부 소관 국비·시도비 매칭사업비의 집행률 제고방안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적인 집행계획수립 및 추진을 위해 확보된 국비는 연초에 전액 교부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시도비 매칭사업 실적집행률 강화를 위한 사업별 담당자 회의개최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비보조사업의 자금교부 지연사업에 대한 현황을 수시확인하고 부진사유에 대해서는 상세분석을 통해 적극 대응 ○ 예상치 못한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사업지연 요인 사전차단 - 공사여건에 대한 면밀한 사전확인작업 및 추진절차 등의 세부 메뉴얼 미리 작성
부산광역시	27. 고리원전1호기 영구정지에 따른 안전한 후속조치 필요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체에 따른 우리시 원자력안전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방재관 현장 파견·상주를 통한 상시 관리·감시체계 구축('14.8~) - 해체시 방사성물질 비산(飛散)대비, 방사능 감시시스템 추가 구축 등 실시간 감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인자동 환경방사선 감시망 확대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대구축(4개소), 탐지성능보강(10개소 등)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대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력안전대책위, 주요시설 해체과정 참관 등 현장중심 감시활동 강화 - 한수원, 해체계획서 수립 시 시민의견 수렴, 반영 등 절차준수 감시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원전해체 관련 규제와 기술이 확보되고, 정부의 해체 로드맵이 확정되면 그에 맞춰 시차원의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해체과정의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 할 예정임.
부산광역시	28. 고리원전해체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해 분석 및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정도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전해체센터 유치타당성 및 지역산업 연계분석 연구용역('15. 1) - 고리1호기 해체과정에서 13년간(2017~2030) 지역경제 파급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유발효과 5,682억원, ● 부가가치 유발효과 2,069억원, ● 고용창출 3,798명
부산광역시	29. 원전 소재 인근지역 5km가 넘는 지역에도 전기요금을 차등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요금차등제 타당성 논리확보를 위해 용역 실시(예산 6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기간 : '16.3.25~9.26 ○ 우리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15.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의원, 전문가, 일반시민등 130명 참석 ○ '지역별 전기차등요금제' 건의 (BH 수석비서관)('15.7.20) ○ 전력자급 초과 시·도 담당과장 회의 및 공동협력 합의('15.7.22) : 부산, 충남, 인천, 전남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시·도와 실무공조를 위한 담당 회의('15. 8.31) : 부산, 인천, 충남 ○ 당정협의회, 현안사항 협조 건의 '15.11.6 ○ 지역별 전기요금차등제 도입 관련 시도 담당자 회의('16.5.27) : 부산, 인천, 충남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결과를 토대로 우리시 추진방안 마련('16.10월) ○ 전력자급 초과 시·도와 합동으로 토론회 개최('16.11월) ○ 정부건의('16.12월)
부산 광역시	30. 기장군 폭우피해 복구공사를 조속히 완료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구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장군) : 473건 - 준 공 : 470건(완료율 99%) - 공 사 중 : 3건 (좌광천, 장안읍도시방재, 내덕저수지)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 6월말(우기전) 준공 : 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광천, 장안읍도시방재 ○ '16. 9월 준공 : 1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덕저수지('16.6월까지 만수위 제방축조를 완료하여 홍수대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부산 광역시	31. 기장군 폭우피해 복구사업비 집행관련, 불법 하도급 등에 대해 조사필요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10 : 불공정하도급 현장조사 시행 (기장군) ○ 조사결과에 따라 건설업등록 구군에서 과태료 처분조치(3건)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시행시 하도급 여부 확인 및 관리 철저, 위반시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부산 광역시	32. 에코델타시티의 높은 조성원가 및 고분양가에 따른 미분양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중<계속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델타이니셔티브) 신설 등을 통해 공동현안에 대한 대안 모색 및 조성원가 관련 잠재적 문제점 발굴·개선 등 협력적 사업관계 추진 중 ○ 분양 전 분양활성화 협력방안 상호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협의회 및 분양계획 협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델타 이니셔티브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할: 도시경쟁력 강화 및 분양 활성화 전략 등 대회 협력 필요사항 논의 ◆구성: 약 20명(오피니언 리더, 부산시, K-water 등) ◆운영: 2년간 분기별 개최 ('16년~'17년) ◆주요 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부산 광역계획과 연계한 EDC 경쟁력 강화 - 첨단 SMART 기술, 산업경관·인프라 개선 등 - 투자환경 개선 및 분양 활성화 방안 -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는 친수공간 활동 </div>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주요 안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방향 결정·실행방안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F팀 구성, 협약체결, 각종 설명회 등 실시 ○ (분 양) 부산시↔K-water간 역할분담을 통한 협력관계 강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 : 행정기관, 언론 중심 홍보 - K-water : 상품 경쟁력 홍보 주력
부산 광역시	33. 동천 수질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천 수질개선을 위하여 '15년부터 동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시행 중임('15.12~'16.12)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 12 : 설계용역 준공 ○ '17. 03 : 공사 발주 ○ '18. 06 : 공사 준공
부산 광역시	34.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부산항 신항 조성공사에 부산지역 업체참여가 어렵게 되어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10.26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 현안회의 개최(시장, 시간부, 항만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심사제 실시로 인한 지역업체 참여가산점(100+0.2)이 적어 참여가 어렵다는 주장은 가산점 비율은 적으나 업체 선정에 큰 비중을 차지함.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현재 공사중인 항만공사 조사결과 지역업체 참여율이 높은 실정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항만공사 발주 항만공사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 건의 <p>※ 남컨배후단지 2, 3공구 : 30%권장 ↳ 2공구 지역업체인 한진중공업 계약</p>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항 등 주요 항만공사에 지역업체 참여비율(30%이상 권장, 하도급 등) 확대 추진
부산광역시	35. 부산항을 통해 위험물이 반입되는 반입부두의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광역시 위험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15.9.8) - 위험물 저장공간 확보를 위한 확장공사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항만공사에서 추진 중에 있음 - 위험물안전관리자 채용확대 및 유자격자 24시간 상주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항 위험물 취급부두 전 대상 위험물안전관리자 24시간 근무 ○ 항만 운영정보시스템 운영(해수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 내 위험물 정보 조회 및 실시간 CCTV 모니터링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질 현황 및 대응매뉴얼을 실시간으로 현장분대에 전송하는 시스템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안전본부 내 위험물안전계 신설 - 위험물의 체계적 관리 → (중장기) 위험물안전과 신설
부산광역시	36. 2028년 하계 올림픽 유치에 따른 자원마련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8년 하계 올림픽 유치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획 수립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8년 하계 올림픽 유치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자원 종합 대책 포함 추진
부산광역시	37. 부산지역 소프트웨어 분야 발전을 위해 다양성과 창의성을 갖춘 외부인사 영입방안을 강구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외부 인사영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전문가 문화회관 공연과장 채용('15.12)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문화회관 법인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재)부산문화회관 설립 추진. ※ 문화관광분야 기관장 개방형직위(3개) 운영으로 외부전문가(인사) 지속 영입
부산광역시	38.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른 공직내부의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5급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목표율 달성 등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확대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강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 계획 (2012년~2016년, 행정자치부)」 (2014년) 목표율 12.7% → 임용율 12.6% (2015년) 목표율 13.6% → 임용율 13.97% * 근거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 주요부서 우수 여성공무원 전진 배치로 여성공무원 역량 강화 - 2014년 27.3% → 2015년 34.6% * 근거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직여성공무원 임용 확대 지속 추진 ○ 공정한 승진기회 보장 ○ 주요부서 우수 여성공무원 배치 등
부산광역시	39. 부산시 산하기관 각종 문제점 및 낙하산 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 방안을 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법률에 근거가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임명권을 제약·침해하는 것으로서 현행 법·제도상 인사청문회 도입은 어려움 * 「광주광역시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검증공청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음을 판결 (대법원 판결 : 2013. 9.27.)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추진을 검토하겠음

공백

경 기 도

공백

□ 경기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경기도	1.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은 국가 기본 계획(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 국가 기본계획 : '16. 7월 수립예정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를 '17년 본예산에 반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 기간 : '17. 3. ~ '18. 2 - 방법 : 학술연구용역 추진 - 주요내용 : 건축물별 정비방법 및 우선 순위 결정, 정비사업 추진계획 등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년 본예산 반영(학술용역심의 등) : ~ '16.12 ○ 용역 계약 : '17. 1. ~ '17. 2. ○ 용역 추진 : '17. 3. ~ '18.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차 : 건축물별 현황조사·분석 → 정비계획(안) 마련 → 시·군 및 이해관계자 협의 → 의회 및 주민 의견청취 → 건축위원회 심의 → 정비계획 고시
경기도	2. 공유재산 매각 시 입찰자격 제한을 완화하고 공정 입찰을 위한 관리 대책을 강구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계약의 방법)에 의거 공유재산 매각 시 일반입찰의 방법에 따라 진행하며 입찰자격 제한은 없음. - 공유재산 매각에 있어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자격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공정한 입찰진행을 위해 지정정보 처리장치(온비드)를 이용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입찰을 진행하며,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등 공정한 입찰을 하고 있음.
경기도	3. 재난위험시설물(D, E등급)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 실적 329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반기 전수점검(3~4월 : 166개소) - 집중호우대비 점검(7월 : 5개소) - 하반기 전수점검(10~11월 : 158개소) * 전체 지적건수 133건(권고 115, 시정요구 18) ○ 재난위험시설 해소 실적 9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등급 : 8개소, E등급 : 1개소 * 공공 : 교량 4 (재가설2, 보수보강1, 철거1) 민간 : 공동주택 5 (보수보강2, 공사장 준공3)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道) 재난위험시설(D, E등급) 전수점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군 합동 점검 : 상·하반기, 우기 각 1회 * 안전관리자문단 활용 ○ 시·군 일제조사(10~11월) : 전수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급 조정 및 해소계획 수립 * D등급 월 1회, E등급 월 2회 ○ E등급시설 안전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물에 발생하는 진동량 증가(변위, 기울기 등) 데이터를 모니터링 후 붕괴 발생 시 경보 * 설치(2개소) : 성남 중앙시장, 광명 서울연립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경기도	4. 민자도로 등에 대한 최소 운영수입보장(MRG)과 관련하여 수요량 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통행료를 인상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책을 모색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사업은 현행 제도하의 적격성 조사 등을 엄격히 거치고, 교통수요예측의 정확도를 제고한 후 재정부담이 최소화 되는 민자방식으로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추진 할 방침임 - 주변 관련계획 변경에 따른 교통수요 변동요인 발생 및 총사업비 변화 시, 수요예측 및 민자적격성 재조사 등 통해 검증시스템 강화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자 부담 원칙에 입각하여 적기 통행료를 조정할 계획이며, ○ 부속사업 개발 및 사업재구조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정지원(MRG)을 최소화 할 계획임
경기도	5.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도과 시 부과되는 과태료 미납액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납 과태료 감소 대책 마련 및 지정정비사업자 모니터링 강화 - 미납 과태료 및 지정정비사업자 모니터링 강화 업무추진 철저 통보 - 지정정비사업자 모니터링 강화를 위하여 매분기별 교통안전공단, 시·군과 합동 지도·점검 실시하고 있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납 과태료 징수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주기적으로 실시
경기도	6.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고 공공시설운영 적자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	<p><재정자립도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치실적 지속적 세입 악화에 직면, 경기도는 재정체력 회복을 위한 혁신 시스템 구축·실행으로 재정자립도 '15년 대비 1.6%p ↑ - '14년(53.7%) → '15년(53.6%) → '16년(55.2%) ○ (주요 추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도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세입의 확충이 절실한바 세입확대를 위해 지속적 제도 개선 건의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방소비세율 인상 건의 (현행 16%→21%까지 인상) ②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한 레저세 부과 건의 (스포츠토토 발매액의 10%) ○ 향후 추진계획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중앙-지방간 재정제도 개선을 건의, ② 세외수입 확대, 지방세징수율 제고도모, ③ 원칙에 충실한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노력하겠음. <p><공공시설운영 적자 개선대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치실적 : 경기도 공공시설 사업성 평가 용역 진행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기간 : '16.1.27.~9.26.(8개월) - 수행기관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 주요내용 : 공익·수익성에 근거한 사업성평가 및 문제점 분석, 개선방안 제시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조치계획 - 용역결과에 따라 재무구조 개선, 신규 수익모델 발굴, 민간위탁 운영 등 개선 방안 추진
경기도	7. 제3차 국가기간 철도망 구축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39건 반영 요청(경기도 → 국토부) * 용역기간 : '14. 3.21 ~ '15.10.14 * 2016.2.4. : 공청회 개최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고시 * 현재 국토부에서 검토중
경기도	8. 판교테크노밸리 입주 기업의 초과 임대수익 문제를 해결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기업 제도개선(안) 확정('15.6.2.) 및 동의 사업자 변경계약 체결('15.11.10.) - SK케미컬(컨) 등 총 13개 사업자 ○ 입주기업 제도개선(안) 부동산의 사업자 제재방안 심의·의결 - 심의대상 : 초과임대, 유치업종 등 계약상 의무 미준수 15개 사업자 - 심의결과 : 계약해제(2), 위약금부과(3), 시정조치(10) - 계약해제('16.3.17.) 및 소장접수('16.5.11.)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해제 사업자 소송 진행 ○ 위약금 부과 사업자 지급명령 신청 및 향후 소송 대응 등
경기도	9.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북부권의 통행료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외곽 북부 민자구간 통행료 개선 방안 연구용역 추진 중(국토교통부) ○ 사업재구조화, 운영기간 연장, 남북부 통행료 통합운영 등 다양한 인하 방안 적극 검토 건의 * 용역기간(국토부) : '15.12.15~'16.08.10/한국교통연구원(수요 및 정책분야), 삼일회계법인(재무분야)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공단과 합의 등 정부차원의 근본 대책 마련 건의 및 경기도와 지속적인 의견교환 협조 요청
경기도	10. 주거안정과 전월세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의 적극적인 대안을 강구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복하우스 공급계획 수립 ('16.5.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및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대상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까지 장기공공임대주택 12.3만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18년 까지 5년간 연평균 2.4만호 ○ '20년까지 따복하우스 1만호 공급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경기도	11.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조속한 해제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군 상생협력 1박2일 토론회('15.4.3) - 도 및 3개시(용인, 평택, 안성) 공동 연구용역 추진 합의 * 용역비부담 : 도 2.4억, 3개시 각 1.2억 ○ 상생협력 공동 연구용역 협약('15.12.9)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용역 계약('16.6월) ○ 연구용역 완료('17.12월) ○ 용역 결과에 따른 상생협력 방안 추진
경기도	12. 뉴타운사업 관련하여 용자지원 방안 및 공공관리제 도입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군수 및 주민이 공공지원제를 신청 할 경우 도정기금 등 적극 지원 (수원 영통2구역 도입) ※ '16년 공공지원제 추진계획 : 3개 구역 (수원 영통2, 성남 성지A, 부천 삼신A)
경기도	13. 음주운전 공무원 증가와 관련한 특별교육 실시 필요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행동강령(음주운전 포함) 바로알기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15. 9. 25.) ○ 신규공직자 과정 교육 시 「음주운전 및 성범죄 예방교육」 편성·운영 - '15. 10. 23. 신설 이후 11기 1,372명 교육 이수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예방교육을 위해 신규공직자 과정교육을 지속추진하고 신설과정까지 확대 시행
경기도	14.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안) 협의의견 제출('15.11) * 경기도 → 국토부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 고시 및 기본설계 착수 (국토부) * 현재 국토부에서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중
경기도	15. 버스 사고 발생 감소를 위한 버스기사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스사고 예방 및 버스기사 처우 개선 방안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리한 배차운영 근절을 위한 버스운행 인가준수율 점검 강화(매월 실시) - 사고율이 높은 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반영('15년 평가 반영) - 버스분야 안전운행점검 및 운수종사자 안전 교육 강화('16.1월~4월) - 버스 서비스 및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서비스 개선 연구용역」 추진('16.5월~'17.1월)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가준수율 점검(매월 실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16.12월) 및 버스분야 안전 점검 실시('16 하반기)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서비스 개선 연구용역 추진('16.5월 ~ '17.1월)
경기도	16.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조례 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조례 개정토록 행정지시(2014. 1. 21. / 2015. 8. 11.) ○ 2016년 시·군 종합평가에 조례 개정 실적 반영 예정 ⇒ 2016. 5월말 현재 31개 시·군 중 21개 시·군 조례 개정 완료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10개 시·군이 모두 조례를 개정토록 지속적 독려
경기도	17. 경기도시공사 공급 임대주택의 관리비 과다 문제를 개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H 임대주택에 비해 관리비가 과도하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H와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비 산출 시 경기도시공사 임대주택 관리비가 저렴 - LH 임대주택관리비의 98.8% 수준 ※ LH공사의 m² 단가는 총 비용을 관리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고용)으로 산출 ※ 반면, 경기도시공사의 m² 단가는 총 비용을 주거전용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산정하여 높게 나타남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경기도	18. 국가지원지방도 국비 지원 체계를 개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에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국고보조 방식 변경 건의('16.5.17., 5.23.) - (현행) 공사비 정액 보조 ⇒ (변경) 총사업비 일정비율 보조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남도, 경상북도 등 타 시·도와 협력하여 국비지원 체계 개선 지속 건의
경기도	19. 경기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방위지침 개선 필요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계태세 발령사항 통보관련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 건의('15.10.1.) - 연천 포격도발('15.8.20.) 시 경계태세 I 급 발령사항을 35분 지체 통보 ⇒ 발령권자는 경계태세를 발령하거나 해제하는 즉시 그 사실을 관할지역 내의 모든 국가방위요소에 통보하고, 통합방위본부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며 작전지휘관은 시·도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에게 즉시 유선통보한 후 서면통보하도록 개정 건의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참 내부검토 결과 미반영되었으나 경기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방위지침 개선 적극 발굴 제도개선 건의
경기도	20. 남한 및 북한 방문자를 위한 실시간 연락체계 마련 필요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자 보호를 위한 남북간 연락체계 구축은 정부 권한사항으로 국정감사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통일부에 건의토록 하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경기도	21. 임진강 염도관리 대책 강구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소관의 임진강에 대하여 해당 각 부처(농림부, 환경부, 국토부)가 염도 관리 대책의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16.6.2)
경기도	22.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금을 현실화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는 공공기관장의 성과연봉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연봉 지급률 하향 조정(기본월액 기준) '13년) 최고 400% '14년) 최고 350% '15년) 최고 320% ※ 기관장 성과연봉(26개 공공기관 합계) : '12년)4억원 → '13년)3억5천만원 → '14년)2억8천만원
경기도	23. 자전거 사고 감소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모 착용 권고조항 조례 개정 및 시행('16.1.6) * “안전모착용 의무화”는 조례제정은 지방자치법 위배에 따라 권고조항으로 조례 개정 ○ 자전거 교통사고다발지역 개선사업 예산 확보('16.1월) ○ 자전거 안전수칙 동영상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배너광고('16.6월)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모 착용 정착 지속추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경기도	24. 청년창업 푸드트럭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장소 확대 제도개선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개정('15.10.21)으로 공용재산, 조례에 정하는 장소까지 허용장소 확대 ○ 전국최초 푸드트럭 창업아카데미 운영('15. 10~11월, 5기, 85명) ○ 전국최초 저리(1.19%)의 푸드트럭 창업자금 운영(16명, 548백만원 지원) <p>※ 도내 푸드트럭 영업신고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56대('16. 4월말 기준, 전국 30.4%)
경기도	25. 아파트 단지의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조사('16년 1~2월)를 통해 고가 사다리차 등 진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아파트에 대해 문주 개선사업을 추진 하도록 권고 및 지속적인 훈련·홍보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및 신문 등 언론보도 강화(지역협의체 구성/연1회이상) - 공동주택 단지내 소방차전용구역 신규 노면 디자인 시범설치(28단지) * 공동주택단지 문주·차단기 개선 지도·권고 업무 추진 철저 공문 시달('16.5.20) ○ 「공동주택단지 소방통로확보 세부기준」 법령 개정 추진(국토교통부 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국민안전처 법령개정안 법제처 협의 중(입법예고 '16.2.23~4.2)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경기도	26.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화재 예방 대책을 수립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개정 시행(2015. 9.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불연재료 성능이상 외벽 마감재료 의무사용 확대(30층이상→6층이상 강화) - 상업지역도 자동소화설비 미설치시 이격거리 확보의무 부여(강화)
경기도	27.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보행안전관련 사업 지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고교 및 노인정 주변 교통안전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60개소, 1,912백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행 (28개소, 1,210백만원)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 국민안전처에서 추진 중인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 준용 시행 예정 ○ “경기도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방안 연구용역” 추진 결과에 따른 개선사업 시행 검토 및 추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경기도	28. 현실을 반영한 탄력적인 택시 감차 계획을 수립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탄력적인 감차계획 수립을 위해 감차 기간을 20년까지 연장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개정 시행('15.9.1) ○ 경기도는 시·군별 지역 실정을 반영하여 감차계획 추진 및 독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차규모가 면허대수의 5%이하 시군은 국토부 승인받아 감차계획 미 시행 결정(화성, 오산, 파주, 동두천시) - 인구 10%이상 증가 및 철도 개통 지역 등 국토교통부 승인받아 택시총량 재산정 추진(광주, 하남, 김포, 용인시) - 감차규모가 면허대수의 20%를 초과한 지역은 감차대수 국토부 조정 승인('15.10.30) * 부천시 등 12개 시, 감차대수 1,169대 감소 - 양주시, 포천시는 사업자출연금 조성이 어려워 감차위원회에서 감차계획 수립 유보 결정 - 시·군별 감차계획 수립 독려(4회) 및 자율감차 사업설명회 개최(3회) - 택시 자율감차보상사업 제도개선 건의('15.12.15)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경기도	29. 화성시 공동화장장 건립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B 관리계획 승인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 12 : GB 관리계획 변경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부 의결) - 2016. 2 : GB 관리계획 변경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보고(조건부 의결 조치계획) - 2016. 3 : GB 관리계획 변경 승인(국토교통부)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16.12) ○ 공사발주 및 착공('17.06), 준공('18.12)
경기도	30. 공공시설물, 도로 및 수도시설물 등에 대한 지진 대비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시설물(도로, 수도시설 포함) 내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5,402개소 중 2,752개소 확보) * 건축물 57%, 도로시설물 40%, 도시철도 100%, 폐수종말처리시설 80%, 수도시설 53%, 어항시설 100%, 폐기물매립시설 93%, 하수처리시설 76%, 공동구 88%, 궤도·삭도100%, 병원시설 67%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진보강사업 추진(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진성능평가 354개소 - 내진보강공사 100개소 * 내진성능평가 : 건축물 91, 도로시설 166, 수도시설 41, 폐수종말처리시설 46, 공동구 1, 병원 9 * 내진보강공사 : 건축물 33, 도로시설 57, 수도시설 8, 폐수종말처리시설 2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경기도	31. 준설토 적치장의 이전 보존에 따른 준설토 성분 저하등에 대한 대책 수립하고 관련 자료 제출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치장 19개소중 4개소 복구완료 - 3개소(보통,초현,울곡1)는 복구중 * 2개소(삼합,계신)는 하천부지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 일시 사용중인 적치장 10개소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추진 - 2026년 반출 완료 예정 * 잔여적치량(26,764천㎥)에 대하여는 년 2,000~ 2,500천㎥ 반출 예상
경기도	32. 저상버스의 보급을 확대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 2016년 저상버스 도입 확대지원 계획 수립시행으로 시군(업체) 수요 도출 * 버스 구입 지원비 도비 부담비율 인상 (7.5% → 15%) 및 지방비 추가지원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3차 지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지원)계획」(2017~2021년) 수립시(2016년) 확대 추진 - 저상버스 도입가능 노선(대수)에 대한 충분한 저상버스 도입 계획대수 수립 및 적절한 지원 대책 강구와 도로개선, 중형 저상버스 개발 보급 등 인프라 확충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버스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시 저상버스 보유비율을 반영하여 재정지원추진
경기도	33. 자전거 등록제 활성화를 모색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자부 자전거 등록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추진 계획('16.2.3 행자부 주민생활환경과-398)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자부 시스템 구축 계획에 따라 자전거 등록제 추진
경기도	34. 물류창고 화재예방 대책을 강화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 합동 소방특별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안전처 주관, 소방특별조사(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간 : 2016. 4. 18. ~ 4. 22.(5일간) * 대 상 : 최근 화재발생 대상 7개소 * 조사자 : 20명(국민안전처 2, 소방 14, 민간 4) (과태료 4, 행정처분 4, 조치명령 4) - 도 주관, 소방특별조사(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간 : 2016. 5. 2. ~ 5. 31.(1월간) * 대 상 : 대형 물류창고 9개소 * 조사자 : 11명(소방 6, 시·군 2, 안전관리자문단 1, 전기·가스공사 2) * 결 과 : 불량 9개소 / 56건 조치 (조치명령 45, 건축 2, 전기 9) ※ 소방관서 창고시설 정기 소방특별조사 (7월중)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D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훈련 시뮬레이션 : 2급이상 (1,020개소) * 출동중 대상물 정보 확인(태블릿 PC), 시뮬레이션 활용 도상훈련 및 가상화재훈련 등 실시 ○ 경기도 참고시설 대형화재사고 이후 제도개선 건의 ⇒ 법령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프링클러 설치 강화('08.12.15.) : 냉장·냉동창고 제외 → (변경)냉장창고 포함 - 샌드위치판넬조 참고시설(3,000㎡ 이상) 난연화 자재 의무사용('10.2.18.)
경기도	35. 경기지방공사 직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직원 행동강령(고발지침) 강화('15.5월) ○ 청렴마일리지 제도 운영('16.3월) ○ 청렴BSC반영을 통한 부서별 경쟁 유도 ○ 청렴의 날 운영, 청렴간담회 실시('16.3월)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수대책 등 지속 개발 시행
경기도	36. 도로 침하 원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도로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용역」의 과업에 반영하여 추진중임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경기도	37. 정비구역 해제 관련 가압류 소송 문제 해결 방안으로 민·관·정이 적극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금산입 관련 법령 개정건의 ('15.10.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금산입 대상을 채권 전부포기에서 일부포기까지 확대 - 적용기한 연장 : '15.12.31 → '17.12.31 ※ 조세제한특별법 개정('15.12.15), 도시정비법 개정('16.1.27) ○ 손금산입 등 정비사업 관계기관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15.10.30) : 전문가 4, 시공사 2, 도1 - 2차('16.1.14) : 전문가 3, 시공사 4, 도2 ○ 가압류 시공사에 가압류 해제 서한문 발송(부천시, '16.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 구역 3개사 채권포기 합의
경기도	38. 청소노무자 노무비의 이중 삭감 문제를 개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이하 적용 공공기관 변경계약 체결 및 소급 지급 완료(2015. 6. ~ 2015. 11., 기관별 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의료원 등 12개 기관 ○ 용역근로자 보호관련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공공부문 인사, 총무담당 등 92명('15.7.10) ○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등 관련 자료 시·군 전파(2015. 7. 17.)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경기도	39. 교통정보센터 제공 정보 오류와 관련하여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정보 연계기관 일괄 점검('15.12 ~ '1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계환경 점검·개선 및 관리 매뉴얼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치결과 보고('16.5.30) - 년 1회 연계기관 정기 점검 추진 ○ 교통정보 오류 제외 필터링 시스템 구축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15.11월 ~ '16.8월 - 내용 : 연계기관 교통정보 중 오류정보 사전에 필터링함으로써 정상정보만 대민 서비스 활용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터링 시스템 구축 완료('16.8월) ○ 연계기관 점검('16.10월 ~ 12월) 															
경기도	40. 김포 신곡수중보 오염 물질 방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포 신곡수중보 수질측정(행주측정소) 결과(연평균) <table border="1" data-bbox="775 1547 1465 1653"> <thead> <tr> <th>구분</th> <th>BOD(mg/L)</th> <th>TN(mg/L)</th> <th>TP(mg/L)</th> <th>DO(mg/L)</th> </tr> </thead> <tbody> <tr> <td>'14년</td> <td>4.4</td> <td>5.1</td> <td>0.29</td> <td>9.8</td> </tr> <tr> <td>'15년</td> <td>4.9</td> <td>6.9</td> <td>0.34</td> <td>9.4</td> </tr> </tbody> </table> <p>※ 서울시 하수처리장(난지, 서남 등) 방류수 자료는 파악 곤란</p>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하천 수질 모니터링 실시 	구분	BOD(mg/L)	TN(mg/L)	TP(mg/L)	DO(mg/L)	'14년	4.4	5.1	0.29	9.8	'15년	4.9	6.9	0.34	9.4
구분	BOD(mg/L)	TN(mg/L)	TP(mg/L)	DO(mg/L)													
'14년	4.4	5.1	0.29	9.8													
'15년	4.9	6.9	0.34	9.4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경기도	41. 교통이용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제공을 확대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교통수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말 법정대수 558대 → '16년 말 615대 (110% 확대 예정) - '16년 운영비 지원(도비) : 39억원 - '16년 구입비 지원(국비) : 9.2억원 ○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사전·사후 점검을 통해 편의시설 설치 유도 - '16년 예산 : 1.5억원 -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편의시설 및 경기도 관리 지방도 점검 추진 ○ 광역이동지원센터 시스템 구축 중(~'16.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별 상이한 운영방식을 극복하여 교통약자 편의 제고 → '16. 10월 운영예정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교통수단 확대를 위해 도비 지원 추진 ○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경기도	42. 불량 복공판 사용 여부를 점검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 복공판 사용중인 공사현장 6개소에 대한 품질, 시방서 기준 시공상태, 복공판 자재선정 및 검수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상태 등 중점 점검 실시 <p>[점검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반 : 도 기동안전점검반, 자문관 등 - 2015. 10. 19 ~10. 27(5일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기 시공된 11,792개의 복공판 중 시공부실이 발생한 582개 복공판은 교체토록 지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택호 횡단도로공사 - 용인상현교차로 개선사업 - 의정부동부간선도로확장공사 <p>< 향후계획 ></p> <p>○ 품질기준 미흡사항은 국토부에 개선을 건의하고 이후에는 동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함</p>
경기도	43. 공사 및 주변 침하로 인한 맨홀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별로 상·하수도 유지관리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 맨홀 보수 및 유지관리 - 민간업체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보수 조치하고 있음.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예산 반영 및 유지보수 ○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부」에 의거 추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경기도	44. 아파트 단지 외부 회계감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할 것	<p>< 조치실적 ></p> <p>○ 아파트 단지 외부 회계감사 이행현황 (2015. 10. 31일 기준)</p> <table border="1" data-bbox="807 472 1469 875"> <thead> <tr> <th>구분</th> <th>단지수</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회계감사 대상</td> <td>2,555</td> <td></td> </tr> <tr> <td>회계감사 실시</td> <td>2,385</td> <td></td> </tr> <tr> <td>입주민 동의 미실시</td> <td>156</td> <td></td> </tr> <tr> <td rowspan="2">회계감사 미이행 단지 조치</td> <td>14</td> <td></td> </tr> <tr> <td>회계감사 완료 : 10 (감사기한 도과) 주민동의 미실시 : 3 과태료 부과 : 1</td> <td></td> </tr> <tr> <td>회계감사 이행률</td> <td>99.5% (주민동의 미실시 포함)</td> <td></td> </tr> </tbody> </table> <p>< 향후 추진계획 ></p> <p>○ 매년 실시되는 외부 회계감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도</p>	구분	단지수	비고	회계감사 대상	2,555		회계감사 실시	2,385		입주민 동의 미실시	156		회계감사 미이행 단지 조치	14		회계감사 완료 : 10 (감사기한 도과) 주민동의 미실시 : 3 과태료 부과 : 1		회계감사 이행률	99.5% (주민동의 미실시 포함)	
구분	단지수	비고																				
회계감사 대상	2,555																					
회계감사 실시	2,385																					
입주민 동의 미실시	156																					
회계감사 미이행 단지 조치	14																					
	회계감사 완료 : 10 (감사기한 도과) 주민동의 미실시 : 3 과태료 부과 : 1																					
회계감사 이행률	99.5% (주민동의 미실시 포함)																					
경기도	45. 이층버스 도입시 승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치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p>○ 동절기 2층버스 교통안전대책 수립·시행('15.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절기 도로관리, 사고예방, 안전운행, 차량 유지·관리,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 <p>○ 2층버스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시행('16.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층버스 도입단계별 조치사항, 교통안전대책, 비상시대응체계 마련 																				

공백

전라북도

공백

□ 전라북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전라북도	1. 기업유치, 탄소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입확충을 위한 자체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유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 10월 ~ '16. 5월) 94개 기업 유치 * 투자예정 5,815억, 고용예정 2,687명 - 탄소산업 활성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산업 육성 조례 제정('15.5월) · 투자유치 촉진조례 개정('15.7월) * 탄소기업 투자유치 보조금(50억원 한도) 및 고용보조금 우대지원(10억원 한도)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6.5월) - 지방상하수도 공기업 요금현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 2개 기관(전주, 완주) 103% 인상, 6개 기관 상·하수도 조례개정 완료 - 주민세 인상 조례개정('15년, 13개 시·군) - 재정사업평가 대상확대 및 민간위탁금·출연금 성과평가결과 예산반영 등 세출예산 집행 효율화 노력 ○ 중앙정부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와 지방세 비율 8:2→6:4 조정 - 지방소비세율 11%→16% 인상 ○ '15년 대비 '16년 재정자립도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 22.1% → ('16) 23.6%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유치와 탄소산업 활성화 등 세입확충과 지속적인 세출예산 효율화를 통해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음
전라북도	2. FTA 체결로 농도 전복 악영향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 (농업 분야)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등 시장개방 확대, 고령화 및 농촌 인구 감소 등의 위기상황을 농민과 같이 극복하기 위한 농정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해 “삼락농정위원회”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민 중심으로 142명 참여, 운영협의회 3회, 분과회의 64회, 포럼 8회 개최 *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15. 10.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도자율 편성 지특회계 16개사업 국비 87억원 발굴·반영 ▶ '16년 도 자체사업 14개사업 도비 21억원 발굴·반영 ○ FTA협상 발효에 대응하기 위해 16년 25개의 신규사업 발굴 <p>⇒ 2016년 예산에 394억원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곡물 및 원예작물 생산·유통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딸기하이베드 개선사업 16억, 농작물 공동작업 지원체계확충 125억원, 농식품기업 맞춤형지원 22억원,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육성 16억원, 친환경잡곡 생산기반구축 사업 20억원 등 ② 생산비 절감 및 친환경농업육성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 육성 16억원, 친환경 경종묘생산 양식어업 육성 5억, 벼 종자소독기 지원 10억원, ICT를 이용한 가축질병 컨트롤 타워구축 18억원 등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③ 축산·수산분야 브랜드 육성 등 - 가축개량체계구축 20억원, 전통어구어법 관광자원화사업 5억원 등</p> <p>④ 수출 활성화 분야 - 수출전략품목육성사업 2억원 등</p> <p>< 향후 추진계획 ></p> <p>○ 개방농정에 대한 전라북도 농업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 및 사업발굴 등을 위해 삼락농정위원회 각 분과에서 지속논의</p> <p>○ 대중국 쌀 수출을 계기로 김치, 삼계탕 등에 대한 공세적인 수출정책을 추진</p>
전라북도	2. FTA 체결로 농도 전북 악영향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 (축산 분야)	<p>< 조치실적 ></p> <p>○ 도내 축산업 보호 및 발전을 위하여 한우, 돼지, 양계 등 축산업 관계자 및 교수, 전문가로 구성된 “삼락농정 축산분과위원회”를 구성 새로운 축산 시책을 발굴 추진 하고 2024년까지 10년간 품목별 투자계획 수립 추진</p> <p>- ① 사육환경 개선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 5개 사업 2,700억원</p> <p>- ② 생산비용 절감 : 풀사료 수확제조비 지원 등 7개 사업 1조 2,340억원</p> <p>- ③ 가축전염병예방 대책 : AI·구제역 방역 등 5개 사업 2,840억원</p> <p>- ④ 적정 분뇨처리 및 환경오염방지 : 친환경적 가축분뇨처리·자원화 등 5개 사업 2,620억원</p> <p>- ⑤ 안전 축산물 공급 및 ⑥ 소비확대 : 가점도축장 육성 등 8개 사업 823억원</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별(축종별) 10년 투자계획대로 도내 축산농가가 대외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
전라북도	3. 전북개발공사의 조직 슬림화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제개편 계획 내부 검토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부축소 : 3본부 체제 → 1본부 * 본부급인 전략기획실을 사장직속 부서급으로 전환할 예정 * 경영관리본부와 개발사업본부를 1본부로 통합 - 조직 슬림화 : 주택건립 및 관리부서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주택 시공-관리-하자보수 일원화를 위해 건축사업부(주택시공)와 시설관리부(임대주택 관리 및 하자보수)를 통합할 예정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제개편계획 확정(내부) : '16.6월 ○ 규정개정 및 이사회 승인 : '16.7월 ○ 직제변경 및 인사발령 : '16.8월
	4. 지방도 도로포장률 제고 및 교통사고 감소 방안을 마련할 것 (지방도 도로포장률 제고 방안)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도 사업예산 투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년(250억원), '15년(262억원), '16년(300억원)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도 포장률을 높이기 위해 지방도 사업예산을 점진적 확대할 계획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전라북도	4. 지방도 도로포장률 제고 및 교통사고 감소 방안을 마련할 것 (교통사고 감소 방안)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 목표관리제 추진 - 3년간 17.4% 감축, (61명) ○ 목표관리제 실행계획 수립 : 15.12. ○ 교통사고 예방 인프라구축 사업비 확보 : 15.12 - 노인보호구역, 생활권이면도로 정비 등 ○ 16년도 1분기 추진상황 보고 : 16. 3. ○ 교통사고 감소관련 유관기관 회의 : 16. 3. ○ 시군 추진상황 보고회 : 16. 4. ○ 교통사고 줄이기 유관기관 합동캠페인 추진 : 16. 5. ○ 교통사고 줄이기 공익방송 광고 제작 : 16. 5.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추진상황 점검 : 16. 7 ○ 교통사고 줄이기 공익 홍보방송 송출 : 16. 6. - KBS, JTV, 교통방송 등 ○ 노인보호구역 신규지정 및 시설개선 : 16.10 - 신규지정 8개소, 시설개선 19개소 ○ 생활권이면도로 지정 및 시설 : 16.10 - 12개 교통사고 위험구역
전라북도	5. 동부내륙권, 장수~인월간 국도,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사업을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추진할 것	<p>< 조치실적 ></p> <p>(동부내륙권 국도 및 장수~인월간 국지도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부내륙권 국도 및 장수~인월간(남원인월~아영간) 국지도 사업은 국토부, 기재부와 협의하여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16~'20)에 반영 추진 중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부내륙권 국도는 일괄예타대상사업(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기재부에서 사업 규모 조정, 단계별 시행방안 등을 추가 분석 중임 - 장수~인월간(남원 인월~아영간)은 비예타 대상사업으로 국토부(국토연구연)에서 경제성, 안전성 등 타당성 분석을 마치고 기재부와 협의 중임 <p>(지리산 산악철도 시범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악철도 핵심기술 개발 완료('15.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구배(Rack&pinion), 급곡선(독립차륜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랙&피니언(톱니바퀴) 방식으로 최대 등판능력 11.4°급경사 운행 * 독립차륜장치 적용 최소곡률 반경(R=10m)으로 급곡선 운행 ○ 궤도운송법 개정('16.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악벽지형 궤도 개념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악벽지의 급경사에서 운행이 가능한 궤도로서 교통편의 및 관광증진을 위하여 친환경적으로 건설·운영되는 궤도 - 재정적, 행정적, 기술적 국가지원 근거 마련 <p>< 향후 추진계획 ></p> <p>(동부내륙권 국도 및 장수~인월간 국지도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16~'20) 반영 및 사업이 신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국토부, 기재부와 협의 추진 <p>(지리산 산악철도 시범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과제 용역 조기완료 추진(하반기) ○ 산악철도 시험노선 공모(전북도와 남원시 공동 대응)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전라북도	6. 농업용 및 생활용 외 섬진강 이용율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진강댐 통합물관리 Vision 선포식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시 : 2015. 11. 20(금) - 장 소 : 국립 무형유산원(전주) - 주 최 : 한국수자원공사 - 참 석 : 전북도, 수자원공사, 한수원, 농어촌공사 섬진강행정환경협의회 - 주요내용 : 가뭄 등 물 분쟁 발생시 통합적 운영관리 및 상생발전을 위한 5개기관 물 상생 협약(MOU) 체결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진강댐 재개발로 인해 추가확보된 용수(65백만톤)로 섬진강의 아름답고 청정한 하천환경 개선등을 통해 임실·순창·정읍· 남원 등 동부권 발전에 노력하겠음.
전라북도	7.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18. 공공임대주택 1만호공급추진 ○ 농어촌지역 소규모임대주택 건설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19까지 4개시군 400호 공급 ○ 행복주택확대 추진 : 5개시군 2,187호 ○ 공공실버주택 추진 : 1개소 80호 ○ 마을정비형 공공임대 추진 : 150호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임대주택 확대공급을 위해 건설, 매입전세임대 등 다양한 맞춤형 공공 임대주택공급 지속 추진
전라북도	8. 2030세대를 위한 행복주택사업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주택 건설공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개시군 2,187호 추진 ※ '16년 2개소 630호 추가확정 ○ 전세임대주택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90호 (신혼부부, 대학생) ○ 빈집정비 반값임대주택 공급 : 30호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년 행복주택 612호 준공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건설 공급하는 등 젊은층을 위한 주택공급확대 추진
전라북도	9. D등급 저수지 보강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 강구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급 저수지 보수·보강을 위해 시·군 수리시설개보수, 재해위험저수지 등 국비 예산을 활용 보수·보강 추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급 저수지 174개소('16년 1분기 기준) 보수·보강 예산 확보 <p>* 기확보 90개소, 41954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수리시설 : 37개소, 4,633백만원 · 공사 수리시설 : 29개소, 25,846백만원 · 재해위험저수지 : 10개소, 9,095백만원 · 특교세 등 : 14개소, 2,380백만원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급 저수지 174개소 중 예산이 확보된 90개소는 신속히 보수·보강을 추진하여 재해위험요인 해소 - 예산이 미 확보된 84개소는 연차별 보수·보강 계획 수립 후 예산확보를 통한 지속적으로 보수·보강 추진
전라북도	10. 지역별 균형발전을 통해 주택 미분양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및 수익원 다각화 실적 - 새만금관광단지(게이트웨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 신청('15.12.30) - 전주효성 부도임대주택 매입 완료('16.3.31) 및 공급('16.6) - 농어촌 임대주택 1단계 선도사업(장수,임실) 이사회 승인('15.10.19) * 1단계 선도사업 보상 및 설계 착수('16.3)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임대주택(2단계), 도시재생, 지자체 협력사업 등 신규사업 지속 발굴 추진 * 농어촌임대주택 2단계(무주,진안) 사업착수('17)
전라북도	11. 새만금지역의 기업유치에 혼선이 없도록 행정 구역별 통일된 인센티브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만금 활성화 방안 마련('16.2.17) - 다양한 인센티브와 과감한 규제 개선을 통해 글로벌 기업환경 조성 (국토부, 새만금개발청, 전북도 참여)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산업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지역에 새만금 지역을 포함하여 설비투자 보조율 최대 10% 가산 등 부여</p>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부의 국가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을 통해 지원 추진
전라북도	12. 새만금지역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해수유통을 적극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 추진(48개 과제, 29,502억원 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까지 환경부소관 11,809억원 투자 - 2016년도 환경기초시설 등 1,784억원 투입 - 환경부 중간평가 실시* 및 추가대책 발굴 <p>* 3개 추가대책 추진시 목표수질 달성가능 예측</p>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단계 수질개선 대책 차질 없이 추진 ○ 3개 대책(전주하수처리장 증설, 가축분뇨처리 확대, 우분연료화사업 추진) 추진 <p>☞ 담수화 목표수질 달성가능으로 예측된 바와 같이 수질개선사업을 계획대로 추진.</p>
전라북도	13. 혁신도시 악취민원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도시 악취 저감을 위한 융복합 업무 협력 기관협의체 및 김제옹지지역 협의체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복합 업무협의체 운영 ('16.3.3) - 김제옹지지역 협의체 운영('16.3.30)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도시 악취 저감을 위하여 행정기관 및 주민과 협력 악취저감 정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생물제 보급, 악취저감 사업 지원사업 지원, 주민 자발적 악취저감 노력 등
전라북도	14. 택시 양도·상속이 가능하도록 법이 통과되어 이에 대한 올바른 방향의 조례를 제정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에 위임된 사항으로 시·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양수 가능토록 조치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제3호의 개정('15.12.31)으로 매년 감차 목표를 감차시 초과 감차대수에 대해서는 개인택시의 양도·양수 가능
전라북도	15. 해양쓰레기 감소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해양쓰레기 수거사업추진(4건, 446.34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안가 해양쓰레기 대청소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16. 5. 31 · 장소 : 고군산 군도(신시도) 해안가 일원 · 참여 : 5개 기관 및 어촌계어업인 · 수거량 : 30톤 -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기관 : 고창, 부안군 · 수거량 : 157.84톤(고창45.84, 부안112) -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기관 : 고창, 부안군 · 수거량 : 215톤(고창35, 부안180)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공유수면 어장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기관 : 전라북도(어장정화선운영) · 수거량 : 43.5톤 <p>※ '16년도에는 '15년 대비 사업비 5억2백만원이 늘어난 17억9천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난해보다 422톤이 늘어난 1,905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임.</p>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해양쓰레기 관리 시행계획에 따른 세부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수거·처리와 목표량 달성 노력 - '16년도 목표량 : 1,905톤(1,795백만원) ○ 조업어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양에 쓰레기투기 금지 등 홍보강화